



CONTENTS

요 약 1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3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 과제 3

제2절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3

제3절 통상 역량 강화 4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5

제1절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고도화 5

1. 한미 FTA 개정협상 안정적 대응 5

2. 대미 통상현안 대응 6

3. 대미 경제협력 강화 6

제2절 대중 실질 경제협력 강화 7

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7

2. 한-중 경제 협력 강화 7

3. 대중 통상현안 해소 7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9

제1절 신남방정책 구현 9

1. 국가별 맞춤형 상생협력 강화 9

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9

3. 협력 기반 조성 10

제2절 신북방정책 구현 10

1. 9-Bridge 추진 본격화 10

2. 중앙아 협력사업 내실화 11

3. 협력기반 조성 11

제3절 전략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11

1. 중동 11

2. 중남미 12

3. EU 12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13

제1절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13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13

2. 수입규제 대응 13

3. 비관세장벽 대응 13

CONTENTS

제2절 WTO 통상분쟁 대응	13
1. WTO 통상분쟁 개요 및 동향	13
2. 우리나라 통상분쟁 대응 현황	14
제3절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15
1.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15
2. 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15
3. 무역구제분야 국제 협력	15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17
제1절 무역 1조불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17
1. 수출입 동향 및 성과	17
2.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추진	17
3. 수출품목의 고도화 및 다변화 추진	17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무역기반 확충	18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	18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18
2.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18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19
4.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9
5. 미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준비	19
제3절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및 국내 보완대책	19
1. FTA 수출 활용 현황	19
2.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 지원	20
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20
4.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20
5. FTA 대국민 홍보 및 이해도 제고	20
6. 정부-민간 간 소통협업 강화	21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23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 과제	25
1.	우리 통상의 그간 성과	25
2.	통상환경의 새로운 흐름	27
3.	우리의 대응 평가	29
제2절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30
1.	美·中과의 통상관계 고도화	30
2.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31
3.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선도	32
제3절	통상 역량 강화	32
1.	통상교섭본부 출범	32
2.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32
3.	통상인력 교육훈련	34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35

제1절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고도화	37
1.	한미 FTA 개정협상 안정적 대응	38
2.	대미 통상현안 대응	41
3.	대미 경제협력 강화	44
제2절	대중 실질 경제협력 강화	48
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48
2.	한-중 경제 협력 강화	49
3.	대중 통상현안 해소	51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53

제1절	신남방정책 구현	55
1.	국가별 맞춤형 상생협력 강화	55
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61
3.	협력기반 조성	63

CONTENTS

제2절	신북방정책 구현	64
1.	9-Bridge 추진 본격화	65
2.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내실화	69
3.	협력기반 조성	73
제3절	전략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74
1.	중동	74
2.	중남미	78
3.	유럽	82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87
제1절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89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89
2.	수입규제 대응	92
3.	비관세장벽 대응	97
제2절	WTO 통상분쟁 대응	99
1.	WTO 통상분쟁 개요 및 동향	99
2.	우리나라 통상분쟁 대응 현황	100
제3절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104
1.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104
2.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05
3.	무역구제분야 국제협력	113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117
제1절	무역 1조불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119
1.	수출입 동향 및 성과	119
2.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추진	122
3.	수출품목의 고도화 및 다변화 추진	127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무역기반 확충	128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	132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132
2.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137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140
4.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44
5. 미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준비	147
제3절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및 국내 보완대책	150
1. FTA 수출 활용 현황	150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 지원	152
3.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	155
4.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159
5. FTA 대국민 홍보 및 이해도 제고	161
6. 정부-민간 간 소통협업 강화	164
부 록	167

CONTENTS

표 차례

〈표 1.1.1〉 연도별 세계 교역 순위	26
〈표 1.1.2〉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26
〈표 1.1.3〉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및 GDP 규모 현황 ('17년 기준)	27
〈표 1.2.1〉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10개국 ('17년 기준)	30
〈표 1.3.1〉 WTO 교육프로그램('17.11)	34
〈표 2.1.1〉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40
〈표 2.1.2〉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경과	40
〈표 2.1.3〉 한미 교역 동향	44
〈표 2.1.4〉 한미 투자 동향	45
〈표 2.1.5〉 산업부장관 주요 회담 인사 및 활동 내용	45
〈표 2.1.6〉 산업부장관 방미 계기 MOU 체결 내용	46
〈표 2.2.1〉 한·중 교역규모변화(2017년 기준, 무역협회)	49
〈표 2.2.2〉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50
〈표 3.1.1〉 한·ASEAN 연도별 무역 현황 (역불, 전년 동기 대비 %)	56
〈표 3.1.2〉 한·ASEAN 국가별 교역 현황(역불), '17년 교역액 순	56
〈표 3.1.3〉 한-인도 교역 현황 (백만불)	57
〈표 3.1.4〉 TASK 센터 주요 기능 (안)	58
〈표 3.2.1〉 한·중아시아 교역 추이('17년)	70
〈표 3.3.1〉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	75
〈표 3.3.2〉 대 중동 교역현황	76
〈표 3.3.3〉 한·중동 투자현황	76
〈표 3.3.4〉 한·중남미 연도별 교역 추이 (백만불, 자료 무역협회)	78
〈표 3.3.5〉 한·중남미 교역 주요 품목	78
〈표 4.1.1〉 최근 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90
〈표 4.1.2〉 對韓 수입규제 현황(2018년 4월 기준)	90
〈표 4.3.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105
〈표 4.3.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106
〈표 4.3.3〉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07
〈표 4.3.4〉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08
〈표 4.3.5〉 품목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08
〈표 4.3.6〉 보조금의 종류 및 의무사항	110
〈표 4.3.7〉 연도별 세이프가드 현황	112
〈표 4.3.8〉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신청현황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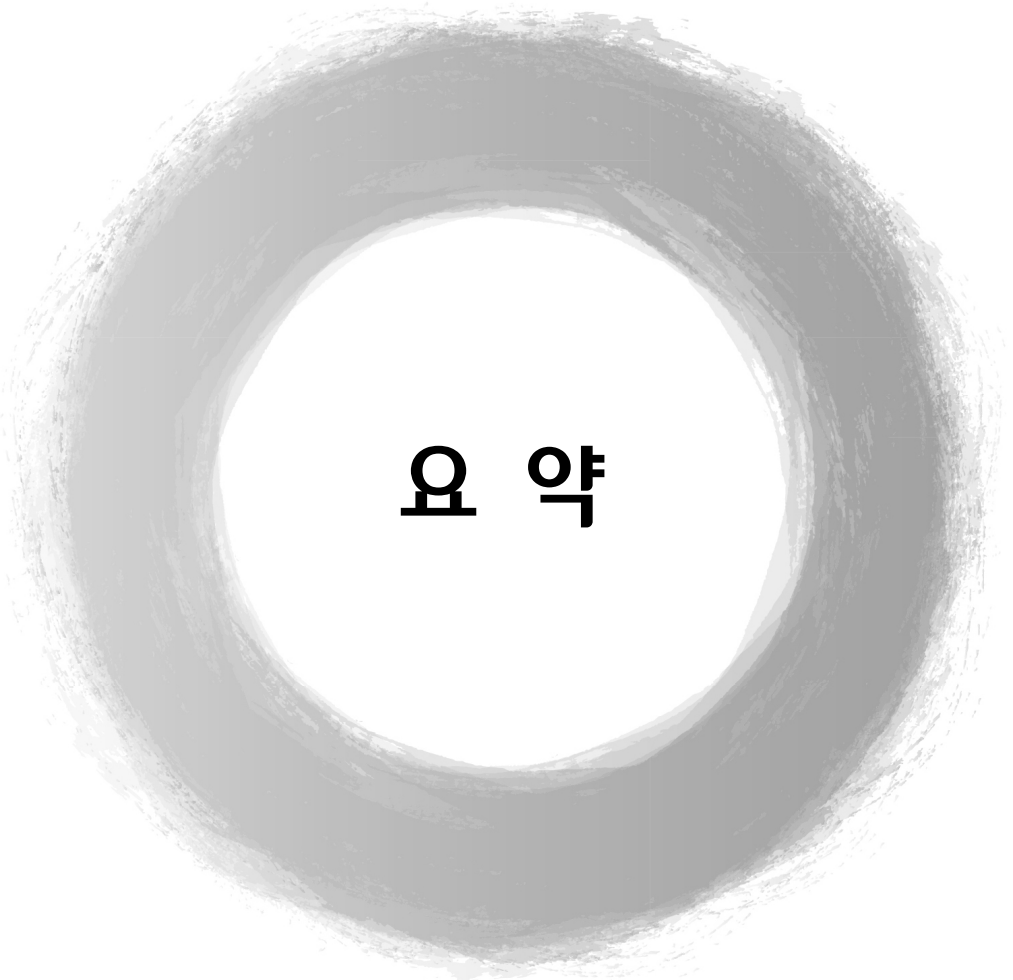
〈표 4.3.9〉 지재산 유형별 신청현황	113
〈표 4.3.10〉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결과	113
〈표 4.3.11〉 역대 포럼주제	114
〈표 5.1.1〉 주요 13대 품목 수출액 및 증가율	120
〈표 5.1.2〉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120
〈표 5.1.3〉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121
〈표 5.1.4〉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 전망	124
〈표 5.1.5〉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 및 구매 (B2C)현황	124
〈표 5.1.6〉 15대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현황	127
〈표 5.1.7〉 참여대학 현황('18년~'20년)	130
〈표 5.1.8〉 국내지역별 전시장 신·증축 계획('17. 12월)	131
〈표 5.2.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132
〈표 5.2.2〉 외국인 투자 실적 (신고기준)	134
〈표 5.2.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135
〈표 5.2.4〉 업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135
〈표 5.2.5〉 유형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136
〈표 5.2.6〉 남북교역 및 북한산 반입 현황	147
〈표 5.2.7〉 거래유형별 현황	148
〈표 5.2.8〉 북한의 대중국 교역	148
〈표 5.3.1〉 대학 FTA 활용 강좌 지원사업 현황('17.12월말 기준)	154
〈표 5.3.2〉 FTA 컨설턴트 수료생 활동현황	154
〈표 5.3.3〉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선정 현황	160
〈표 5.3.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실적	160
〈표 5.3.5〉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연도별 지원 현황	160
〈표 5.3.6〉 '함께하는 FTA' 개요	161
〈표 5.3.7〉 FTA교육 추진 현황	163
〈표 5.3.8〉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 활동 현황	164

CONTENTS

그림 차례

〈그림 1.1.1〉 연도별 GDP, 1인당 GDP(명목)	25
〈그림 1.1.2〉 연도별 우리나라 교역액	25
〈그림 1.1.3〉 선진/신흥시장 GDP 비중(PPP기준)	28
〈그림 1.1.4〉 선진/신흥시장 경제성장률 추이	28
〈그림 1.1.5〉 상품, 서비스 수출 비중 추이	28
〈그림 1.1.6〉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 전망	28
〈그림 1.1.7〉 ASEAN 자동차시장 점유율('16)	29
〈그림 1.1.8〉 한·중·일의 對ASEAN FDI 추이	29
〈그림 1.3.1〉 통상교섭본부 기구도	33
〈그림 3.1.1〉 아세안 경제성장률(%)	55
〈그림 3.1.2〉 인도(브릭스) 성장률 (%)	55
〈그림 3.2.1〉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도	66
〈그림 3.2.2〉 2016년 우리나라 LNG 도입 현황 (만톤, 비중)	67
〈그림 3.2.3〉 2016년 러시아 천연가스 현황	67
〈그림 3.2.4〉 에너지 수송선박 수주 현황	68
〈그림 4.1.1〉 전세계 TBT 통보문 건수	92
〈그림 4.1.2〉 수입규제 대응 종합 체계도	93
〈그림 4.1.3〉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97
〈그림 4.1.4〉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내 비관세조치 DB 화면 ..	99
〈그림 4.3.1〉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111
〈그림 5.2.1〉 외국인투자자 유입 실적 및 추정치	133
〈그림 5.2.2〉 한국의 시장성 및 FTA 경제영토	137
〈그림 5.2.3〉 2018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	138
〈그림 5.2.4〉 12대 신산업 주요 타겟분야 예시	139
〈그림 5.2.5〉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상의 간담회 활동	140
〈그림 5.2.6〉 12대 신산업별 주요 타겟기업 예시	141
〈그림 5.2.7〉 다변화 방안	142
〈그림 5.2.8〉 업종별, 목적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45
〈그림 5.2.9〉 북한산 반입 추이	147
〈그림 5.2.10〉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149
〈그림 5.3.1〉 '17년도 협정별 수출 활용률(%)	150
〈그림 5.3.2〉 '17년도 협정별/기업규모별 수출활용률(%)	151
〈그림 5.3.3〉 '17년도 산업별 수출활용률(%)	151

〈그림 5.3.4〉 FTA 콜센터 1380	152
〈그림 5.3.5〉 FTA 활용(원산지증명서 발급) 리플릿	155
〈그림 5.3.6〉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2008~2017년 합계, 억원)	156
〈그림 5.3.7〉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현황	157
〈그림 5.3.8〉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행사	162
〈그림 5.3.9〉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162
〈그림 5.3.10〉 무역·통상 잡페어	163



요 약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te Paper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요약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에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 과제

- **(그간 성과)** 우리나라는 '04년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 9번째의 무역 1조불 국가('11년), 세계 수출 6강('17년)에 빛나는 통상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 **(통상환경의 새로운 흐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등 통상 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글로벌 산업·교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 **(우리대응 평가)**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시장이 G2에 편중되어 대외 리스크에 취약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수출 품목이 소수 품목에 편중된 점 등이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역시장 다변화와 중소기업 수출 참여 확대, 품목다변화 등 대응이 필요하다.

제2절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 **(미·중 통상관계 고도화)** 미국과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철강 232조 관세 면제 협상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對美 교역·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신뢰관계도 재정립하여 제조업 중심의 단순 분업관계를 협업 관계로 전환하면서 서비스업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특히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진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신남방 정책관련, 경쟁국 대비 유리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RCEP 등 진행 중인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ODA, 상생협력 등을 통한 우호적 진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신북방 정책관련, 한-EAEU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러간 세부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 통상 선도)** 디지털 통상 시대에 맞는 전략과 새로운 규범 논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규범 조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의 비교우위를 발굴·발전을 위해 국내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통상 역량 강화

- **(통상교섭본부 출범)** 2017년 7월 26일 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는 새 정부의 통상역량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무역투자실이 본부에 포함되었다.
-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2018년 3월 30일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었다. 한미 FTA 관련 통상 이슈를 총괄하는 '한미FTA대책과', 수입규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통상법무기획과',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이행을 위해 통상정책국에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한 개방형 인력 충원도 함께 추진 중이다.
- **(통상인력 교육훈련)** 통상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신설되었다. WTO 등 통상 분야 국제기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주요국 현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요약

제1장
세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예외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
·투자정책 추진

제1절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고도화

1. 한미 FTA 개정협상 안정적 대응

-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미측은 한미 정상회담('17.6.30)계기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우리측에 협정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제안하였다. 2017년 8월 22일 개최된 제 1차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2017년 10월 4일 개최된 제 2차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였다.
-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통상절차법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대미통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성적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같은 법 제 7조에 따른 공청회는 11월 10일, 12월 1일 등 2회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외 농축 산업계 간담회(11.22), 제조업계 간담회(11.23)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개정관련 의견수렴을 지속하였다.
-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12.18 통상절차법 제 7조에 의거 국회에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18년 1월 15일 워싱턴 D.C.에서 1차 협상, 1월 31~2월 1일 서울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중심으로, 미측은 자동차 중심으로 각각의 관심분야를 제기하였다. 이어 3월 15일~16일 D.C.에서 열린 3차 협상 및 이어진 통상장관회담/ 실무진간 수시 협의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나간 결과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고 3월 28일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확인하였다.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미측이 관심을 보였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하였으며,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제작사별 25,000대에서 50,000대까지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차원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과 관련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 하였다. 우리측이 관심을 보였던 ISDS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남소방지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무역구제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섬유 일부품목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2. 대미 통상현안 대응

- **(철강 232조)** 미 상무부는 2018년 2월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 대해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 정부와의 교섭 및 미국내 우호세력 대상 아웃리치 등의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으며, 3월 28일 한미 양국은 한국을 관세조치에서 면제하는 것에 합의여, 이전 3개년도 평균 수출물량의 70%에 상당하는 쿼터를 확보하였다.
- **(한미간 수입규제)** 미국은 최근 한국산 후판(17.3.30), 기계구조용강관(18.4.10), 선재(18.5.1)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조치도 부과(1.22)하였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WTO 협정 위배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4일 동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 **(미중간 통상분쟁)** 2017년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대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미 통상법 301조 조사 지시와 함께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했음을 주장하였고, 2018년 4월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대중 제재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중간의 통상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고, 미중 통상갈등의 전개 동향 및 주요국의 대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대미 경제협력 강화

-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계기 양국은 무역확대 및 균형과 투자 증진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산업협력대화'를 통하여 상호투자 및 기업인 지원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동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미 양국은 2018년 4월 상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산업협력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고, 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제2절 대중 실질 경제협력 강화

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기,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부속서 22-가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3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 발효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한 후속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후속협상 개시 합의를 통해 양국은 상호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제1차 후속협상 개최)**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22~2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향후 협상의 목표, 작업반 구성방식, 협상 개최 주기 등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일차적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상호 국내법 및 규제, 개방 정책 및 기체결 FTA 협상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차기 일정을 논의하였다.

2. 한·중 경제 협력 강화

- **(한·중 교역·투자)** 한중 간 교역은 2017년 약 2,4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對中 투자와 중국의 對韓 투자는 2017년 감소세 기록하였다.
- **(한·중 경제협력)** 한중 양국 관계는 사드배치 이후 일부 침체되었으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후 관계 개선 중이다.

특히 정상 방중 계기 산업부 장관은 중국 공업신식화부, 상무부, 국가에너지국 장관과 면담을 통해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이후 한중 FTA 공동위원회 및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협력채널을 재개하였다.

3. 대중 통상현안 해소

- **(대중 통상현안)** 현재 한국기업 배터리 장착 신에너지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롯데마트 영업 정지 및 선양 롯데타운 공사 중단, 단체관광 제한,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등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 **(우리측 대응)** 산업부는 양자·다자 면담 및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해소를 촉구하였다. 현재 2018년 4월 롯데마트 매각이 개시되고, 2018년 1월 북경·산동일부 지역 단체관광이 제한적 허용되고, 2018년 5월 우한·충칭 단체관광이 추가로 제한적 허용된 상황이다.

2018년 3월 최종 발표된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비판정보다 10%p 이상 낮아진 최종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 현재 조사 중인 3건(SM, NBR, 페놀) 및 기타 애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1절 신남방정책 구현

1. 국가별 맞춤형 상생협력 강화

- **(신남방의 가치)** 신남방 지역과 협력을 통해 G2(미국,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협력 파트너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남방 지역과 한반도 주변 4강에 준하는 파트너 관계를 설립할 계획이다.
- **(국가별 상생 협력 방안)** 신남방 국가는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❶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력 국가, ❷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유망국가, ❸ 싱가포르, 태국 등 선도국가로 분류하여 국가별 맞춤형 상생협력 발전을 추진 중이다.

선도시장은 소비재 및 新산업 진출의 Hub化, 주력시장은 산업기반 고도화 및 수출전진기지化, 유망시장은 한국 친화형 산업 협력기반 구축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였다.

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 **(정상 교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2017년 11월, 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통한 상생발전을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였다. 연이어 베트남 다낭 APEC 정상회의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신남방지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우리나라 4대 교역국가인 베트남을 두 번째 국빈 방문하여 베트남 당서기, 국가 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4명의 베트남 지도부와 정상회담 및 면담을 갖고,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 **(고위급 교류)** 산업부 장관은 2018년 3월로 예정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베 산업공동위를 통해 3월 정상순방시 산업·교역·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 MOU 체결(6개) 합의하고, 민간기업 MOU도 합의하였다. 또한, 2018년 2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상공부장관, 전력부장관을 면담하고 신남방협력의 서남아지역 중심국가인 인도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3. 협력 기반 조성

- **(RCEP)** RCEP은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 형성을 목표로 아태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이며, '17.5월 제18차 협상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공식협상과 4차례의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RCEP 정상들은 '17.11월 2018년 RCEP 타결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 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각 참여국의 적극적인 RCEP 추진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인도 CEPA, 한-ASEAN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3차 공식협상은 2017.9.20~21일 서울에서, 제4차 공식협상은 2017년 12월 20~2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품·서비스·원산지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방안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12.8월 채택한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작업계획도 진행 중이다. '17.9월 제14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자유화 가속화를 선언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2절 신북방정책 구현

1. 9-Bridge 추진 본격화

- **(개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전력, 가스, 조선 등 9개 분야에서 한-러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분야별 추진방안)** 전력분야에서는 극동시베리아 및 몽골의 풍부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남·북·러 및 한·중·일로 끌어오기 위한 국가 간 송전망 연결 사업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및 수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러시아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방안 검토, 남북관계 개선 대비 PNG 공동연구 등 러시아와의 전략적 가스 협력 확대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러 조선협력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선박 발주-수주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우리 기업의 러

시아 조선소 현대화 지원, 기자재 공급, 연구 인력 교류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원원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2. 중앙아 협력사업 내실화

-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고위급 교류)** 최근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상당수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정부와 우리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채널 운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국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 **(민간 경제계 교류·향후 방향)** 민간에서도 양국 경제단체 및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에너지 협력을 넘어 섬유, 기계, 의료 등으로 협력 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3. 협력기반 조성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즈스탄)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 1억 8,000만명의 내수시장 등을 보유한 신흥시장이다. 정부는 2016년 10월 한-EAEU FTA 관련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17년 9월 6일 동방경제포럼 계기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EAEU FTA 개시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EAEU FTA 개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EAEU 지역과 에너지·조선·농업 등의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전략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1. 중동

- **(중동의 산업정책 동향)** 최근 중동 각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ICT 육성 등 산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사우디는 'VISION 2030', UAE는 'VISION 2021' 등 중·장기계획을 세워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 **(경제협력 현황)** 사우디와는,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신설하고('17.10.27), 제·에너지, ②스마트인프라·디지털화, ③역량 강화, ④보건·생명, ⑤중소기업·투자의 5대 분야별 40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UAE와는 대통령 순방('18.3.24~27)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에 따라 원전을 마중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였다. 산업부는 중동 주요국들과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중동의 오일머니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투자협력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중남미

- **(중남미 교역 확대)** 對중남미 교역은 5년 연속 하락 후, 중남미 경기호조 등으로 '17년 452억불로 상승하였으며, '87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 '17년 누계신고액 기준 對중남미 투자는 623억불로 주요업종은 금융, 제조 및 광업이고, 對한국 투자액은 52억불로 주요업종은 서비스업 등이다. 본격 산업화 단계로 인프라 수요가 많고, 공산품 수출과 천연자원 수입에 머물던 기존의 교역관계가 고부가가치 파트너쉽으로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
- **(협력기반 조성)** 既 발효된 FTA('04년 칠레, '11년 페루, '16년 콜롬비아) 외에, 현재 추진 중인 한-중미 FTA('18.2월 정식서명 후 국내절차 진행),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TA('18.5월 협상개시선언 예정) 및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멕시코와 신규 FTA체결 효과) 등 주요시장과 무역협정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다방면에서 활발한 성과가 기대된다.

3. EU

- **(한-EU FTA)** 역내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인구 5억의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자 對韓 투자 1위 파트너이다. 제7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9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집행위 통상 집행위원은 관세, 지식재산권 등 이행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한국과 EU가 공동 대응기로 하였다.
- **(개별국과의 경제협력)** EU 개별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불 에너지장관 회담, 제2차 한-불 경제장관 대화를 개최하여, '한-불 에너지자원 협력 의향서', '기관간 원전해체 협력 MOU' 2건을 체결하였고, 신산업 기술협력을 통한 교역 창출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요약

제1장
세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
·투자정책 추진

제1절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수입규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0건에 달하고,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2017년 WTO 통보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접근을 제한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 수입규제 대응

-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왔다. 또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3. 비관세장벽 대응

-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으며, WTO·FTA 등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내에 '비관세조치 DB'를 통해 비관세장벽 현황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2절 WTO 통상분쟁 대응

1. WTO 통상분쟁 개요 및 동향

- 1995년 WTO 출범 이후 540여건의 분쟁이 제기되었고, 이중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을 제소한 분쟁은 18건이며, 우리나라가 제소를 당한 분쟁은 16건이다.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WTO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하고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통상분쟁 대응 현황

- **(한미 세탁기 분쟁)**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2013년 1월)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 상소심을 거쳐 우리나라가 2016년 9월 최종승소 하였으나 미국측이 이행기간 내에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1월 WTO에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하였고, 현재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중재재판이 진행 중이다.
- **(한일 수산물 분쟁)**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취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하였다. 2018년 2월 패널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하였다. 2018년 4월 우리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였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상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미 유정용 강관 분쟁)** 우리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WTO에 제소하였고, 2018년 1월 덤핑률 산정 관련 주요쟁점에서 우리측이 승소한 패널 판정결과가 확정되었다. 향후 미국이 이행을 완료하는 경우,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일 공기압 전송용 밸브 분쟁)**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2015년 8월)를 2016년 3월 WTO에 제소하였다. 2018년 4월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다. 향후 일본 측이 상소하는 경우 상소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불리한 가용정보 분쟁)** 미국 상무부가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계속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이러한 미국의 조치 및 규범·관행을 WTO에 제소하였다. 2018년 5월 패널이 설치되면 정부는 업계와의 협조 하에 분쟁절차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제3절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1.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 **(무역구제제도의 의의)**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 산업 보호수단이다.

2. 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반덤핑/상계관세)**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59건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있었다. 이중 114건(71.7%)의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품목별로는 화학 54건, 종이·목재 27건, 기계·전자 20건, 제철·금속 19건 순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77건, 일본 50건, 미국 29건, EU 28건 순으로 반덤핑 관세가 취해졌다.
- **(세이프가드)** 그간 세이프가드는 총 34건이 제소되었고, 이 중 22건(64.7%)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었다. 1994년 이전에 25건, 1995년 WTO 출범 이후 9건이 제소되었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 화학제품 순이다.
-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 무역행위는 총 362건의 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0건(33.1%)에 대해 수입·제조 금지 등 제재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조사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위반 76건, 수출입 질서저해 65건 순이다.

3. 무역구제분야 국제 협력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연구를 통한 우리 무역구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1989년부터 매년 무역구제 선진국 조사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2001년 이후 현 명칭으로 변경)를 개최한다.
-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0년부터 매년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총 17회의 회의가 이루어졌다. 반면, 한·중 FTA에 따라 무역구제 이행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부터는 FTA 이행 위원회와 정례협력회의를 동시에 개최한다.
- **(한·EU FTA 무역구제 협력작업반)** 2011년 7월 한·EU FTA 잠정 발효로 2003년부터 시작된 EU와의 협력회의를 2012년부터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회의로 대체하여 개최중이다. 2012년 11월 첫 작업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4차례 개최되었다.

-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2009년 10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간 MOU체결 후속조치로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한-베 FTA가 정식 발효에 따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분야 이행위원회를 2016년부터 매년 개최중이다.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요약

제1장
세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에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제1절 무역 1조불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1. 수출입 동향 및 성과

- **(품목별)** 2017년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고, 반도체는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900억불을 돌파하였다.
- **(지역별)** 세계 10대 주요 시장 중 중동 제외한 전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다. 對아세안·베트남·인도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G2 수출 비중 감소('16년 38.5%→'17년 36.8%)로 수출 시장 다변화도 진전되는 양상이다.

2.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추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유망기업 발굴, 수출전문위원(PM) 컨설팅 내실화 등을 통해 2016년 5,000개 내수기업을 지원하여 1,709개사가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17년은 5,690개사를 지원하여 1,829개사가(1,447개사 수출 성공, 272개사 수출 증진) 성과를 창출하였다.
- **(수출바우처)** 2017년 5월부터 1,786억원 수출바우처(산업부·중기부)를 약 1.2만개 기업에게 지급하였다. 올해에는 농림부·해수부·특허청 등 관련 부처로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서비스 메뉴판 보완, 수행기관 확충 등 수출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온라인 수출·무역보험)** 해외 온라인 유통밴더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17년 현재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 금액은 3조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실적(48억불) 및 지원비중(33.1%)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하였다.

3. 수출품목의 고도화 및 다변화 추진

- **(프리미엄 소비재)** 유망 소비재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혁신적인 융합기술 개발 촉진, 소비재와 예술 작품의 협업을 위한 아트콜라보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촉진중이다.

- **(서비스 해외진출)**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2022년까지 세계 10위 서비스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마련(‘17.12.28)하였다.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무역기반 확충

- **(전자무역 인프라)** uTradeHub를 통해 무역全过程의 전자화를 실현하였으며, 2017년 12월 현재 무역업체 등은 연간 6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 **(청년 무역인력)**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추진 중이며, 2017년 기준 대학생 698명(23개 대학) 중 676명이 수료하였다.
- **(전시산업 인프라)** 2011년 KINTEX 제2전시장이 건립되면서 10만㎡를 갖춘 단일 전시장을 확보하여 전시장 면적 기준 세계 20위권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KINTEX, SETEC, 잠실 전시장 등의 증개축·신축 등 전시장 인프라 확충을 논의 중이다.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국내·외 동향)** 2017년 전 세계 FDI 유입실적은 전년대비 2% 감소한 1조 750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국내 FDI 유입실적은 신고기준 2017년 전년대비 7.7% 증가한 229.4억 달러로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하였으며 2018년 1분기에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주요 특징)** 최근 국내 FDI의 특징은 크게 FDI 200억 달러 시대 공고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시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2.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투자환경 평가)** 세계은행 등은 국내 투자환경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 FDI가 견고하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투자환경 개선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외투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주한상의 등과 간담회를 정기 개최하여 소통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 **(외투유치 목표)** 양적으로 300억 달러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200억 달러 이상 유치하고, 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등 12개 핵심산업의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 **(추진방안)** 성과창출을 위한 EU 등 4대 투자유치대상국에 대한 정기적인 IR과 함께 외투 잠재력이 있는 중동 등 3개 지역에 대한 IR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투자분위기 조성 and 유치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함께 하는 통합 IR과 장차관 등 고위급 IR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4개국에 21개소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현지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트라 내에 '해외 M&A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M&A 전주기에 걸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내복귀 지원)** '13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일자리·투자 창출에 기여토록 유턴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5. 미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준비

- 2017년 7월 6일 대통령께서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하여 대북 5대기조와 원칙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경제 기본구상인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부와 각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제3절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및 국내 보완대책

1. FTA 수출 활용 현황

- **(FTA 수출 활용률)** FTA 수출 활용률은 우리 기업의 FTA 관세혜택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정부의 적극적 FTA 활용 지원정책 추진 결과, 2017년도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은 58%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다.

2.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 지원

- **(중소기업 전담 지원)**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하여 FTA종합지원센터, 17개 지역FTA센터, 11개 해외 FTA센터 등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380콜센터를 통한 상시 애로 상담, 맞춤형 현장 컨설팅, 한·중 FTA 특화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FTA대학강좌 및 컨설턴트 교육과정 운영, FTA활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 **(국내보완대책)**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호주/캐나다,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FTA 체결시 수립된 국내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며, 보완대책예산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28.8조원을 집행하였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인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은 2017년초 관련 3개 법률이 시행되고, 기금 관리를 위한 상생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하여 홍보 및 기금 조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4.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 **(지원대상)** FTA 체결 및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 지원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기업은 시설자금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 한도 내 융자(고정금리 2.0%)와 1억 2천만원 한도로 상담(컨설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지원실적)** 2008년~2017년간 총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5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융자로 504억 6천만원, 상담(컨설팅)으로 10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5. FTA 대국민 홍보 및 이해도 제고

- **(대국민 홍보)** 월간지 '함께하는 FTA' 발간,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FTA정책을 상시 홍보하고, 주요 계기에는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기념식', '제1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회 및 무역·통상 잡 페어' 등을 개최하여 FTA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FTA교육·설명회)** 2017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반인 6,966명, 기업실무자 8,531명을 대상으로 FTA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현지기업 및 바이어의 FTA활용 촉진을 위해 콜롬비아, 파나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를 개최하였다.

6. 정부-민간 간 소통협업 강화

- **(국내대책위원회)** FTA의 원활한 체결·비준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7개 정부부처 및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 **(기업간담회·유관기관협의회)** 기업의 FTA 활용 애로 파악·해소, 지원정책 안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찾아가는 FTA 활용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있다.

제 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te Paper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요약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협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에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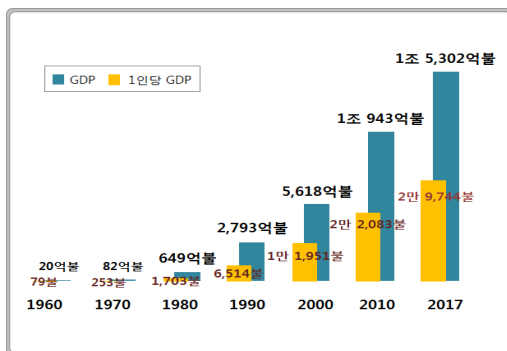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 과제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김준겸

1. 우리 통상의 그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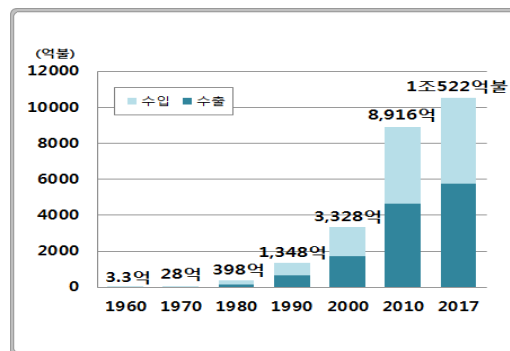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그간 적극적인 통상입국(通商立國)의 노력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철광석, 텅스텐 등의 지하자원과 가발 등 경공업 상품에 의존하던 6~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 육성 이후 자동차·선박 등을 수출하기 시작한 8~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핸드폰·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과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는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0억불('60년)에서 15,302억불('17년)로 765배 성장하는 동안, 우리의 교역규모는 3억불('60년)에서 1조불('17년)로 3,188배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림 1.1.1> 연도별 GDP, 1인당 GDP(명목)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1.2> 연도별 우리나라 교역액



* 자료 : 무역협회

<표 1.1.1> 연도별 세계 교역 순위

순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중국
2	영국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중국	미국
3	독일	영국	일본	일본	일본	독일	독일
4	프랑스	일본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일본	일본
5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영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6	(구)소련	캐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7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홍콩
8	일본	이탈리아	소련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영국
9	이탈리아	(구)소련	사우디	벨기에-룩셈	네덜란드	한국	한국
	한국(68위)	한국(41위)	한국(24위)	한국(13위)	한국(13위)	-	-

* 자료 : WTO

<표 1.1.2>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순위	1961년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2017년
1	철광석	의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	종석	선박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선박
3	생사	가구	가구	선박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4	무연탄	목재류	영상기기	금은및백금	선박	석유제품
5	오징어	어류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6	활선어	음향기기	음향기기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7	흑연	반도체	인조장섬유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8	합판	철강판	철강판	영상기기	합성수지	합성수지
9	미국	레이, 철구조물	컴퓨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철강판
10	돈모	기타섬유제품	선박	철강판	철강판	컴퓨터

*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특히 우리는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FTA 체결'을 추진하여 일약 'FTA 지각생'에서 '우등생'으로 도약하였다. '17년 기준 전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시장과 연결된 '통상 고속도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 9번째의 무역 1조불 국가('11년), 세계 수출 6강('17년)에 빛나는 통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우리의 FTA 시장 네트워크는 칠레·페루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며, 주요 교역국 중 미국·중국·EU·ASEAN 등의 거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표 1.1.3>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및 GDP 규모 현황 ('17년 기준)

FTA 상대국	발효일자	GDP규모 (단위:USD, '16)	전세계 GDP대비 FTA체결국 GDP 비중 (한국 GDP 비중 1.9% 포함)
칠레	2004.04.01	234.903	1.3%
싱가포르	2006.03.02	-	-
EFTA	2006.09.01	1,058	1.4%
ASEAN	2007.06.01	2,555	3.4%
인도	2010.01.01	2,250.99	3.0%
EU	2011.07.01	16,518.72	22.0%
페루	2011.08.01	180.291	0.2%
미국	2012.03.15	18,561.93	24.7%
터키	2013.05.01	735.716	1.0%
호주	2014.12.12	1,256.64	1.7%
캐나다	2015.01.01	1,532.34	2.0%
중국	2015.12.20	11,391.62	15.1%
뉴질랜드	2015.12.20	179.359	0.2%
베트남	2015.12.20	-	-
콜롬비아	2016.07.15	274.135	0.4%
15개 (52개국)		56,729.650	77.3%

2. 통상환경의 새로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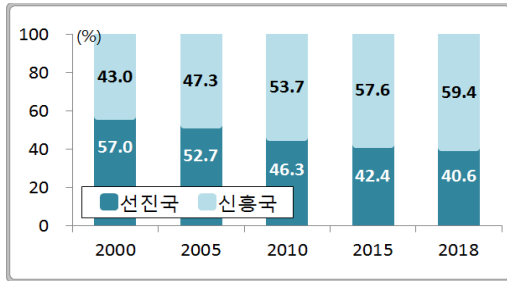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 안주해 있기에는 우리가 당면한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이 녹록치 않다. 보호 무역과 자국우선주의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더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변화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① 신흥국으로의 중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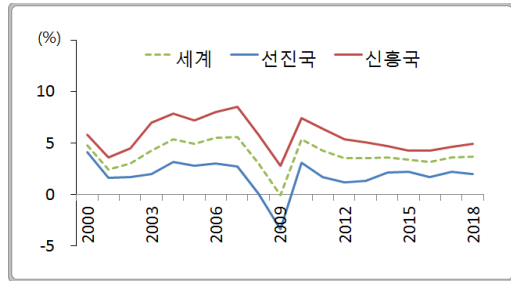
최근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높은 성장세의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시장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1.1.3> 선진/신흥시장 GDP 비중(PPP기준)



* 자료 : IMF

<그림 1.1.4> 선진/신흥시장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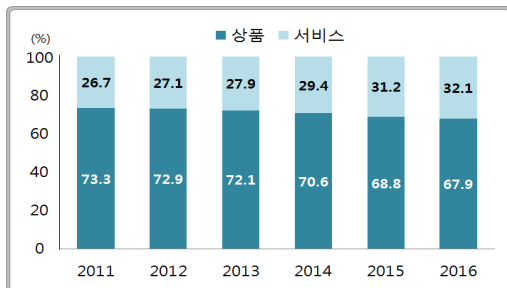
② 보호무역 확산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양극화, 실업 등에 대한 불만이 Brexit('16.6), 미국 대선('16.11) 등의 정치적 이벤트를 거치면서 확산되었고,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 등의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의 TPP 탈퇴, WTO TiSA(서비스무역협정), EGA(상품무역협정) 등 다자·복수국간 협정 정체 등으로 인해 다자 체제에 기반한 무역자유화의 동력도 약화된 상황이다.

③ 4차 산업혁명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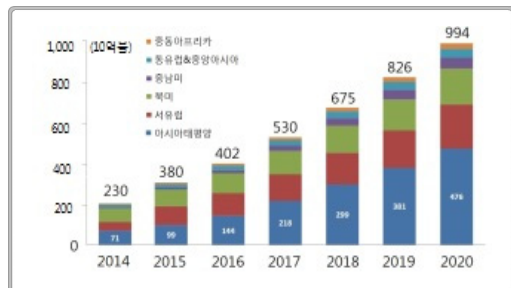
이에 더해 인공지능·빅데이터·5G 등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글로벌 산업과 교역의 구조를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과 함께 산업·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인터넷 및 인터넷 기반기술이 상품·서비스의 주문·생산·배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무역)'도 급증하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림 1.1.5> 상품, 서비스 수출 비중 추이



* 자료 : WTO

<그림 1.1.6>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 전망



* 자료 : Accenture(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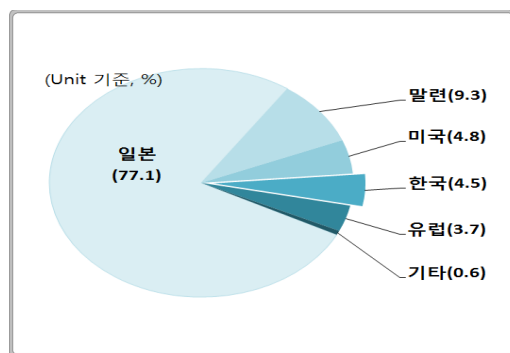
(2) 주요국 대응

각국은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를 주도하거나, 이에 대응해 긴밀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도 각각 아베노믹스·新동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대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인구 20억의 거대 시장인 ASEAN과 인도는 글로벌 생산·소비 성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Make in India’ 등의 자국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3. 우리의 대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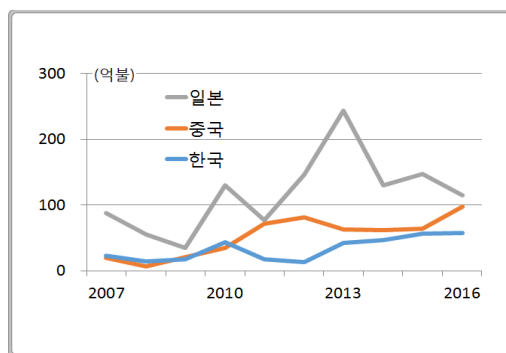
우리가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왔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간 수출 주도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으나, 수출 시장이 G2(美·中)에 편중되어 있어 대외 리스크에 취약하고, 새로운 시장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美·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17년 기준 36.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교역시장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ASEAN·인도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신흥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림 1.1.7> ASEAN 자동차시장 점유율('16)



* 자료 : 자동차산업협회

<그림 1.1.8> 한·중·일의 ASEAN FDI 추이



* 자료 : ASEAN ASEANstats (Flow 기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비해 우리 통상구조가 너무 뒤틀려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수출이 소수 주력품목에만 집중되어 있고, 과도한 국내 규제로 新산업 창출이 지연되고 있어 자칫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실기할 우려도 있다. 특히 세계교역의 중심이 소비재·서비스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소비재·서비스 수출 비중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 소비재 수출비중('16, % UN Comtrade) : (중)29.2 (독)27.3 (일)19.6 (미)17.3 (한)13.4

* 서비스 수출비중('16, % WTO·한은) : (미)50.3 (일)26.2 (독)20.0 (한)15.3 (중)10.7

제2절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김준겸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 조직을 강화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포용적 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 해 나가고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22년까지 세계 수출 4강으로 발돋움 하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1. 美·中과의 통상관계 고도화

미국과 중국은 정치·외교적 중요성만큼이나 경제적으로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두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적 리스크에는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국가와의 양적인 교역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양국과의 통상 관계를 질적으로 고도화 해 나가야 한다.

<표 1.2.1>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10개국 ('17년 기준)

순위	국가명	수출액 (억불)	비중 (%)
전체		5,737	100
1	중국	1,421	24.8
2	미국	686	12.0
3	베트남	478	7.9
4	홍콩	391	6.8
5	일본	268	4.7
6	호주	199	3.5
7	인도	151	2.6
8	대만	149	2.6
9	싱가포르	117	2.0
10	멕시코	109	1.9

(1) 미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한미 양국은 '18년 3월 28일 양국 통상장관 명의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 협상을 연계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농산물 추가 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핵심 민감분야(red-line)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고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 ISDS 관련 투자자남소 방지 요소 반영 등 한미 양측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한편, 美측철강관세 조치에 대한 국가면제를 확정지음으로써 對美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앞으로는 안정화된 한-미 통상관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美 현지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LNG·원유) 도입, 양국 기업 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협력 등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혁신 기술 역량을 활용해 자율차, 로봇, 바이오헬스 분야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2) 對中 신뢰관계 재정립

중국과의 제조업 중심 단순 분업관계를 긴밀한 협업관계로 전환하고, 협력 분야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장함으로써 對中 경제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8.3월 개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2.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1) 新남방정책 추진

현재 진행중인 RCEP*,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면 아세안 개별국과 양자 FTA도 추가 체결해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ASEAN 역내 소득 수준이 1,000불대에서 50,000불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성장단계와 시장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ODA, 상생협력 등을 통한 3P(People·Peace·Prosperity)의 비전 실현 및 우호적인 진출 환경을 조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 간 무역 자유화 논의

(2) 新북방정책 추진

한-EAEU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체결해 러시아의 유망한 상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7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천명한 '9개의 다리(9-bridge) 전략'을 중심으로 한 對러시아 협력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해빙되어 개발 중인 북극항로를 통해 실질적인 통상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선·에너지(가스)·해운 분야에서의 한국-러시아 간 세부 협력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선도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디지털 통상 시대에 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새로운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별로 파생하는 국제규범을 조화 시키기 위해 주요 협력국가들과의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 우리의 비교우위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통상 역량 강화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신현우

1. 통상교섭본부 출범

새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7월 26일 정부 조직 개편이 시행되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특수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편의 폭은 최소화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등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 추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 내용은 모두 포함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2013년 조직 개편 당시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분리되어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던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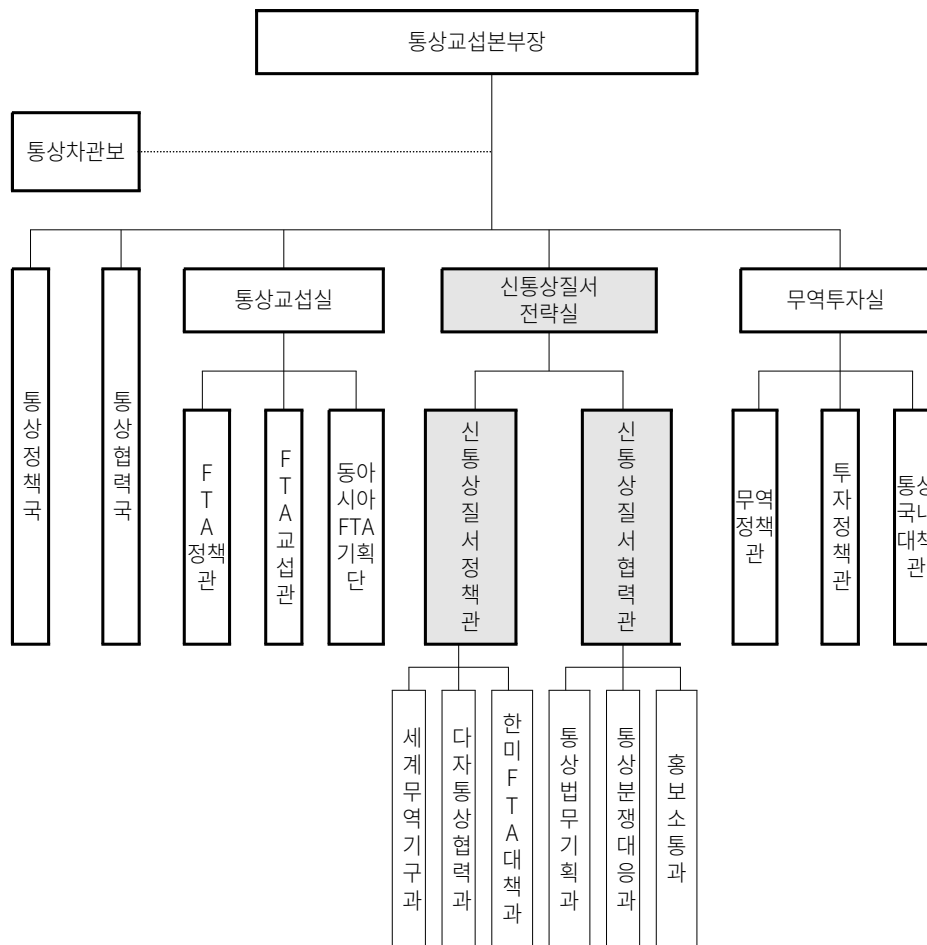
통상교섭본부의 부활은 통상역량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장관(Trade Minister)으로서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덧붙여 ‘무역투자실’이 본부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무역, 외국인 투자 관련 이슈와 통상 기능을 융합해 성과를 극대화해야하는 과거 통상교섭본부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통상교섭본부의 출범은 정부가 통상 정책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이후 중요 통상 현안에 범부처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의 변화는 기존 FTA 확대 중심의 통상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조직·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범정부 통상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30일에는 ‘신통상 질서전략실’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 인력은 총 54명이 보강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설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하부기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한미 FTA 관련 통상 이슈를 총괄하기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對韓 수입규제에 대응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통상법무기획과'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였다. 또한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의 인력 보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對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그림 1.3.1> 통상교섭본부 기구도



새로운 통상 업무가 국제법·통상규범, 디지털경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신설 조직은 민관의 역량을 모두 결집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력 충원을 지향하였다. 실장과 국장은 공모·개방직으로

지정하여 타 부처,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실무자도 유관 7개 부처로부터 전문 인력을 파견 받도록 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 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계획되었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통상인력 교육훈련

조직·인력 확충과 동시에 통상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하였다. 통상 직무는 국제 규범의 큰 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상대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성 확보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프로그램은 미래의 통상 전문가를 꿈꾸는 실무 인력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WTO 등 통상 분야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자 글로벌 신산업 흐름을 질적·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협상 참관 등 현장을 경험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 2차례에 걸쳐 WTO,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1.3.1> WTO 교육프로그램('17.11)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WTO 원칙	규범 (AD, SCM, SG)	상품 (양허)	WTO 회의 참관	모의재판
상품 (GATT)		원산지		
상품 (농업)	서비스	정부조달	분쟁해결	특강
상품 (NTM)	지재권	국제회의 실무	분쟁사례 case study	교육 강평
국제회의의 영어	국제회의의 영어	협상 시뮬레이션		

제 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1절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고도화

미주통상과 사무관 조진화

‘17.6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 계기로 양국은 무역확대 및 균형과 투자 증진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산업협력대화를 통하여 상호 투자 및 기업인 지원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미 FTA 재협상 관련 한미 양국간 향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동 정상회담은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협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창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 투자환경에 대한 세일즈를 적극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우리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과 기술력 강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하는 해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에너지 및 투자 4차 산업혁명 등 양국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17.8월, 10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두차례 개최를 거쳐, ‘18.1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어 양국은 ‘18.3월까지 두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협상과 8차례의 통상장관간 회담을 개최하는 등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협상 대표단은 3월 28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이른다. 또한, 미국 USTR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관세부와 대상에서 한국에 대한 영구면제를 확보하였다. 동 합의는 5.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의 조기타결과 철강 232조 국가면제로 대미 통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 되었으나, 미국의 철강 232조 관련 관세부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부와 계획 발표,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및 중국의 보복조치 시행 등으로 인해 미중간 통상갈등이 본격화되고, 그 결과 국제 교역환경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교역 및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 및 발효, 철강 쿼터 배분 등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요약

제1장
세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에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
·투자정책 추진

1. 한미 FTA 개정협상 안정적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대책과 사무관 이디도

(1)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17.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철강 분야 등의 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즉각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정협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17.7.13일 Lighthizer USTR 대표는 한미 FTA의 개정(amendment) 또는 수정(modification)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미 FTA 협정문 제 22.2조에 근거하여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측에 발송하였다. 이에 양측은 ‘17.8.22. 서울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는 한미 양측이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개정협상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17년 9월, 미측이 한미 FTA 폐기통보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통상교섭 본부장이 방미, 9.20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10.4 우리측 요청에 따라 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후 우리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2)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17.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제조업 추가개방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기존 한미 FTA로 제조업 개방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잔여 관세율도 낮아 추가적인 시장 개방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정량적인 효과 이외에도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안정적인 대미통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성적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공청회는 11.10(금), 12.1(금) 등 2회에 거쳐 진행되었다. 제 1차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국익최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농업분야 시장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 설명해나가겠다는 원칙을 표명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 폐기, 피해보상 대책 우선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제 2차 공청회에서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의 제조업부문/농업부문 영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한 농축산업계는 농축산물 추가시장 개방 불가, 한미 FTA 폐기 및 추가적인 피해보완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참석한 학계에서는 제조업/서비스 분야의 이익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협상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거친 공청회 이외에 농축산업계 간담회(11.22), 제조업계 간담회(11.23)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개정 관련 의견수렴에 진력하였다.

(3)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12.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국회 산자중기벤처위원회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국회보고 이후 '18.1.5 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제 2차 협상('18.1.31~2.1)까지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중심으로, 미측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의 관심분야를 제기하였으며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3.15일~16일에 D.C.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으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3차 협상 종료 이후에도 8회에 거친 통상장관간 회담 및 유선접촉 및 실무기간 수시 협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좁혀나간 결과, 3.24(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3.28(수) 양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이후 4.16~24 문안협의 및 법률검토를 거쳐 개정 협정문 문안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였다.

(4)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협상 결과, 미측이 관심을 보였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하였으며,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제작사별 25,000대에서 50,000대까지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과 관련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및 보완에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관심을 보였던 ISDS 관련해서는 투자자 남소방지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무역구제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섬유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으로 설정한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였으며,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측에 필요한 수준으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등에서 실리를 확보하였다.

<표 2.1.1>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구분	분야	주요 내용
미측관심	화물자동차	▪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21년 철폐 → '41년 철폐)
	자동차 안전기준	▪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확대(2.5만대 → 5만대) ▪ 미국산 차량 수리용 부품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2에 근거하여 既 인정 중
	자동차 환경기준	▪ 차기기준('21-'25) 설정시 미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 휘발유車 배출가스 세부 시험절차/방식 美와 조화
우리측 관심	ISDS	▪ 투자자의 ISDS 제도 남용 방지 요소 반영
	무역구제	▪ 현지실사 절차규정 신설, 덤핑/상계관세율 산정내역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원산지	▪ 일부 원료품목 역외산 사용 허용토록 원산지기준 개정
이행 이슈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 합치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보완

<표 2.1.2>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경과

일자	주요 경과
'17.6.30	▪ 한미 정상회담
'17.7.13	▪ Lighthizer USTR 대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요청 서한 발송
'17.7.21	▪ 장관, USTR 서한 답신 발송
'17.8.22	▪ 제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9.1	▪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폐기 검토' 외신 보도
'17.9.20	▪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D.C.)
'17.9.21	▪ 통상교섭본부장, 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제안 서한 발송
'17.10.4	▪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11.10	▪ 한미 FTA 개정관련 제 1차 공청회 개최
'17.11.22	▪ 한미 FTA 개정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17.11.23	▪ 한미 FTA 개정관련 제조업계 간담회 개최
'17.11.30	▪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17.12.1	▪ 한미 FTA 개정관련 제 2차 공청회 개최
'17.12.18	▪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18.1.5	▪ 한미 FTA 제 1차 개정협상 개최
'18.1.31-2.1	▪ 한미 FTA 제 2차 개정협상 개최
'18.3.15-16	▪ 한미 FTA 제 3차 개정협상 개최(3.15~16) ▪ 한미 통상장관회담(3.15)
'18.3.23	▪ 한미 통상장관회담
'18.3.26	▪ 통상교섭본부장 협상결과 기자회견(서울청사)
'18.3.28	▪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 발표, 원칙적 합의 확인

2. 대미 통상현안 대응

(1) 미국의 철강 232조 관련 조치 및 우리측 대응

통상법무기획과 사무관 조무경

미 상무부는 2018년 2월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상무부의 권고안은 세 가지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첫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하는 안(이하 1안), 둘째, 12개국(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하 2안), 셋째, 모든 국가 대상으로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쿼터를 설정하는 안(이하 3안)을 백악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한국이 2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미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¹⁾, 상·하원 의원²⁾, 주 정부 인사³⁾ 및 미국 제조업·농축산업계⁴⁾ 등을 대상으로 우호세력 접촉(아웃리치)을 집중 전개하였다. 동 아웃리치에서 ①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⁵⁾, ②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경제에 기여⁶⁾하고 있으며, ③ 국제공급과잉 해소 노력⁷⁾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⁸⁾했다. 또한, 철강 232조 조치가 철강 수출국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등 미국 내 연관산업과 미국 소비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 정부는 3.월 9일 당초 한국이 포함되었던 12개국을 대상으로 6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동 발표시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

- 1) 게리 콘 (Gary Cohn)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 2) (상원) 오리인 해치(Orin Hatch), 조니 언스트(Joni Ernst), 팰로버츠(Pat Roberts), 댄 설리번 (Dan Sullivan), (하원) 피터 로스 캄 (Peter Roskam) 등
- 3) 피터 릭켓츠(Pete Ricketts) 네브래스카 주지사, 그레그 애보트(Gregg Abbott) 텍사스 주지사 등
- 4) (업계) 톰 도너휴(Tom Donohue) 미 상공회의소 회장, 조슈아 볼튼(Joshua Bolten) BRT 회장, 육류협회(NAMI), 곡물협회(USGC), 축산업협회(NCBA) 대표 등, (싱크탱크)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헤리티지 전회장 등
- 5) 대미(對美) 철강수출 감소추세(만 톤) : ('14) 497 → ('17) 340 ['14년 대비 △31.5%]
한국산 철강재 미국 시장 점유율(%) : ('14) 4.6 → ('17) 3.5 ['14년 대비 △1.1%p]
- 6) 미국 현지 투자(57억 달러)를 통해 3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12개 제재대상국 중 유일하게 자동차 현지 공장을 가동 중
- 7) '13~'16년간 아시아 조강설비가 951만 톤 증설된 반면, 한국은 392만 톤 감축
- 8) 대미(對美) 수출품목 중 중국산 소재 사용비율은 2.4%에 불과하며, 한국의 대중(對中) 철강 수입은 '17년 전년대비 21% 감소

(USTR)와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동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상기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미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이 결과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철강 232조 관세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양국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 ~ 2017년 3개 년간 대미 평균 수출물량의 70%에 상당하는 쿼터를 확보하였으며, 동 합의는 2018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 한미간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근형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7년 10월 31일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 부과 등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21일 세탁기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TRQ 방식) 부과 등의 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2일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권고안을 일부 수정한 후 승인하였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의 승인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였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최대 50%, 태양광에 대해서는 최대 30%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측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였으며, 양국은 2월 1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동 양자협의를 우리측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근거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fair trade)를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의 보상 의무(제8.1조)와 피조치국(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2월 7일에 조치를 발효하였으며, 우리측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월 6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근거하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동 통보문에서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8억불(세탁기 1.5억불, 태양광 3.3억불)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4일 동 조치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새로운 품목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신규 부과하거나, 기존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품목에 대한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품목으로는 후판(2017.3.30), 기계구조용강관(2018.4.10), 선재(2018.5.1) 등이 있으며, 재심을 통해 관세가 지속되거나 증가된 품목으로는 일반강관(2017.12.1), 송유관(2018.1.4), 유정용강관(2018.4.12) 등이 있다. 한편, 대구경 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도 신규로 개시(2018.2.12) 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자적으로는 특히, 4월 24일 한미 산업장관 회담(백운규 산업부 장관-월버 로스 美 상무부 장관) 등 계기를 통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의 자제와, 국제통상규범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다자적으로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4.23), 반덤핑 위원회(4.25) 등 계기를 활용하여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관행 및 조치가 WTO 관련 협정 위배소지가 있다고 보고, 2월 14일 동 사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3) 미-중간 통상분쟁 및 우리 대응

미주통상과 사무관 유의택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을 예고해 온 바 있다. 최근 미-중간 통상 분쟁은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작으로, 철강 232조 조치, 그리고 미국의 對중국 301조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301조 조사의 결과로 미-중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국의 對중국 301조 조사는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美 무역대표부(이하 USTR)에게 ‘중국의 지적권 침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메모랜덤 서명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이후 USTR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18년 3월 마침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결과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투자 제한, WTO 제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4월 3일 미국은

중국산 1,300여 제품에 대한 500억불 규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4월 4일, 중국은 미국산 106개 제품에 대한 동등한 규모(500억불)의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4월 5일 미국은 다시 1,000억불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301조를 둘러싼 양국의 통상 분쟁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미-중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동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은 세계산업연관표(WIOD) 정량 분석을 통해 對中 수출이 △1.1억불, 對美 수출 △0.9억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업종별 협·단체들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협·단체들은 對中 수출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자동차·기계·철강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되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對美 수출의 경우에도 핵심 수출 업종이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구조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통상갈등의 전개 동향, 그리고 EU, 일본 등 주요국의 대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중의 일련의 조치가 수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와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 소통 체계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다자 채널에서의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미-중에 집중된 우리 수출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다변화 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3. 대미 경제협력 강화

미주통상과 사무관 노진만

(1) 개요

한미 양국은 산업,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걸쳐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한미 FTA 체결이후 한미 양국은 상품 서비스 교역에서 관세 및 규제장벽을 낮추고 공통의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이후 한미 양국의 교역은 상품 교역은 20%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였다.

<표 2.1.3> 한미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무역협회)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韓 → 美	562	585	621	703	699	665	686
美 → 韓	446	433	415	453	440	432	506
교역량	1,008	1,018	1,036	1,156	1,139	1,097	1,192

(2) 한미간 투자현황

투자 측면에서도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 역시 3배 증가하였다. 한국기업들은 대미 투자를 통해 한미 FTA 체결이후 약 1만명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근로자 지불하는 평균임금도 91,000불에 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2.1.4> 한미 투자 동향

(단위 : 억불, 수출입은행)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누계
對美투자	73	57	58	58	68	129	153	927
對韓투자	4	12	16	18	23	13	12	305

(3)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

최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국가면제 및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인 만큼 양국간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간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미 및 미 정부인사 방한 계기에 상무장관회담 및 에너지장관회담 개최, 양국간 차관보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에너지정책대화’ 정례적 개최, 고위급 협의채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과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미간 산업협력은 기본적으로 양국 기업 중심의 민간협력 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 투자,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간 협력은 유망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계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뉴욕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미 양국간 미래 지향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표 2.1.5> 산업부장관 주요 회담 인사 및 활동 내용

정 부	정·재계	싱크탱크, 국제기구	투자유치, MOU 등
▶월버 로스 상무장관	▶뉴트 킹그리치 前 하원의장	▶존 햄리 CSIS 소장	▶투자유치 라운드 테이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토마스 도나휴 美상의 회장	▶프레드릭 캠프 Atlantic Council 회장	▶(MOU) 산업부-IDB / 전품연-메릴랜드大한수원-아르곤研
▶론다 슈미트라인 USITC 위원장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루이스 모레노 IDB 총재	▶지상사간담회

4.18(수) 뉴욕에서는 금융·IT(EMP, WeWork), 바이오(Pfizer 등), 항공(Boeing 등), 석유화학(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비롯,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이 참가하는 투자유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3.1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였고, 나머지 기업들에게서도 0.9억불의 투자의를 확인함으로써, 1분기에 조성된 미국발 대한투자 증가세를 '18년 하반기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19(목)부터 4.24(화)까지 워싱턴에서는 미국 정부 및 재계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로스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첨단산업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산업협력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신소재, 원전해체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IDB와 MOU를 체결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였으며, 전자부품연구원과 메릴랜드 대학간 MOU를 통해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배터리 등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전해체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아르곤 연구소간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양국간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1.6> 산업부장관 방미 계기 MOU 체결 내용

MOU	주요 내용
스마트빌딩 에너지저장장치	■ 중남미 국가에서 협력 확대, 실증 사업 추진(산업부-IDB) → 한국형 에너지 산업의 해외(중남미 등) 진출 교두보 마련
에너지신소재 차세대배터리	■ 인력교류/연구내용 교환/공동연구개발(전자부품연구원-메릴랜드대) → 미국 대학의 우수 원천기술과 한국 연구기관의 상용화기술 역량 결합으로 시너지 창출 및 기술사업화
원전해체	■ 인력교류/정보교환/공동연구개발(한국수력원자력-아르곤연구소) → 파견교육, 해체현장 실습참여 통해 국내 해체 역량 강화

아울러 토마스 도나휴 미상공회의소 회장, 뉴트 킹그리치 전 하원의장과의 면담 계기에 양국 기업의 교역 투자환경에 있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교역확대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교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및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상관 회담에서 한미간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국기업들은 양국간 경제협력 성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서, 지난 2011년 舊 지식경제부와 미 에너지부가 체결한 '한미 청정에너지 공동기술개발 이행약정'과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 에너지부장관이 공동 발표한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수소연료 전지차 실증, 에너지효율 분야 공동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화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도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양국간 에너지 협력 확대방안 논의를 위해 에너지 유통 및 공급사, 발전사, 자원개발업체, 태양광·ESS 등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에너지업계와 연구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미 에너지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동 행사에서 에너지 교역 증진 인프라 투자확대 에너지 기술 등 3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집중논의하였으며 인프라 투자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인프라 협력과 관련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미 에너지협력 컨퍼런스 >

- ◆ 일시/장소 : '17.4.21(금), 8:30-14:00(현지시각) / 헤리티지 재단(워싱턴 D.C.)
- ◆ 참석 : 산업부 2차관, 美에너지부 차관보 대행, 헤리티지재단 시장자유화 및 규제개선 센터장, 양국 주요 에너지기업* 대표 등 100여명
- * (韓) 가스공사, 한수원, 남동발전, SK 에너지, LS 산전, 두산그리드테크 등
(美) ExxonMobil, GE power, GE Hitachi Nuclear Energy, AES, Advanced Power 등
- ◆ 주관 : 에너지경제연구원·헤리티지 재단 공동 주관

또한 2017년 9월에는 미 기업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가스컨퍼런스 계기에 한미 에너지산업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가스 분야에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미 에너지부와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개최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연료전지 분야 등 에너지 기술파트너십을 점검함과 동시에 원전해체 등 양국간 협력 가능분야를 논의하였다.

에너지 분야의 양국간 교역확대와 관련하여서도 2017년 부터 한국가스공사와 미국 셰니에에너지(Cheniere Energy, 사장 Jack A. Fusco)의 LNG 장기 매매계약에 따라 2036년까지 20년간 280만톤의 LNG를 도입할 것이며, 이는 종래 중동 중심의 LNG 공급선을 다변화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기업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 협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전통에너지 개발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중이다.

제2절 대중 실질 경제협력 강화

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사무관 조민지

(1) 후속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기,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부속서 22-가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3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 발효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한 후속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시 합의는 한중 FTA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서비스·투자 전체에 대해 중국이 최초로 진행⁹⁾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후속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 정부는 2016년 4~10월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11~12월간 동 연구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5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9) 중-홍콩 CEPA는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non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였으며, 그 외 중미 BIT 등도 투자 범위로만 한정되어 있다.

(2) 제1차 후속협상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22~2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향후 협상의 목표, 작업반 구성방식, 협상 개최 주기 등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일차적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상호 국내법 및 규제, 개방 정책 및 기체결 FTA 협상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차기 일정을 논의하였다.

(3) 국내외 의견수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개시 전후로 정부는 대국민 공청회 이외에도 정부,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2018년 1월 29일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에 대비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하여 유관 기관,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3월 6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주요 서비스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 업종별 중국 진출 현황, 계획 및 한중 후속협상에 대한 요청사항을 실무급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4월 18~19일간 현지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후속협상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 한-중 경제 협력 강화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김보연

(1) 한 · 중 교역 · 투자관계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우리의 중요한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양국 교역은 2017년 말 약 2,40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흑자규모는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2016년 375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7년 세계 경기 회복으로 2017년 44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2.2.1> 한·중 교역규모변화(2017년 기준, 무역협회)

(단위: 억불, () 증가율%)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통계	총 계	1,410 (-16.3)	1,884 (33.6)	2,206.2 (17.1)	2,151.1 (-2.5)	2,289.2 (6.4)	2,353.6 (2.8)	2,273.7 (-3.4)	2,114.1 (-7.0)	2,399.8 (13.5)
	對中수출	867.0 (-5.1)	1,196 (34.8)	1341.9 (14.8)	1343.2 (0.1)	1,458.7 (8.6)	1,452.8 (-0.4)	1,371.2 (-5.6)	1,244.3 (-9.3)	1,421.2 (14.2)
	對中수입	542.5 (-29.5)	716 (31.9)	864.3 (20.8)	807.9 (-6.5)	830.5 (2.8)	900.8 (8.5)	902.5 (0.2)	869.8 (-3.6)	978.6 (12.5)
	무역수지	324.6	453	478.6	535.4	628.2	552	469	375	443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투자대상국이다. 2016년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약 5만 6천건이며, 투자액수도 약 565억 달러(신고기준)로 전체 해외투자의 약 1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7년 양국 관계 침체로 중국의 對韓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한국의 對中 투자 역시 소폭 감소하였다.

<표 2.2.2>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억불, 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中→韓	4.1 (616건)	6.5 (403건)	7.3 (512건)	4.8 (402건)	11.9 (525건)	19.8 (685건)	20.5 (770건)	8.1 (148건)
韓→中	44.1 (2,431건)	48.0 (2,332건)	70.2 (1,961건)	47.7 (1,977건)	38.0 (1,718건)	43.9 (1,750건)	40.0 (1,681건)	37.1 (389건)

* 자료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신고기준)

(2) 한 · 중 경제협력 현황

한중 양국 관계는 사드 배치 이후 일부 침체되었으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위축되었던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강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 부처간 협의채널이 재가동 되기 시작하였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으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정상 방중 계기에 중국의 공업신식화부, 국가에너지국 및 상무부와 각각 장관 면담을 가지고,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한중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공업신식화부와는 제3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생태산업단지와 관련한 협력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다. 국가에너지국과는 한중 간의 전력 계통 연계 및 한중일 3국 간의 LNG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중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국 상무부와는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양국 간의 서비스 교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로 하였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양국 지방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산업부와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 중 하나인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교류회의(3.14) 개최를 시작으로, 한중 FTA 공동위원회(3.22)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3.22)가 개최되었고, 한중 국장급 통상협력협의회(3.26)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국장급 협의회(3.29)도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채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對中 경영에 있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자·다자 면담 등 계기에 중국 정부와 만나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왔으며, 고위급

서한 발송 등을 통해서도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18.3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방한 시 중국측은 우리기업 애로 해소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성과 도출을 위해 협의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대중 통상현안 해소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김보연

對中 통상 현안으로는 △한국기업 배터리 장착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외, △롯데마트 영업정지 및 선양 롯데타운 공사 중단, △단체관광 제한,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등의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상 차원에서 동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및 양제츠 정치국 위원 방한 계기 우리 정상 예방 시에도 동 내용에 대해 양국 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정상 방중계기 개최된 산업부-中 공업신식화부, 상무부와의 면담 시에도 관련 내용을 제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촉구하였으며, 한중 통상협력협의회·한중 산업장관회의 등 재개되고 있는 협력채널과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 양국 정부간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2018년 4월 중국 내 롯데마트의 매각이 개시되고, 2018년 1월에는 북경 및 산둥성 일부에서, 2018년 5월에는 우한·충칭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단체관광객 모객 및 송출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는 2018년 5월 현재 총 15건으로 우리나라 품목 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중이며, 1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고, 설탕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중에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개의 품목(SM, NBR, 페놀)에 대해서 산업부는 고위급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호판정을 요청 중이며, 현지 공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업계와 공조하여 보다 우호적인 판정을 끌어내기 위해 지속 대응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최종 판정이 발표된 MIBK의 경우, 산업부와 업계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하여 예비판정 시 보다 10%p 이상 낮아진 최종 관세율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에 대해 중국 정부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요약

제1장
세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제 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1절 신남방정책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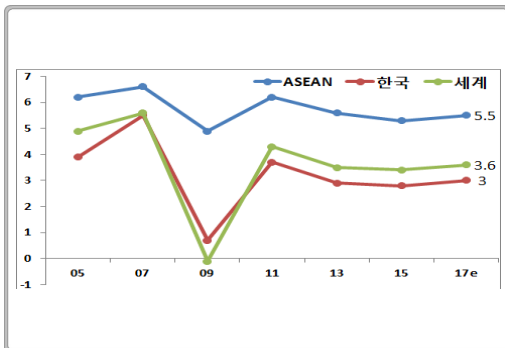
신남방통상과 일동(대표 김진수 서기관)

1. 국가별 맞춤형 상생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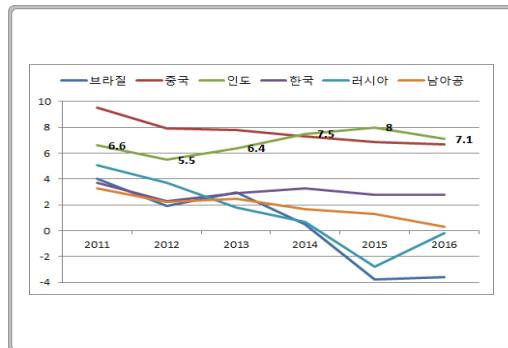
(1) 신남방시장의 가치

인구 13억명의 인도는 중국을 상회하는 7%대 성장을 지속중이고, 6.5억 인구와 2015년 경제공동체(AEC)를 출범하여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아세안도 5~6%대 고도성장을 통해 제2의 중국으로 부상 중이다. 신남방지역은 저임금 숙련 노동공급이 가능하고, 발전단계·GDP·문화·종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추진이 가능하다. 1년 전인 '17.5월 출범한 한국 정부도 신남방 지역과 협력을 통해 G2(미국,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협력 파트너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신남방지역과 한반도 주변 4강에 준하는 파트너 관계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림 3.1.1> 아세안 경제성장률 (%)



<그림 3.1.2> 인도(브릭스) 성장률 (%)



<표 3.1.1> 한·ASEAN 연도별 무역 현황 (억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수출	금액	532	718	791	820	846	748	745	953
	증가율	29.8	35.0	10.2	3.6	3.1	△11.5	△0.4	27.8
수입	금액	441	531	520	533	534	450	443	538
	증가율	29.5	20.5	△2.2	2.6	0.1	△15.7	△1.6	21.4
무역수지		91	187	272	287	312	298	302	414
무역규모		973	1,249	1,311	1,353	1,380	1,199	1,188	1,491

<표 3.1.2> 한·ASEAN 국가별 교역 현황(억불), '17년 교역액 순

국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베트남	총교역액		130	185	217	283	303	376	451	639
	수출		97	135	159	211	224	278	326	477
	수입		33	51	57	72	80	98	125	162
싱가포르	총교역액		231	298	326	327	351	230	193	206
	수출		152	208	229	223	238	150	125	116
	수입		79	90	97	104	113	79	68	89
인도네시아	총교역액		229	308	296	248	236	167	149	180
	수출		89	136	140	116	114	79	66	84
	수입		140	172	157	132	123	89	83	96
말레이시아	총교역액		156	167	175	197	187	163	150	168
	수출		61	63	77	86	76	77	75	80
	수입		95	105	98	111	111	86	75	87
필리핀	총교역액		93	109	115	125	134	116	105	143
	수출		58	73	82	88	100	83	73	106
	수입		35	36	33	37	33	33	32	37
태국	총교역액		106	139	136	133	129	112	110	127
	수출		65	85	82	81	76	64	65	75
	수입		42	54	54	52	53	49	46	52
미얀마	총교역액		6.4	9.7	17	12	14	12	12	10
	수출		4.8	6.7	13	7.1	8.0	6.6	7.6	5.7
	수입		1.6	3.0	3.5	4.9	5.8	5.1	4.6	4.6
캄보디아	총교역액		3.8	5.4	7.2	7.5	8.5	8.7	8.1	8.7
	수출		3.3	4.5	5.9	6.2	6.5	6.5	5.7	6.0
	수입		0.4	0.9	1.3	1.4	1.9	2.2	2.4	2.6
브루나이	총교역액		16	26	21	20	16	12	7.8	8.6
	수출		0.7	5.9	1.1	1.0	2.9	2.7	0.7	0.6
	수입		15	20	20	19	13	9.7	7.1	8.0
라오스	총교역액		1.3	1.6	1.8	2.0	1.7	2.0	1.5	1.2
	수출		1.1	1.5	1.7	1.9	1.6	1.7	1.3	0.9
	수입		0.2	0.04	0.1	0.1	0.2	0.3	0.2	0.3

<표 3.1.3> 한-인도 교역 현황 (백만불)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 출 (증감율)	11,435 (42.7)	12,654 (10.7)	11,922 (△5.8)	11,376 (△4.6)	12,782 (12.4)	12,029 (△5.9)	11,596 (△3.6)	15,055 (29.8)
수 입 (증감율)	5,674 (37.0)	7,894 (39.1)	6,921 (△12.3)	6,180 (△10.7)	5,275 (△14.7)	4,241 (△19.6)	4,189 (△1.2)	4,949 (18.1)
무역규모 (증감율)	17,109 (40.7)	20,548 (20.1)	18,843 (△8.3)	17,556 (△6.9)	18,057 (2.8)	16,261 (△9.9)	15,785 (△2.9)	20,004 (26.7)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국가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상생협력 발전 방안

* 신남방 국가들은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력국가, ②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유망국가, ③ 싱가포르, 태국 등 선도국가로 분류 가능

① 주력국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인 주력국가들과는 산업기술 공유, 기간산업 진출 확대를 통해 원자재에서 부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고도화함으로써 상생협력 발전을 추진 중이다.

○ 소재부품 R&D 지원

국별 주요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를 반영한 소재부품 분야를 선정하여, 공동 R&D 및 GVC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소재·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베트남, 인니,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소재부품 기술협력('19~23년 300억원)
- 3개국(필, 인니, 베) 우선 추진, 21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태국 '21년~, 말련 '22년~)

○ 기술협력

신남방국가들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큰 산업기술을 전수해주는 한편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하는 TASK 사업을 확대하고, TASK 센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기술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 개도국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표 3.1.4> TASK 센터 주요 기능 (안)

① 산업현장 기술 전수	② 엔지니어 양성 교육	③ 기술혁신 역량강화
• 개도국 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현장 기술지도 • 양국 기업 간 GVC 구축 및 기술교류 확대 지원	• 개도국 대학인력 대상 산업기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 현지 진출 국내기업과의 취업 연계 지원	• 개도국 기업 CEO 대상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MOT(Management of Technology) 과정 지원

② 유망국가

유망국가는 현재는 저개발 상태이므로 주력국가만큼 한국과 활발한 경제협력을 추진 중이지는 않지만 향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를 말한다. 유망국가와는 ODA 등을 활용한 경제개발, 산업화 역량 제고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유망국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미래 파트너와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 산업협력

농기계, 종자 보급, 농수산물 가공 등 농업현대화,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구축 등 유망국가 수요에 맞는 산업협력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분야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망국가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 미얀마 직업기술교사 교육원 설립('15~'19, 약1,150만불), 한-라오스 직업기술개발역량강화사업(3단계 '17~'20 약 500만불)

* 미얀마 농기계 보급사업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기업진출 인프라 조성

국내기업의 현지진출과 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 정부 내에 한국기업 진출 전용 창구인 Korea Plus·Korea Desk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기업들에게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단지조성·인큐베이터 파크 조성 등 산업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미얀마 산업협력단지 조성('13년~), 미얀마 상무부 내에 Korea Plus 설치 협의('13.4월), '16년 인도에 설치한 Korea Plus 활성화

○ 산업제도정비

산업 제도 기반이 약한 유망국가 지원을 통해 검증된 한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양자 산업협력의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 표준·인증체계 도입 협력, KOTRA를 모델로 한 무역진흥기구 설립 지원

○ 에너지·자원협력

전력공급, 친환경에너지 보급 협력을 통해 신남방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③ 선도국가

선도국가는 여타 신남방국가들에 비해 인프라, 산업기반 등이 조성되어 있고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말한다. 선도국가들과는 ICT, 핀테크,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R&D, 투자진출 지원,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협력 모델을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협력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공동R&D

한-싱가포르 양자편당 R&D 프로그램(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신설, '4차 산업협력'에 대응한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동R&D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 및 연구소 소속 우수 연구 인력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양국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홍보하고 연구인력 교류를 위한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 투자진출 지원

역내 개최 전시회·프로그램 참여 지원, IP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산업 성장 및 시장 성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 Tech in Asia(싱가포르 스타트업전시회) 우리기업 참여 지원, ConneCTechAsia 한국관 입점(싱), 태국 IP데스크 활동 확대(태국 지재권 공무원 한국 연수, 상담 서비스)

참고 : 국가별 맞춤형 협력

선도시장 : 소비재 및 新산업 진출의 Hub化

 싱가포르	양자펀드 R&D 등 공동투자 기회 발굴, 스마트시티 참여
 태국	한류콘텐츠가 연계된 소비재 등 비즈니스모델 창출
 말련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 추진

주력시장 : 산업기반 고도화 및 수출전진기지화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지원(GVC 편입),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도	기술 공동 R&D 등 신기술 사업화 협력, 인프라 개발 참여
 인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간산업
 필리핀	전력발전 등 산업 인프라,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사업*

유망시장 : 한국 친화형 산업 협력기반 구축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협력
 라오스	수력발전 프로젝트, 송변전 효율화 사업
 캄보디아	상수도 현대화 사업 협력, 법정계량 제도 제·개정 지원

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 정상 교류

제19대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당선 직후에는 이례적으로 아세안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인도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취임 후 이른 시간인 2017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여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통한 상생발전을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이어진 APEC 정상회담(베트남), 아세안 정상회의(필리핀)에서도 함께 참석한 아세안, 인도 정상들과 신남방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협력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우리 정상은 2017년 11월 취임 후 신남방지역으로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우리 정상은 아세안(GDP·영토·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아세안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을 대외에 천명하였다. 즉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3P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의 정부 및 경제 리더들이 격변하는 아세안,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목도하고 이들과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비즈니스 포럼, 민간기업 MOU 체결식, 1:1 상담회 등 다양한 경제협력 행사를 개최했다.

- * 2017년 6월 미국, 7월 독일(G20) 방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닌 전통 우방들과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였고, 9월 러시아 방문이 신북방정책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인도네시아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선보이는 자리
- *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국측 17명, 인도네시아측 15명 등 양국 대표 기업인 참석
- * (비즈니스 포럼) 양국 기업 80여개 및 350여명 참석, 우리 정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정책 경제협력 비전 제시
- * (1:1 상담회)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중소·중견기업 등 60여개사, 인도네시아 및 인근지 기업 166개사 참가, 337건 투자상담·MOU 및 계약 5건 체결

○ 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우리 정상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연이어 베트남 다낭 APEC 정상회의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신남방지역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과 함께 역내 경제통합 심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에 맞춰 한-아세안의 미래 관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안했다.

○ 베트남 국민 방문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교역 1위, 투자대상 1위 국가이자 교역 4위 국가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국가이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다낭 방문에 이어, 2018년 3월 베트남 하노이를 두 번째로 방문하여 베트남 당서기,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4명의 베트남 지도부와 정상회담 및 면담을 통해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양국간 정상회담을 연례화하고, 양국 간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천억불 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재부품, 자동차,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베트남은 인구 9.6천만(평균연령 30세)으로 최근 연평균 6%이상의 성장률 기록

(2) 고위급 교류

○ 장관 하노이 방문

산업부 장관은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직후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20년까지 양국 교역 1,000억불 달성을 위한 무역·투자·산업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요청하였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입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베트남과의 무역구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장관 베트남 방문

산업부 장관은 2018년 3월로 예정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무역,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정상순방 성과 사전협의를 위한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및 FTA 공동위 개최를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였다. 산업공동위를 통해 3월 정상순방시 산업·교역·에너지분야에서 정부간 협력 MOU 체결(6개) 합의하고, 민간기업 MOU도 협의하였다.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베트남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18년 FTA 이행기구 개체계획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산업공동위와 및 FTA 공동위원회와 별개로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인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하였으며, 한국청년의 아세안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취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장관 인도 방문

산업통상부장관은 2018년 2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상공부장관, 전력부장관을 면담하고 신남방협력의 서남아시아 중심국가인 인도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상공부장관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인도의 기초기술과 한국의 대량생산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설치기로 했다. 전력부장관과는

인도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기로 합의했다. 인도 방문 계기에 쌍용차에 투자하고 있는 마힌드라사 회장을 면담하고 전기자동차 협력 등 마힌드라사의 꾸준한 한국투자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 * (미래비전 전략그룹)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17.9) 계기에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해 설립 합의
- 디지털경제, 미래제조업, 차세대 유틸리티(에너지산업, 수처리), 헬스케어 등 4개분야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 본부장 미얀마 방문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년 4월 2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예방하고 미얀마 상무부장관과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미얀마는 2017년 한국과 교역은 10억불에 불과하지만, 인구 5,200만 평균연령 27세의 제2의 베트남으로 부상하는 국가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개발경험은 미얀마가 시행착오 없이 국가발전을 추진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고, 특히 ①현 단계에서의 미얀마 전통 제조업 발전은 물론 미래 산업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정책 (two track approach) 추진, ②기술이전을 포함한 산업기술 협력, ③한국의 미얀마 투자 증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얀마도 적극 협력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MDI 설립, 미얀마의 통상능력배양을 위해 한국무역진흥기구(KOTRA)를 모델로 한 MYANTRADE 활성화, 개도국 현장기술지도사업인 TASK를 통한 기술이전 등 기존 협력사업은 물론, 미얀마 정부 내에 Korea Desk를 설치하여 한국의 미얀마 투자를 증대시키고 IT,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

3. 협력기반 조성

(1) RCEP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사무관 이윤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한국, ASEAN 10개국,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이 국가 간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아태지역 거대 경제 블록 형성과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제17차까지 공식회의를 포함하여 제18차 마닐라('17.5), 제19차 인도('17.7), 제20차 인천('17.10), 제21차 인도네시아('18.2) 등에서 총 4차례의 공식회의에 참석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 시장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20차 RCEP 협상을 국내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상성과 도출을 비롯하여, 최종 협상타결의 모멘텀 마련 등을 위해 개최국에 걸맞은 적극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RCEP 장관회의는 '17.5월과 9월, 11월, '18.3월 4차례 개최되었다. '17.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RCEP 장관회의는 RCEP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되었으며, 각국 정상들은 '역내 RCEP 정상 공동선언문 (Joint Leaders' Statement)'을 확정·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는 2018년 RCEP 타결 지침을 제시하고, 정상차원에서의 RCEP 추진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2) 한-인도 CEPA, 한-ASEAN FTA 개선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사무관 조경은
FTA 이행과 사무관 김홍수

한-인도 CEPA 개선 제3차 공식협상은 2017년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그간 협상 결과 및 여타 다자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을 논의하였다. 제4차 공식협상은 2017년 12월 20~2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품·서비스·원산지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방안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해 '12.8월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추가 자유화 작업계획'을 채택하였다. 이후 '17.9월 제14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자유화 가속화를 선언하고, 현재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제2절 신북방정책 구현

신북방통상총괄과 사무관 엄길용

문재인 정부는 거대시장, 풍부한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북방지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7년 6월 26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7월 10일 100대 국정과제 내용으로 신북방정책 구현을 발표하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계기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과거 소련(1990년), 중국(1992년)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교 이후 교역·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여타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지역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이러한 목표 하에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평화의 축’과 함께 동북아 지역을 넘어서는 ‘번영의 축’으로서 신남방정책과 함께 추진 중인 핵심 국정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신북방정책의 내용은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Bridge 전략 추진, 유라시아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1. 9-Bridge 추진 본격화

신북방통상총괄과 사무관 엄길용

(1) 9-Bridge 개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계기 기조연설에서 전력, 가스, 조선, 항만, 북극항로, 철도,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한-러 협력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양국간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2018년 9월 개최 예정인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개 분야 중 전력, 가스, 조선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분야별 추진방안

① 전력

전력 분야에서는 동북아 지역 전력망을 연계하는 이른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는 극동시베리아 및 몽골의 풍부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한·중·일로 끌어오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 송전망 연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 사업은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 공급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번영에 기여하고 동시에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및 계통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확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역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북핵문제, 영토분쟁 등 정치·외교적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특히 전력망 북한 경유를 통해 남·북 긴장 완화 및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내 전력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라는 의의도 있다.

요약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예외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그림 3.2.1>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도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사업은 두 개의 신규 송전망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사할린)의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남-북-러 500kV HVDC 송전선로(1,000km, 3GW)를 통해 국내로 송출하기 위해 러시아-북한-남한으로 연결되는 세로축이다. 다른 한 축은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중(370km), 한-일(460km) 간 500kV 해저 HVDC(2GW)를 통해 국내 및 일본으로 송출하기 위해 중국-한국-일본으로 연결되는 가로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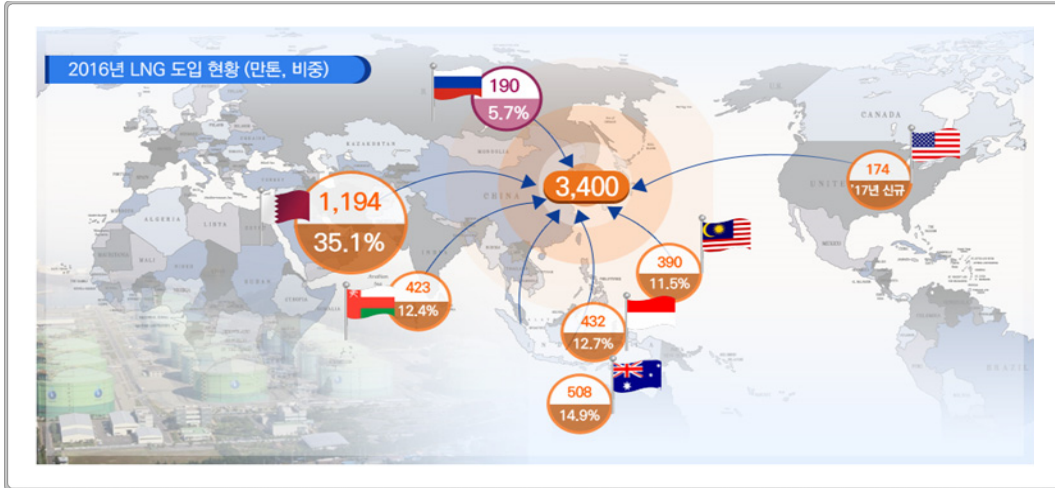
신북방정책 관련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은 2006년 한-러 간 전력협력 논의에서 본격 착수되었으며 2008년 한-러 정상회담 계기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통해 진행되었다. 동 공동성명 발표 이후 한-러 간 3차례에 걸쳐 공동연구를 시도했으나 남북관계 악화 및 국제정세 변동 등으로 중간에 좌초되었으며, 2016년 한-중-일-러 4국 간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공동연구 협력 MOU 체결로 한-러 공동연구는 이에 통폐합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계기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동 제안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T/F를 설립하였다. 향후 정부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공동해양조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러 양국간 공동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전력망 연결을 완성하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경로확정,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 남-북-러 연계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②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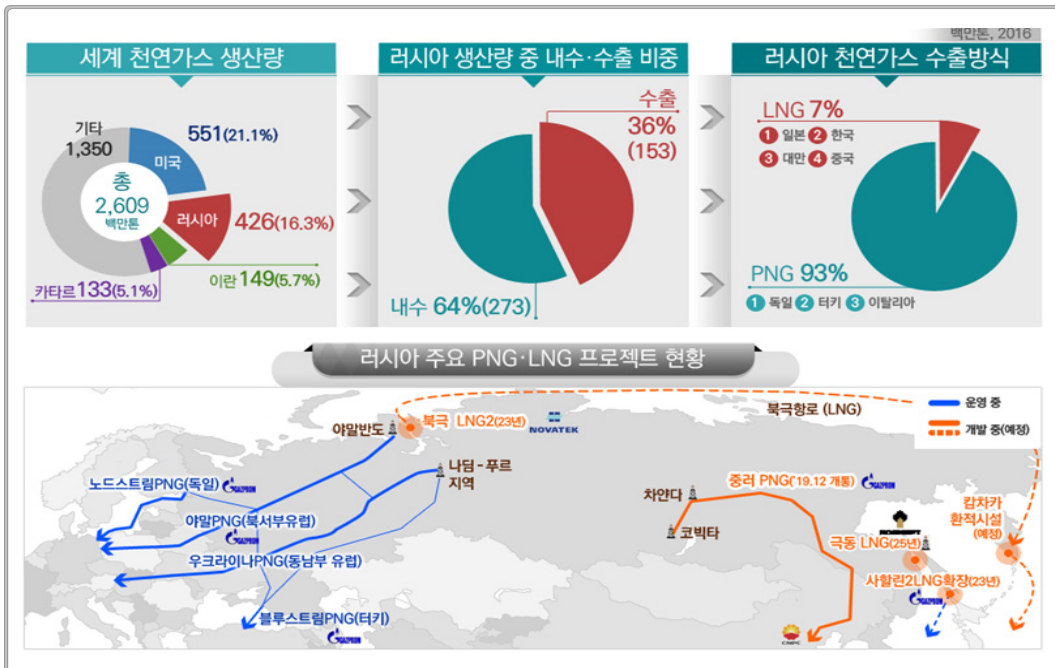
2016년 기준 러시아는 이란에 이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237억톤)을 보유한 국가로서 신규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요처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으로서 2009년부터 매년 150여만톤의 LNG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천연가스 소비비중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도입선 다변화 및 수급 안정성 도모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가스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러 파이프천연가스(PNG) 가스관 연결사업의 경우, 2006년 10월 양국 정부간 가스협력협정이 체결되고 2008년 9월 양국 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및 협상이 본격 추진되었으나, 2013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과 협상 내용이건 등으로 일체 논의가 중단되었다.

<그림 3.2.2> 2016년 우리나라 LNG 도입 현황 (만톤, 비중)



<그림 3.2.3> 2016년 러시아 천연가스 현황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7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가스 분야 협력 제안은 호혜적 협력 잠재력이 큰 양국 간 가스 협력이 다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가스협력 T/F가 구축되었고, 한-러 양국 기관 및 정부 간 실무협회가 진행되는 등 한-러 가스 분야 협력 확대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향후 경제성을 기본으로 공급안정성·외교안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와 전략적 가스 협력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방안 검토, 남북관계 개선 대비 PNG 공동연구 등을 러시아와 민간 협의를 통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가스 도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③ 조선

2014년 이후 러시아가 발주한 총 69척 중 우리 대형조선사들이 27척을 수주하였으며, 특히 우리 대형조선사가 쇠빙 LNG운반선 15척을 수주하여 2017년 3월 인도된 세계 최초의 쇠빙 LNG운반선 1호선이 같은 해 7~8월 북극항로를 성공적으로 운항하였다. 이렇듯 기존 한-러 양국간 조선 분야 협력은 주로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발주 선박을 수주하는 일종의 발주-수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림 3.2.4> 에너지 수송선박 수주 현황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7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조선 분야 협력 제안 이후 양국 간 조선 협력은 기존 선박 발주-수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지원, 기자재 공급, 연구 인력 교류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윈윈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자체 선박 건조를 목표로 추진중인 즈베즈다 조선 현대화 사업에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기술자문 등 기술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자재 등 조선 분야

협력 다각화를 위해 러시아 조선기자재 시장진출 설명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한-러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 자립화를 위해 기술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즈베즈다 등 러시아 조선소 선박 건조시 우리 기자재 공급 협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 고부가 선박 및 선박기능 등 기술역량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내실화

신복방통상총괄과 사무관 김현진, 엄길용, 이은호

(1) 한-중앙아시아 교역·투자 현황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였다. 공식적인 무역통계가 처음 집계된 1994년의 교역규모는 4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는 29억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1990년대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부터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플랜트, 건설시장 진출로 건설, 기계류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우라늄, 비철금속, 면제품 등의 원자재로서, 2017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9억 2천만 달러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은 글로벌 무역규모 축소 등으로 2016년에는 9.5억불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11억 9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과의 교역규모는 2017년 15억3천만 달러에 이르며 최고치를 갱신 하면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즈베키스탄을 제치고 1위 교역국으로 올라섰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수출이 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자 편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 착공한 ‘키안리 석유화학 단지 건설사업’ 기자재 수출로 인하여 2014년 1억9천만 달러에서 2016년 3억6천만 달러로 1.9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상황에 따라 건설사업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교역규모가 다시 1억3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과는 1억달러가 안되는 미미한 교역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누계는 1994년 7천만 불에서 2017년 55억 2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주요 투자 업종은 건설, 은행 등 금융서비스, 제조, 자원개발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석유화학 플랜트,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액화(GTL: Gas-to-Liquid) 플랜트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표 3.2.1> 한·중앙아시아 교역 추이 ('17년)

국 가	교역액 (백만불)	수출액 (백만불)	수입액 (백만불)	무역수지 (백만불)	투자(누계) (백만불)
카자흐스탄	1,531	533	998	-465	3,883
우즈베키스탄	1,198	1,180	18	1,162	1,405
투르크메니스탄	131	131	0	131	2
타지키스탄	22	16	6	10	63
키르기즈스탄	85	85	0	85	173
5개국 전체	2,967	1,945	1,022	923	5,526

* 자료 :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2) 한-중앙아시아 협력 현황

①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

중앙아시아는 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경제협력채널 운영을 통해 국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는 2000년 8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외교부로부터 산업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동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에너지산업 협력,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과는 그간 외교부에서 차관보급으로 운영되던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경제공동위가 2015년 10월 장관급으로 격상(우즈베키스탄은 부총리가 참석)되어 산업부로 이관되었다. 양측은 2016년 9월 서울에서 제8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프로젝트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신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9차 회의는 2018년 하반기 타쉬켄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동 계기에는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 시 우리 정상과 합의한 WTO 가입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우즈베키스탄 수출 촉진과 무역 절차 자동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센터 구축,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 활용 방안, 농기계 기술개발 및 상호인증,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우즈베키스탄 노후전력 현대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정부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프로젝트 수주뿐만 아니라 태양광, 우즈베키스탄 산업다변화 분야 등 협력의 질을 제고하고 수입사절단 파견, 공동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 11월 6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이 발효되어, 2008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2017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에서 제6차 공동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공동협력위원회에서는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는데, 특히 풍부한 천연가스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갈키니쉬 가스전 3차 개발사업’, ‘윤활유 생산공정 현대화사업’, ‘가스액화(GTL) 플랜트’ 등 3대 핵심 플랜트 건설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② 고위급 교류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우즈베키스탄 쿠티카로프 대외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8월, 11월 서울에서 2차례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가스, 광물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 한국의 기술과 전문인력 등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22-25일 동안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자무역협력 협력,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지원 등 총 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7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 상임위원은 카자흐스탄 이스타나 엑스포 참가 계기에 카르 타예비치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차관 면담을 통해 교역투자 활성화, 에너지산업, 수송·물류 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카자흐스탄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2018년 4월에는 카자흐스탄 켄세타예비치 투자개발부 차관이 비즈니스 포럼 계기 방한하였으며, 동 계기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및 실질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만나 주요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 메레도프 부총리가 방한하여 한-투 외교장관 회담 및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면담을 갖고 석유화학 분야와 물류교통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③ 민간 경제계 교류

정부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2014년 9월 산업부,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협의체는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민관이 함께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 개방정책, 저유가로 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기업들의 진출 애로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과 함께 이들 국가들과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23일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경제단체 주관으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에서 양국의 투자환경, 제도 등을 소개하였으며, 양국 기업인들간 교류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아슈바하트에서 개최된 제 6차 공동협력위원회 계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는 양국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한-투르크메니스탄 상생협력방안,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투르크메니스탄 건축프로젝트 협력 성공사례, 소규모 철강생산 및 플랜트 건설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포럼과 연계하여 한-투르크메니스탄 B2B 상담회도 개최하였다.

2018년 4월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투자개발부 차관을 대표로 카자흐스탄 투자공사 부회장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관심있는 100여개 대·중소기업이 참석하였으며, 동 포럼을 통해 카자흐스탄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카자흐스탄 스마트 팜 및 디지털 농업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투자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3) 향후 협력 방향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교역, 산업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협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적인 우리로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발전모델을 도입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부총리 회담, 무역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양 국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 기존의 무역, 투자, 프로젝트 등의 협력을 넘어 의료, 보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예정이다. 특히, 2018년 2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면제를 실시하고 있어 양국 기업인 및 경제단체간의 교류와 협력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원전 등 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번영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에너지·교통·물류 분야의 프로젝트 수주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2050 경제발전전략'을 기본으로 제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분야 외에 경제특구관리 등 카자흐스탄 측이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발전전략 "2011-2030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사회복지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발주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마리주 가스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등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분야 협력 심화를 위해 '2018-2020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동 프로그램 체결시 다양한 경제 분야별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협력기반 조성

FTA정책기획과 사무관 박은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5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여 2015년 1월 정식출범한 기구로서, 공동체 내에서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경제 공동체이다. EAEU 국가들은 원유, 가스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억 8,000만명의 내수시장과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어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

2015년 8월 22일 EEC 이사회는 "한국과 EAEU 간 경제통상 관계 발전"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여 한-EAEU FTA 공동연구를 시행하기로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한-EAEU FTA 관련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공동연구는 약 1년간 진행된 끝에 2016년 10월 5일에 종료되었으며, FTA 체결 시 GDP 및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한편,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등을 포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EAEU 정부간 협의회가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2016년 11월 10일 개최된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EAEU FTA 협상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어 2017년 4월 10일 개최된 제3차 한-EAEU 정부간 협의회에서 정만기 산업통상부 차관과 벨라루스 안드레이 예다첸카 외교부 차관은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9월 6일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EAEU FTA 개시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한-EAEU FTA 개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다.

EAEU는 전세계 생산량의 14.6%에 달하는 6억 750만톤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세계 생산량의 18.4%에 달하는 6억 8260만m3의 가스를 생산하는 풍부한 자원 보유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로 기존 수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 공업국

최초로 EAEU와 FTA를 체결하여 에너지·조선·농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산업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협상 개시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절 전략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1. 중동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주무관 정연수

중동은 한국의 에너지 주요 공급처이며 플랜트·원전 수출 대상지역으로, 풍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경제·자원협력 중점 대상지역이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중동은 3조 46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전 세계 국부펀드의 40.8%(전세계 7조 4,705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11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 전역으로 번진 이른바 '재스민 혁명'은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동 각국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ICT 육성 등 산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25일 'VISION 2030'을 발표하며 석유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 'VISION 2035', UAE 'VISION 2021', 카타르 '국가 VISION 2030' 등 중동국가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한 산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14일(현지시간 기준) 이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에 가했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협상 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를 도출했다. 그 이후, 2016년 1월 17일(한국시간 기준) 제재해제 이행일이 도래하여 이란에 적용되었던 UN 안보리 제재 및 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에너지자원 부국인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으나, 최근 미국의 對이란 경제 제재가 재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동 지역은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에서 축적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회 인프라 개발 및 산업 다각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의 요건을 고루 갖춘 세계 유일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중동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중동은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 이라크 등의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1970년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메카간 고속도로와 주베이 항만 등의 건설현장에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는 중동지역 국가들과 에너지와 플랜트·인프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2017년 기준으로 원유수입량의 81.7%(9.1억배럴, 485억 달러)를 공급해 왔다. 최근 유가회복으로 2017년 우리나라의 중동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도 대비 62.8% 증가한 약 1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3.3.1>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

구분	2017년			2016년		
	물량(백만B)	순 위	비중(%)	물량(백만B)	순 위	비중(%)
사우디	319	1	28.5	321	1	30.4
쿠웨이트	160	2	14.3	162	2	15.4
이란	148	3	13.2	103	4	9.7
이라크	126	4	11.3	141	3	13.4
UAE	91	5	8.1	86	5	8.1
전 체	1,118	-	100	1,026	-	100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과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이 지역에 인프라·플랜트 수주를 통한 플랜트 기자재 수출,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등 공산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한국과 중동의 교역규모는 약 945억 달러 수준으로 유가는 회복 되고 있으나 수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수입으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표 3.3.2> 대 중동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24,039 (△9.8)	28,369 (18.0)	32,884 (15.9)	36,616 (11.4)	32,288 (△11.8)	34,790 (7.7)	30,413 (△12.6)	26,228 (△13.8)	24,380 (△7.0)
수입	61,613 (△39.4)	80,815 (31.2)	119,211 (47.5)	127,768 (7.2)	126,186 (△1.2)	119,121 (△5.6)	68,505 (△42.5)	54,126 (△21.0)	70,153 (29.6)
수지	△37,574	△52,446	△86,327	△91,152	△93,898	△84,331	△38,092	△27,899	△45,773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무역협회(KOTIS)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對중동 투자비중은 '17년 2.3억 달러(신고액 기준)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중동국가들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외국인 지분 제한 등)가 그 주 원인으로 보인다.

<표 3.3.3> 한·중동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건)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對韓 투자	건수	73	84	102	65	67	74	70
	금액	92	52	78	225	1,381	397	1,066
對중동 투자	건수	297	252	256	233	268	234	173
	금액	608	972	421	963	1,602	1,109	794

그러나, 최근 중동국가들은 Post-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머니를 활용하여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기업의 중동 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

중동지역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한 석유화학 분야 산업이 발달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중동 국가들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큰 반면,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도 높다.

또한, 중동국가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 단기간 내에 고속성장을 실현한 한국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왕실과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중동 국가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통령 국민방문 및 고위급 방문, 협력위원회 개최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중동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산업육성 및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중동 국가들과 공유를 통해 신뢰관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중동의 풍부한 오일머니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투자협력 발굴·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사우디는 산업 다각화 전략(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협력 플랫폼(한-사우디 비전 2030위원회)을 신설('17.10.27)하여, 5대 분야별 40개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였다.(①제조·에너지, ②스마트인프라·디지털화, ③역량 강화, ④보건·생명, ⑤중소 기업·투자)는 기존의 에너지·건설 중심에서 제조, 신재생, 방산,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은 단기간에 산업발전을 이룬 한국의 기술과 경험 공유를 통해 사우디의 산업다각화를 앞당기고, 한국은 협력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등 상호 윈윈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를 방문하여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과 면담(18.3.12)을 통해 원전 수주 지원 및 한-사우디 비전2030 협력을 논의하여 사우디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UAE에는 대통령 순방('18.3.24~27)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 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한-UAE는 원전을 마중물로 하여 산업·인프라·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총 9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반도체 협력 MOU 2건,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산업 협력 MOU 2건, 핵연료 등 원전 협력 MOU, 원전 엔지니어링 계약 및 제 3국 원전사업 공동 진출 선언문 등 3건을 체결)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중동·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UAE 센터를 두바이에 신설('18.3.27)하여, 신흥유망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 주요 국가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이란·오만에 중동 시장 플랜트 개척단 파견('17.12.2~8)하고, UAE, 쿠웨이트 방문('18.4.9~4.12)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중동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 중남미

(1) 중남미 협력 확대

미주통상과 사무관 전우표

우리나라와 對중남미 교역은 지난 5년간('12~'1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남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17년 452억불로(수출 281·수입 171, 흑자 110) 전년대비 11% 상승 반전하면서, 향후 교역 증가에 청신호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교역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크지 않으나, '87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시현하여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 이은 3위 흑자 시장이다.

<표 3.3.4> 한-중남미 연도별 교역 추이 (백만불, 자료 무역협회)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수 출	금액	40,131	36,747	36,328	35,898	30,677	25,441	28,095
	증가율	(10.9)	(△8.4)	(△1.1)	(△1.2)	(△14.5)	(△17.1)	(10.4)
수 입	금액	20,165	19,723	18,364	18,294	15,971	15,217	17,081
	증가율	(37.7)	(△2.2)	(△6.9)	(△0.4)	(△12.7)	(△4.7)	(12.2)
교 역		60,296	56,470	54,692	54,192	46,648	40,658	45,176
증가율		(18.6)	(△6.3)	(△3.1)	(△0.9)	(△13.9)	(△12.8)	(11.1)
무역수지		19,966	17,024	17,964	17,603	14,706	10,224	11,015

對중남미 주요 수출품은 공산품이고 주요 수입품은 천연자원으로, 양 지역은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3.3.5> 한-중남미 교역 주요 품목

(백만불, MTI 4단위, 자료 무역협회)

순 위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					중남미의 對한국 수출				
	품 목	2016		2017		품 목	2016		2017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1	선박	14.2%	3,618	15.8%	4,432	동광	7.1%	1,073	10.3%	1,762
2	승용차	13.0%	3,300	11.2%	3,142	동괴및스크랩	10.4%	1,582	8.4%	1,443
3	자동차부품	10.4%	2,634	10.6%	2,992	원유	6.6%	997	8.3%	1,424
4	평판디스플레이	4.5%	1,146	7.2%	2,013	기타금속광물	10.5%	1,605	8.2%	1,409
5	집적회로반도체	2.7%	681	5.3%	1,481	아연광	5.6%	851	7.4%	1,264
	상위 5위 소계	44.7%	11,379	50.0%	14,060	상위 5위 소계	40.1%	6,108	42.7%	7,302
	총계	100%	25,441	100%	28,095	총계	100%	15,217	100%	17,081

’17년 對중남미 누계 신고투자액은 623억불 수준으로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223억불(36%), 제조업 127억불(20%), 광업 105억불(17%) 순이며, 반대로 중남미의 對한국 투자액은 136억불 수준으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83억불(61%), 제조업 52억불(38%) 등의 순이다.¹⁰⁾

또한 최근 신정부 출범이 많고 본격 산업화 단계에 있어 경제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진출이 미진하나 향후 아시아·중동에 이은 인프라 해외수주 대안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국들과 산업 및 자원 협력위원회가 개설되어, 주요 현안과 협력 의제 등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공산품 수출과 천연자원 수입 등에 머물던 기존의 단순 교역관계가 에너지산업, 의료·보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파트너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잠재력이 크고 중산층이 급증하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18.4월 산업통상자원부 - IDB(미주개발은행)간 에너지협력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중남미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하고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 발효된 FTA(’04년 칠레, ’11년 페루, ’16년 콜롬비아)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한-중미 FTA(’18.2월 정식서명), 한-남미공동시장 TA,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 중남미 지역내 주요시장과의 무역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양 지역간 획기적인 교역량 증가와 교역품목 다변화 등이 기대된다.

(2) 협력기반 조성

① 한-콜롬비아 FTA

FTA이행과 사무관 이성민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과의 FTA 협정으로, 2008년부터 7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끝에 2012년 6월 25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16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하였다.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정부는 발효 1주년을 맞아 FTA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17.6.1일 국장급 공동 위원회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하였다.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정 발효 이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0) 한국-중남미 지역 전체 투자액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으나, 중남미 지역에서 타 지역(예 영국령 케이만군도 등)을 제외한 33개국의 ’17년 누계 신고투자액은, 對중남미 269억불(광업 96억불(36%), 제조업 94억불(35%) 순), 對한국 6억불(제조업 4억불(59%), 서비스업 2억불(36%) 순) 수준

② 한-중미* FTA

* 중미 5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FTA협상총괄과 사무관 이동섭

한국과 중미국가들은 '16년 11월 16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선언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진행하고, '17년 3월 15일 한-중미 FTA에 가서명(initialling)하였다. 당초 협상 참여국이었던 과테말라는 상품과 원산지 분야 일부 쟁점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가서명에 불참하고 추후 정식 가입 절차를 거쳐 참여하기로 하였다.

가서명 이후, 가서명본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진행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정식서명을 위한 점검 회의도 3차례 개최하였다. 이후 '18년 2월 21일 평창올림픽 계기에 한국과 중미 5개국은 한-중미 FTA에 정식서명(signing)하고, 각국 국내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중미 FTA 주요내용 >

- (상품) 전체 품목중 95%이상 품목에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 약속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 우리측은 커피, 설탕, 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개방하고, 중미측은 자동차(및 부품), 철강,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방

- (서비스/투자) WTO 플러스 수준의 규범, 유통·건설·엔터테인먼트 등 시장개방
- (기타규범) 한류 콘텐츠 보호, 정부조달 시장 개방, 개성공단 인정 등

중미 5개국은 한국과 교역량이 많지는 않으나, 중남미 시장에서 GDP 5위, 인구규모 4위의 시장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최근에는 중미 지역내 중산층 증가로 소비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 우리 주력 상품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한-중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 상품 외에도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건강음료 등 중소기업 제품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조달 시장 개방으로 중미 국가들의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미 FTA 체결로 북미(미국, 캐나다)와 남미(콜롬비아, 칠레, 페루)를 연결하는 미주대륙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TA

FTA정책기획과 사무관 조성중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회원국으로 창설된 관세동맹(2012년 베네수엘라가 가입하였으나 2016년 이후 회원국 자격 정지상태)으로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 GDP의 76%(2.7조불)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유망시장이다. 특히 이스라엘 및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사례가 거의 없고 최근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감소(2011년 208억불을 정점으로 2017년에는 111억불로 급감)하고 있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메르코수르 양측은 2004년 11월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양측간에 협상개시를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대외개방 관련 메르코수르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논의 진전이 더디다가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 2016년 8월 브라질의 정권교체 이후 메르코수르가 대외개방에 보다 관심을 보임에 따라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양측은 무역협정 협상의 전단계로 2016년 11월 제1차 한-메르코수르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 2017년 2월 제2차 예비협의를 개최하고, 2013년 3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메르코수르 당시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간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개시를 위한 양측 내부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이후 우리측은 2017년 4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에는 동 무역협정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2월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보고를 마지막으로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메르코수르측도 각 회원국별 협상개시 승인을 거쳐 2017년 12월 메르코수르 장관급회의 및 정상회의를 거쳐 협상개시를 공식 승인함에 따라 양측 모두 협상개시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18년 상반기 중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개시에 합의하는 장관급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035년 기준 0.36~0.43%가 증가하고 메르코수르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약 24.0억불, 수입은 옥수수, 가축, 석유화학, 잎담배, 가금류 등 농산품 중심으로 약 12.6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④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PA) 준회원국 가입

FTA협상총괄과 사무관 이윤섭

태평양동맹(PA)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으로서 2016년 총 GDP가 1조 7,700억 달러에 이르는 중남미 지역의 핵심 경제권이다. PA는 2012년 공식 출범한 이래 2015년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4개 회원국간 무역의정서가 발효되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PA는 2030년까지 역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적·물적자원 및 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

PA측은 아태지역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 2017년 3월 칠레 빌냐델마르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통합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계기로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지위를 신설하였다. PA 준회원국은 PA 회원국과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발효하는 국가를 의미하므로 PA 준회원국 가입은 PA측과의 양자 FTA 체결 의미를 지닌다.

2017년 6월 PA 정상회의에서 PA측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를 준회원국 가입협상 대상국으로 발표하였다. PA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는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PA 4개국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3개국과는 높은 수준의 FTA를 이미 체결하여, PA 준회원국 가입은 사실상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을 의미한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나 우리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미국, 일본, EU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멕시코를 비롯한 PA 회원국들이 준회원국 확보에 적극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3. 유럽

구주통상과 사무관 김수진

(1)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역내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인구 5억의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자 對韓 투자 1위 파트너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를 EU와 체결함으로써 일본, 중국 등 여타 경쟁국 대비 우리제품의 EU시장 내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의 관세 철폐 및 시장개방 효과에 따라, 한·EU간 교역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FTA 발효 전년도인 2010년 대비 20.7% 증가하였고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우리의 대EU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총 수출 규모가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다.

한·EU FTA는 FTA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16개의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이행채널들은 지난 7년간의 운영을 통해 FTA의 체계적인 이행 및 양자 통상현안의 효율적인 협의 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과 EU는 한·EU FTA 이행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여, FTA의 효율적인 이행 및 양자 통상현안 해소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9일 벨기에(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동 회의에서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EU FTA 이행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하여 EU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양측은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한-EU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역과 투자촉진 등 더욱 격상된 파트너십으로 발전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에 대응해 자유무역의 모범사례로서 양측이 상호 이익을 도모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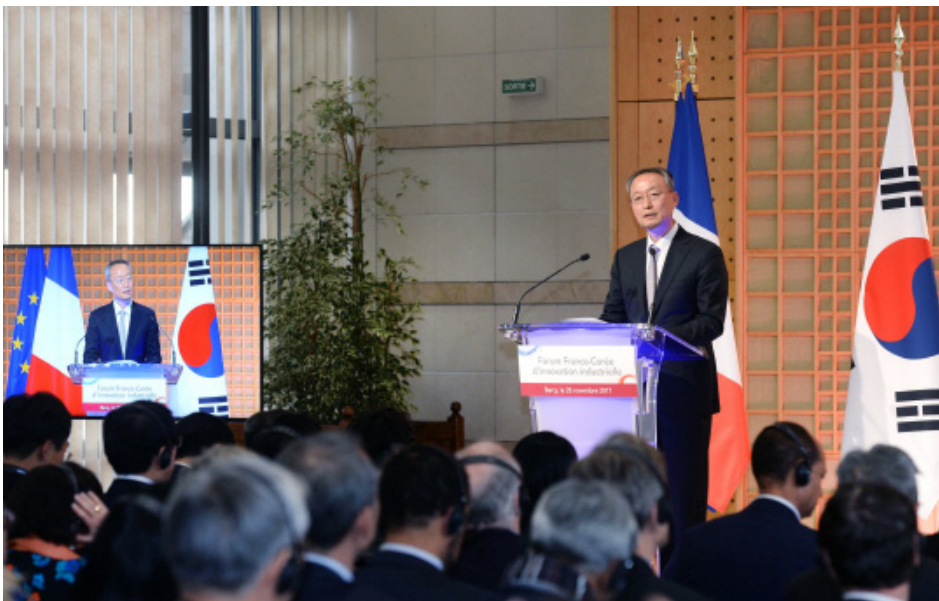
(2) EU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편, EU 개별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불 에너지장관 회담, 제2차 한-불 경제장관 대화를 개최하여 한-불간 경제협력 현안을 협의하였다.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경제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니콜라 율로(Nicolas Hulot) 프랑스 에너지환경부 장관, 브루노 르메흐(Bruno Le Maire) 경제재정부 장관과 연쇄 회담을 통해 「에너지·원전해체·신산업」3대 분야 협력에 합의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불 에너지 장관회담에서 백 장관과 율로 장관은 미세먼지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방안,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통 정책목표 하에 '한-불 에너지자원 협력 의향서', '기관간 원전해체 협력 MOU' 2건을 체결하였다. 「한-불 에너지자원 협력 의향서」체결을 통해, 양측은 '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 운영에 합의하고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등을 협의하는 '한-불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국장급)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수원-아레바 및 한수원-프랑스전력 공사간 2건의 원전해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현재 고리1호기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한수원과 프랑스의 글로벌 해체전문 기업인 아레바, 프랑스전력공사와 제염·해체·방폐물 관리 분야에서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차 한-불 경제장관 대화에서 백 장관은 한국 신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 등을 소개 하면서 양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기술협력을 통한 교역 창출과 투자 확대를 제안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제4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식에 참석하여,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공동창출을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이날 포럼을 계기로 ICT융합, AR/VR, 에너지 분야에서 6개의 신산업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동 기술개발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또한 2017년 12월 1일 외국 각료로는 최초로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총리 내정자를 만나 양국간 원전 분야를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한국과 체코의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백 장관은 체코 방문 계기에 다나 드라보바 체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밀루셰 호르슈카 상원부의장, 안 피셰르 전 총리 등 정관계 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간 원전 분야를 포함한 경제·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통상관계 재정립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간 정부는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한-영간 새로운 통상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영국은 유럽 국가 중 교역 및 투자 모두 우리의 제2의 협력 파트너로 한-EU FTA 발효('11.7.1) 이후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증가해 왔으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한-영간 교역에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아 특혜무역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영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교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개최된 제3차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양국 통상 장관은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무역작업반에 이어 2017년 12월에 런던에서 제2차 무역작업반을 개최하여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브렉시트 협상이 한-영간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들을 확인하여 양국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로 2017년 3월 영국이 EU 탈퇴를 공식 통보한 이후, 리스본 조약에 따른 영-EU간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어 12월에 1단계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2단계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한-영 무역작업반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 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te Paper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1절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통상법무기획과 사무관 장미화/천서현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이 증가해왔다. 수입 규제 대표적인 형태인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 부과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WTO 협정문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WTO 회원국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WTO 협정문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치 가능하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사용하고 있어 WTO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수입규제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국가들의 수입규제 조치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수입규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0건에 이른다. 2017년에는 미국(8건)·터키(4건)·중국(3건)·아르헨티나(2건)·호주(2건) 등 총 27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제소가 19건으로 전체 제소의 70%로 구성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1~4월간 우리 기업에 대해 반덤핑 7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3건이 새롭게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전년동기대비('17년 1~4월 7건) 약 50%가 증가했다.

요약

제1장
세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표 4.1.1> 최근 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월~4월
49건	40건	37건	45건	27건	11건 (반덤핑 7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3건) (미국) 대형구경강관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1.17) (인도) Sun/Dust Control Film : 반덤핑 조사개시(1.17) (터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기타)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2.23) (호주) A4용지 : 반덤핑 조사개시(3.19) (터키) 아크릴모드 : 반덤핑 조사개시(3.22) (중국) 페놀 : 반덤핑 조사개시(3.26) (E U) 철강제품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3.26) (인도) 에폭시 : 반덤핑 조사개시(4.4) (인도) EVA 시트 : 반덤핑 조사개시(4.5) (터키) 철강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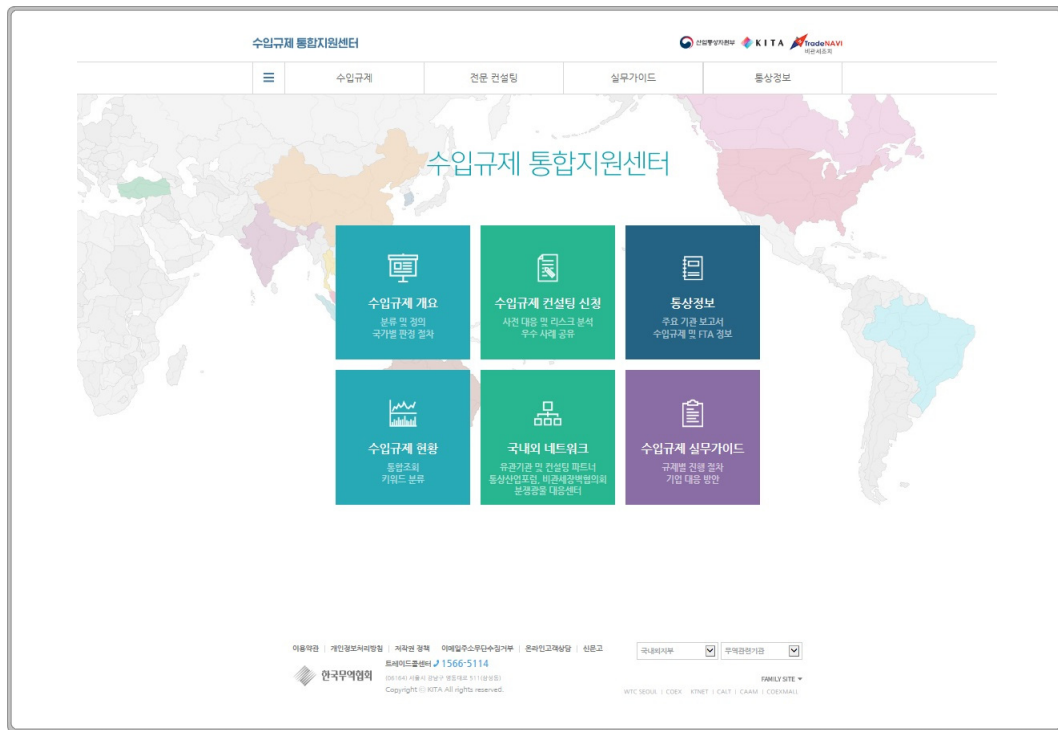
수입규제 형태별로는 2018년 4월 현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27개국 총 200건(규제중 166건, 조사중 34건)으로, 반덤핑조치가 156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조치가 36건으로, 상계관세의 경우 8건 모두 미국이 제소하였고, 세이프가드는 터키(5건)·베트남(4건)·인니(3건)·필리핀(3건)·인도(2건) 등 신흥국에서 주로 발동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4.1.2> 對韓 수입규제 현황(2018년 4월 기준)

(건수)												
분류	미국	인도	터키	중국	브라질	캐나다	태국	호주	인니	말련	기타	합계
조사중	8	4	5	3	1	0	0	1	0	0	12	34
규제중	32	26	12	12	10	10	8	6	7	7	36	166
합계	40	30	17	15	11	10	8	7	7	7	48	200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업무가 이관된 이래 수입규제 국내대응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정부간 공동 위원회, 고위급 면담, WTO 정례회의 등 다양한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를 의제화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계와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해왔다. 또한, 국제법상 위법한 수입규제의 경우 WTO에 제소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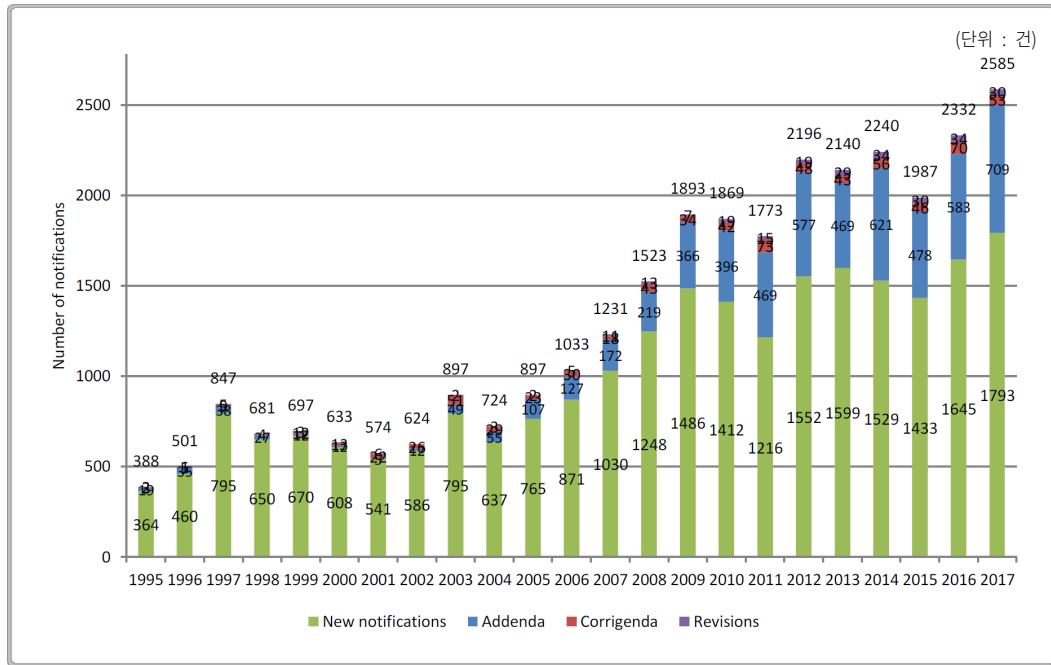
2016년 3월에는 수입규제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를 개설하여,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동향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에 수입규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경우, WTO 회원국들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BT 위원회 통보 건수가 2006년 1,033건에서 2017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585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 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2017년 178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외국의 비관세장벽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상대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상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개별 기업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동향을 파악하고 민관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1.1> 전세계 TBT 통보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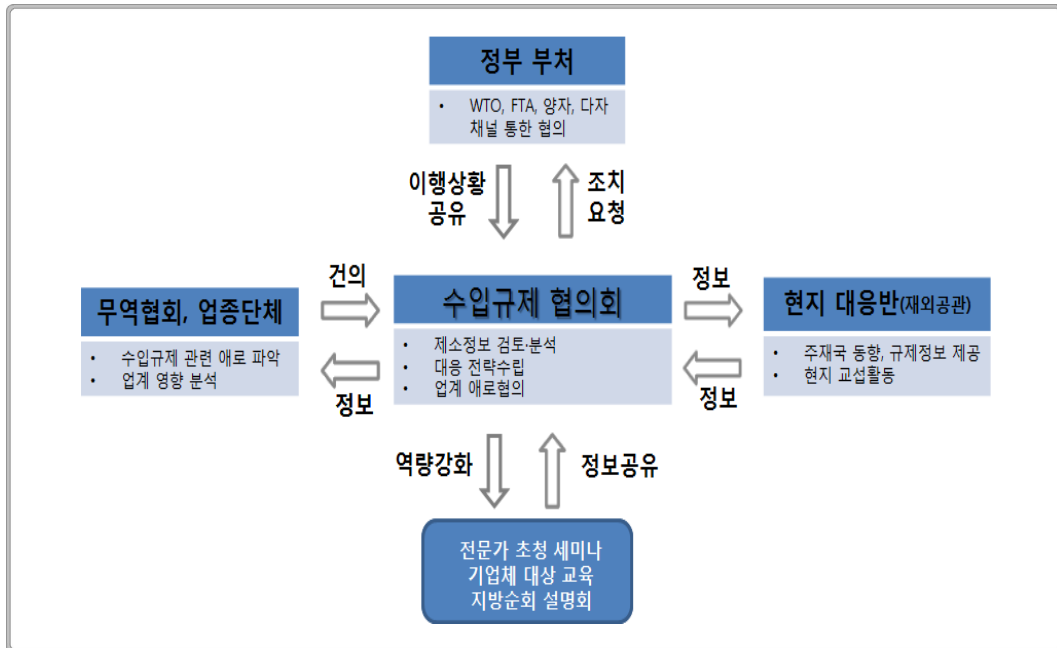
출처: 23차 WTO TBT 연례보고서

2. 수입규제 대응

(1) 수입규제 대응체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9월에는 수입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수입규제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주요 업종단체, 코트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협회가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규제협의회 산하에 지역별·품목별로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2> 수입규제 대응 종합 체계도



(2) 수입규제 대응현황

첫째, 수입규제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입규제 주요 현안에 대응해왔다.

먼저, 민관합동 「미국 수입규제 대응 회의」(‘17.6.7)를 개최하여,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업계 및 협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요인사들 면담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확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철강 수입규제 TF」 긴급 점검회의(‘17.6.14)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후판에 대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유정용강관에 대한 특정 시장상황(PMS) 적용한 것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한 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율 산정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특정국가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회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

분야별 논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17.6.27)를 개최하여, 거세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동 협의회 이후, 수입규제가 자주 발생하는 정밀화학('17.6.30)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 조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8년 1월에는 미국이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여,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와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약,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을 공유하였다.

둘째, 상기 협의채널 뿐 아니라 세미나·워크숍 등도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응전략 세미나('17.9.1)를 개최하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규제 제소국인 미국과 함께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와 한국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 상황(PMS)를 적용한 고율의 관세 부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통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17.12.21)을 개최하여,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기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업계, 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에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17.10.27)이 내려지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셋째, 수입규제의 경우 조치상대국 정부에 의해 취해지는 것으로, 조치상대국과의 양자 면담, FTA공동위 및 무역구제위원회 등에서 수입규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고, 고위급 서한 발송, 조치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반덤핑위원회·보조금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넷째,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입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에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WTO 관련 협정 및 상대국의 관련 법제도 등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치 상대국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전문가 고용 비용과 대응자료 준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주선·지원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28건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첨부] 수입규제 세부현황

▶ 규제형태별·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2018.4월말 기준)

국 가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계	
북미 (2개국)	캐나다	10				10	
	미국	30	(7)	8	(1)	2	40 (8)
중남미 (6개국)	아르헨티나	4	(2)			4	(2)
	브라질	11	(1)			11	(1)
	콜롬비아	2				2	
	코스타리카				1	1	
	에콰도르				1	1	
	멕시코	5	(1)			5	(1)
아시아 (10개국)	중 국	14	(3)		1	15	(3)
	인도네시아	4			3	7	
	인 도	28	(4)		2	30	(4)
	일 본	2				2	
	말레이시아	5			2	7	
	필리핀				3	3	
	파키스탄	4	(1)			4	(1)
	태 국	6			2	8	
	대 만	3				3	
	베트남	1			4	5	
아프리카 (4개국)	이집트	1				1	
	튀니지				2	(2)	2 (2)
	남아프리카공화국	1			2	(1)	3 (1)
	잠비아				1	(1)	1 (1)
유럽 (2개국)	E U	5			1	(1)	6 (1)
	우크라이나				1		1
대양주 (1개국)	호 주	7	(1)			7	(1)
중동 (2개국)	GCC	1			3	(3)	4 (3)
	터 키	12	(3)		5	(2)	17 (5)
총계 (27개국)		156	(23)	8	(1)	34	(10)
						200	(34)

*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 내 표시부분]을 포함한 수치임

▶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2018.4월말 기준)

국 가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제품	섬유류	기타	총계
북미 (2개국)	캐나다	9	1				10
	미 국	28 (4)	5	3 (1)	3 (2)	1 (1)	40 (8)
중남미 (6개국)	아르헨티나		1	3 (2)			4 (2)
	브라질	3	1	3 (1)	2	2	11 (1)
	콜롬비아			1		1	2
	코스타리카					1	1
	에콰도르					1	1
	멕시코	3			1	1 (1)	5 (1)
아시아 (10개국)	중 국	1	1	11 (3)	1	1	15 (3)
	인도네시아	4		2		1	7
	인 도	7		19 (3)	2	2 (1)	30 (4)
	일 본	1		1			2
	말레이시아	6		1			7
	필리핀	1				2	3
	파키스탄			3 (1)		1	4 (1)
	태 국	8					8
	대 만	3					3
	베트남	3		2			5
아프리카 (4개국)	이집트			1			1
	튀니지					2 (2)	2 (2)
	남아프리카공화국	2 (1)		1			3 (1)
	잠비아	1 (1)					1 (1)
유럽 (2개국)	EU	4 (1)		1		1	6 (1)
	우크라이나					1	1
대양주 (1개국)	호 주	5				2 (1)	7 (1)
중동 (2개국)	GCC	2 (2)	1	1 (1)			4 (3)
	터 키	2 (1)		8 (4)	4	3	17 (5)
총 계 (27개국)		93 (10)	10 (0)	61 (16)	13 (2)	23 (6)	200 (34)

*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것을 나타냄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것을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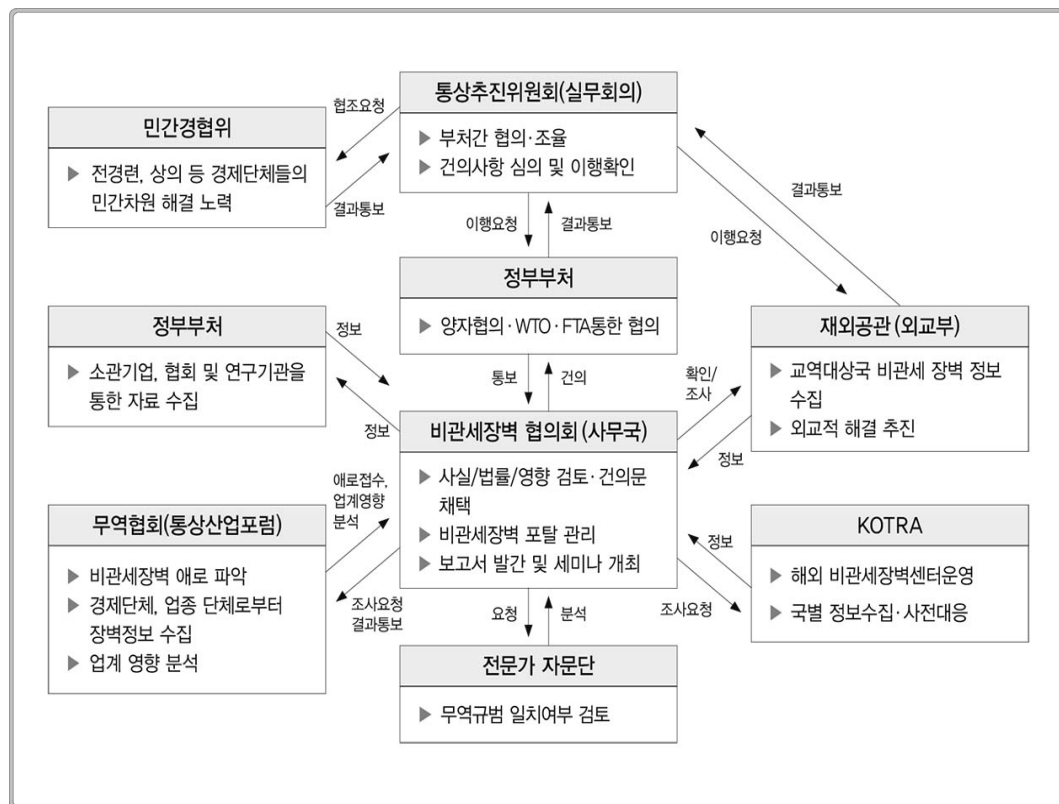
* 기타 :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 및 잡제품

3. 비관세장벽 대응

(1)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2013년 9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하여 비관세장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응체계로서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동 협의회는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무역협회를 사무국으로 하며, 관계부처·통상산업포럼(18개 업종별 협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평가하고,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선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논의한다.

<그림 4.1.3>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2013년 11월 제1차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5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우리 기업 애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 설치 이후 국내(관계부처 등), 현지(공관·무역관)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의 조미김 위생기준 완화, 강제성제품인증(CCC) 상호인정 품목

확대, 삼계탕 수출 개시,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규정 철회 / 인도의 2차전지 관련 셀단위 인증마킹 의무 철회 / 사우디아라비아의 세탁기 물소비 효율 규제 완화 등 주요 비관세장벽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부처별 비관세장벽담당관(과장급)을 지정하여 소관 비관세장벽 동향 모니터링 및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강화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제도상 애로 해소건에 대하여 6개월 가량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해소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첫째, 정부부처, KOTRA, 재외공관 및 무역협회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 사례를 발굴하고, 수집된 사례를 정리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 공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상·하반기 2번에 걸쳐 KOTRA 전 무역관(86개국 127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사례를 발굴하여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전문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정부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먼저 한중 FTA, 한미 FTA 등 기 체결한 FTA 이행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제공동위, 경제장관회의, 통상장관회담 등 정부부처별 양자협의체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를 의제화하고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통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기준(SPS)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포함하여 14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및 1개 작업반 등 이행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WTO TBT위원회·SPS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통해서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G20, APEC 등에서도 무역제한조치 동결(Standstill) 및 철폐(Rollback) 논의를 주도한 바 있으며, 2017년 9월 22일 ASEM 경제장관회의가 12년 만에 개최되어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셋째, 정보·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5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비관세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내에 ‘비관세조치 DB’를 구축하여 16개 국가, 20개 품목, 11개 비관세조치 유형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4>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내 비관세조치 DB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TradeNAVI website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비관세조치 DB' (Non-Tariff Measures DB) search results.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대상국: 전체' (Target Country: All), '품목: 전체' (Product: All), and '유형: 전체' (Type: All). The results are displayed in a table with columns: 번호 (No.), 국가 (Country), 품목 (Product), 관원HS(6단위) (Harmonized System Code), 유형 (Type), and 제목 (Title).

번호	국가	품목	관원HS(6단위)	유형	제목
932	터키	농축산물	020110	장부 조달 제한	자국기업에 대한 가격 가점
931	태국	농축산물	020110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930	터키	농축산물	070810	수량 통제 조치	농산물 수입허가제
929	터키	경보기기	844331	수량 통제 조치	복사기, 데이터처리장비, 디젤...
928	태국	의약품	300120	수량 통제 조치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원자...
927	태국	금속광물	260900	수량 통제 조치	원자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
926	멕시코	패션, 의류	500100	수량 통제 조치	의류, 원단 및 신발 온라인 수입...
925	멕시코	철강금속	730110	수량 통제 조치	철강류 수입허가제
924	대만	의료기기	902129	인증	의료기기 GMP(Good Manufa...
923	대만	화장품	330510	인증	화장품 GMP(Voluntary Cosm...

The table shows 10 results. The first result (No. 932) is highlighted. The page number is 1/94.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격 및 FTA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규격 인증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심사·컨설팅 비용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지적권 분쟁에 대응한 지적권 침해가능성 및 대응전략 상담(특허청)도 실시하고 있다.

제2절 WTO 통상분쟁 대응

1. WTO 통상분쟁 개요 및 동향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장정주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분쟁해결기구, 패널 및 상소 기구의 운영, 판정·권고 이행·감독, 불이행에 따른 양허정지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는 DSU에 따라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판정·권고 이행·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한 다른 회원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540여건의 분쟁이 제기되었고, 이중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을 제소한 분쟁은 18건이며, 우리나라가 제소를 당한 분쟁은 16건이다.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WTO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하고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통상분쟁 대응 현황

(1) WTO 한·미 세탁기 분쟁 현황

통상분쟁대응과 서기관 장재량

2012년 12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삼성전자, 엘지전자)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덤핑마진 및 보조금 확정 판정을 하였고, 2013년 1월 23일 미국 무역위원회(ITC)도 우리기업의 세탁기로 인해 미국 세탁기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가 부과되었다. 이에 우리 업계는 우리 정부에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해 달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하고, 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013년 8월 2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하였다.

2013년 10월 3일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통해 상기 반덤핑·상계 관세조치를 조속히 철폐해 줄 것을 미측에 요청하였으나, 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013년 12월 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4년 1월 22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2015년 11월 13일 패널은 반덤핑 관련 쟁점에서는 우리측이 대부분 승소, 보조금 분야에서는 우리측이 일부 패소한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한·미 양국에 배포하였다. 한, 미 양국의 상소로 진행된 WTO 상소심에서도 우리측은 2016년 9월 7일 기존의 패소한 쟁점까지 승리하는 등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동 WTO 판정은 그간 미국측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온 소위 제로잉 기법이 WTO 협정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표적덤핑을 적용하는 미국측의 조사방법론 역시 WTO 협정에 위반됨을 판정한 것으로서, 향후 세탁기는 물론 여타 제품에서의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게는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WTO의 결정에 따라 미국측의 판정이행을 위한 기한이 2017년 12월 26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기한 내에 이행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WTO가 판정의 미이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에서 2018년 1월 22일 WTO에 미국 수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연간 7.11억불)정지를 요청하였다. 미국측은 우리나라가 요청한 양허정지의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허정지 수준의 타당성을 다투는 중재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동 중재절차가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현황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고성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후쿠 지방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환경에 누출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내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식품에 대한 품목별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고 발생 2년여가 경과한 2013년 8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및 주변 7개현 등 총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 및 WTO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2015년 6월 24일~25일 양일간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일측이 우리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양국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양자협의를 종료되었다.

2015년 8월 31일 일측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동 문제를 심리할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9월 28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우리 정부는 패널심리 과정에서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후쿠시마 원전 관리 수준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다.

2018년 2월 22일 패널 판정보고서가 WTO 전회원국에게 회람 및 대외 공개되었다.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기재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S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2018년 4월 9일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상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분쟁 현황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장정주

2014년 9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9.89%~15.75%의 반덤핑관세(현대 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세아제강·휴스틸 등 기타 업체 12.82%)를 부과하였다. 우리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OCTG의 내수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WTO에 제소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WTO 제소방침을 결정하고,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014년 12월 22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하였다.

2015년 1월 21일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통해 상기 반덤핑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미측에 촉구하였으나, 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015년 3월 10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 14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2017년 11월 14일 패널은 패널보고서를 한·미 양국에 배포하였다. 그 결과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가격의 이윤 산정 관련 주요 쟁점에서 우리측이 승소하였으나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등의 쟁점에서는 우리측이 패소하였다. 한·미 양국이 패널 판정을 상소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1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패널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패널 판정결과가 확정되었다.

향후 미국이 이행을 완료하는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WTO 한·일 공기압 전송용 밸브 분쟁 현황

통상분쟁대응과 서기관 장재량

2015년 1월 20일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권고하였고, 201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는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현재 부과기업 중 1곳(일본 에스엠씨社)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소제기일: 2015년 10월 8일)이다. 2016년 3월 15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고,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 및 WTO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2016년 4월 우리 정부는 한·일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양측은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2016년 6월 9일 일본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7월 4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2018년 4월 12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전체 WTO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판정결과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부는 금번 패널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번 판정에 대해 일본측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패소한 일부 쟁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5) WTO 한·미 불리한 가용정보 분쟁 현황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강석하

미국이 2015년 제정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은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시 조사대상 업체가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업체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업체가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2차적인 출처로부터 얻은 가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WTO 반덤핑협정상의 관련규정에 비해 조사당국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반덤핑·보조금조사, 대용량 변압기 2차 내지 4차 반덤핑 연례재심시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미국의 이러한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WTO 제소방침을 결정하고, 2018년 2월 14일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3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양자협약에서 한국 정부는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에 따른 부당한 조치가 철회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정부 및 업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우리측이 제공한 사전질의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월 16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패널설치는 5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분쟁 절차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제3절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무역구제정책과 사무관 정재욱
주무관 김영재

1.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지속,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공급 과잉,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자국이익 우선정책 등으로 보호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2001년 이후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등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잉여 생산물이 역외로 유입될 것을 우려하여 26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더욱이 미국, EU 등 이른바 무역구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기타 신흥 국가에까지 퍼져나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기조의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무역구제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4.3.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구분	근거규정		비고
	국내법	국제규범	
반덤핑제도	관세법	GATT 제6조①항, ②항 WTO 반덤핑협정	협의
상계관세제도	관세법	GATT 제6조③항,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제도	관세법 불공정무역조사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없음	광의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없음	최광의

2.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 덤핑방지관세 제도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GATT 제6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덤핑협정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청, 조사절차, 덤핑판정의 요건, 증거, 부과방법 등 실체적·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국내 법적으로는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즉,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고,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며, 덤핑행위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덤핑여부 결정을 위해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기준가격으로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즉,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생산비 + 합리적 관리비, 판매비 등 비용 + 정상이윤)을 정상 가격으로 사용한다.

수출가격은 수출국의 공장도가격 기준 수출가격(조정된 수출가격)을 사용한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 등으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입자가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수출가격을 대신 사용한다.

<표 4.3.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정상가격	덤핑가격	
	수출가격(EP)	구성수출가격(CEP)
수출국 통상거래가격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한국내 재판매가격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창고료 등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창고료 등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창고료 등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광고비, 신용비용 등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광고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등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광고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등
-	-	○현지법인의 관련비용(-) - 현지법인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판매관리비, 관세·통관·운송부대비
○과세상의 차이 - 관세환급(-) ○거래단계 차이(±) ○물리적 특성차이(±)	-	-
조정된 정상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한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정비교의 원칙이라 한다.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덤핑판정시 통상적으로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에서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A-A방식)하여 덤핑을 판정하나,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거래비교단계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기도 한다(transaction to transaction, T-T방식). 나아가 예외적으로 가중평균에 의한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에 의한 수출가격의 비교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매자, 지역, 시기별로 수출가격의 양태가 다양하고 조사당국이 A-A방식 또는 T-T방식에 의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되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덤핑차액이 매우 작거나(미소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 덤핑수입량이 소량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미소수량, negligible imports volume) 즉, 최소허용기준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시행규칙에서는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또는 수입국으로

부터의 수출물량이 3%미만이고 수출물량이 3%미만인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의 합계가 7%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을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실질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국내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피해는 수입제품 가격이 동종제품의 가격보다 낮으며, 이와 같은 가격 차이로 국내산 제품 가격의 인하 또는 상승억제를 초래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재고 등의 주요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실질적 피해의 우려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해야 한다. 즉,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 수출자의 공급능력 증가, 국내가격의 현저한 하락, 수출국내 재고상황 등을 종합하여 그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은 국내산업의 투자, 가동률, 손익, 시장점유율 등에서의 정상기대치 및 실제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인과관계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야 하며, 조사당국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조사당국은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들 요소를 덤핑수입의 원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덤핑 가격으로 팔리지 아니한 수입상품의 물량 및 가격, 국내의 수요감소나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과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이 있다.

한국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59건의 반덤핑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114건(71.7%)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품목별로는 화학 54건, 종이·목재 27건, 기계·전자 20건, 제철·금속 19건 분야 등에 주로 집중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77건, 일본 50건, 미국 29건, EU 28건 순으로 반덤핑 관세가 취해졌다.

<표 4.3.3>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구 분 (단위: 건)		'87~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반 덤 핑	전체*	47	8	6	11	7	5	4	6	8	3	6
	원심	36	4	2	4	7	3	3	3	6	2	1
구 분 (단위: 건)		'10	'11	'12	'13	'14	'15	'16	'17	'18.4	계	
반 덤 핑	전체*	6	6	5	5	10	4	5	7	-	159 (114)	
	원심	2	1	2	3	3	3	2	3	-	90 (61)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안은 조치건수

<표 4.3.4>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구분(단위:건)		중국	일본	미국	EU	대만	인니	인도
조사신청		77	50	29	28	15	11	16
조사중		4	2	1	-	-	-	-
긍정 판정	조치중	9	6	2	2	1	1	4
	조치완료	50	32	17	13	12	5	9
기타 *		14	10	9	13	2	5	3

구분(단위:건)		말련	러시아	싱가폴	태국	캐나다	기타	계
조사신청		15	8	9	12	6	15	291
조사중		1	-	-	1	-	1	10
긍정 판정	조치중	2	-	1	3	-	3	34
	조치완료	7	5	6	2	5	2	165
기타 *		5	3	2	6	1	9	82

* 기타: 부정판정, 신청철회 및 신청기각 포함

<표 4.3.5> 품목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구분(단위: 건)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섬유	제철/금속
조사신청	54	20	27	12	19
조치 중	8	2	3	-	4

구분(단위: 건)	유리/도자	기타	계
조사신청	11	16	159
조치 중	2	-	19

(2) 상계관세 제도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계관세제도는 GATT 1994 제6조, 제1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국제법적 근거를 두며, 이와 함께 국내법인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의 규정을 기초로 운용된다.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가 존재하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행위와 국내산업의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GATT 제16조는 보조금의 개념을 모든 형태의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이를 구체화하여 ① 자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② 재정적 기여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며 ③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제1조는 재정적 기여를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적 자금이전(무상이전, 대출, 지분참여 등) 또는 잠재적 자금이전(대출보증 등), 둘째, 정부세입 포기(세액공제 등), 셋째, 정부에 의한 SOC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구매, 넷째, 정부가 위와 같은 지원을 민간기관을 통해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런 관행이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혜택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제14조에서 보조금 유형별 혜택과 보조금액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분출자가 국내민간투자자의 통상적 투자관행과 불일치하는 경우, 둘째, 정부대출이 기업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셋째, 정부의 대출보증이 정부보증이 없을 경우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넷째, 정부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또는 재화구매가 적절한 수준 이하의 보상을 받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혜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성은 보조금이 특정기업,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게 지원되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금지보조금은 무조건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수입물품 대신 국산물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 피해의 입증 없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타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 즉, 산업피해, 관세양허의 무효화 또는 침해, 타회원국의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등을 초래하므로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없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없는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이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잠정적용 규정(WTO 보조금협정 제31조)의 적용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모두 상계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다.

<표 4.3.6> 보조금의 종류 및 의무사항

구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내용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의무	원칙적 사용금지 - 유예기간내 철폐*	사용가능	사용가능
규제	- WTO DSB 제소 및 대응조치 - 피해를 입은 국가는 상계관세부과 가능	상대방 국가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 DSB 제소 및 대응조치 - 상계관세부과 가능	상계관세부과 불가능
WTO 통보	WTO협정 발효후 3월이내 통보	매년 6월 정기통보	

*유예기간내 철폐

- 수출보조금 : 3년(개발도상국 8년, 최빈개도국 적용예외)
- 수입대체보조금: 3년(개발도상국 5년, 최빈개도국 8년)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시장경제로의 전환국에 대하여 금지보조금 철폐기간에 대한 우대제도를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보조금의 철폐기간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 수입 대체보조금의 철폐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과정(transformation into a market economy)에 있는 회원국은 금지보조금 지급계획을 WTO협정발효일로부터 7년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규정하였다.

(3) 세이프가드 제도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특징이 있다.

WTO체제 하에서 회원국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GATT 제19조와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 제정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다. GATT 제19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GATT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도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종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선별적 적용 가능성 여부, 세이프가드조치와 유사한 회색지대 철폐, 심각한 피해의 판정기준, 조사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하여 UR협상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세이프가드 협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그밖에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및 세이프가드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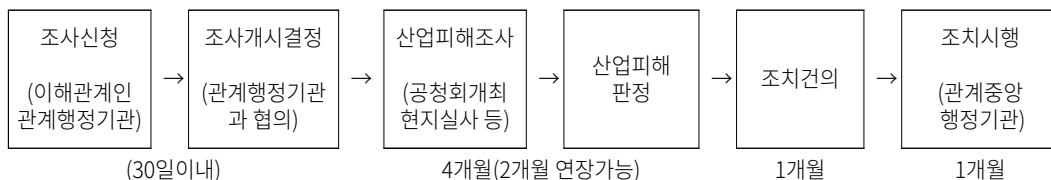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둘째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셋째는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이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사실이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관세양허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서, 양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하였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말한다.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수입증가는 수입수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 뿐 아니라,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포함한다. 즉, 수입수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할지라도 국내생산이 그 이상으로 감소폭을 보일 경우, 상대적 수입증가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여기서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며, "심각한 피해 우려"는 그러한 피해의 발생이 명백히 급박한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관련요인을 바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특히, 관련물품의 절대적·상대적 수입증가량,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고용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증가가 피해발생의 중대한 원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증가 추세와 피해지표의 악화추세간의 상호연관성이 존재하거나, 수입품 가격에 의해 국산품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증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피해를 수입증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그림 4.3.1>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한국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세이프가드는 총 34건이 제소되었고, 이 중 22건(64.7%)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었다. 1994년 이전에 25건이 제소되었고, 1995년

WTO 출범 이후 9건이 제소되었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 화학 제품 순이다.

<표 4.3.7> 연도별 세이프가드 현황

구분(단위: 건)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접수	25	1	3	-	1	1	-	1	1
신청철회	7	-	-	-	-	-	-	-	-
조사불개시	1	-	-	-	-	-	-	-	1
긍정판정	16	1	1	1	-	1	1	1	-
부정판정	-	1	1	-	-	-	-	-	-

구분(단위: 건)	'03~'12	'13	'14	'15	'16	'17	'18.4	계
접수	-	1	-	-	-	-	-	34
신청철회	-	1	-	-	-	-	-	8
조사불개시	-	-	-	-	-	-	-	2
긍정판정	-	-	-	-	-	-	-	22
부정판정	-	-	-	-	-	-	-	2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도덕한 행위 그 자체로서 일종의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내의 관련산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유발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등 대외교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동법 제5조 내지 제14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1조의3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불공정 무역행위는 총 362건의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20건(33.1%)에 대해 수입·제조 금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조사가 219건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위반 76건, 수출입 질서저해 65건 순이다.

<표 4.3.8>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신청현황

구분 (단위:건)	'87~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재권 침해	107	-	-	3	3	2	4	5	4	6	4	3	3
원산지 위반	41	-	1	3	3	6	4	-	1	-	-	1	2
허위·과장표시	-	-	-	-	-	-	-	-	-	-	-	-	1
수출입 질서저해	41	2	8	4	3	5	1	-	-	-	1	-	-
계	189	2	9	10	9	13	9	5	5	6	5	4	6

구분 (단위:건)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	계
지재권 침해	6	10	5	8	7	7	9	12	8	3	219
원산지 위반	3	2	3	1	-	3	-	-	1	1	76
허위·과장표시	-	-	-	-	1	-	-	-	-	-	2
수출입 질서저해	-	-	-	-	-	-	-	-	-	-	65
계	9	12	8	9	8	10	9	12	9	4	362

<표 4.3.9>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64	4	113	17

저작권	영업비밀	계
13	8	219

<표 4.3.10>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결과

제재	무혐의	관련기관 이첩	조사종결	조사중	계
120	101	40	93	8	362

3. 무역구제분야 국제협력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및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의 무역구제기관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무역위원회는 선진 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무역구제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매년 무역구제 선진국의 조사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이는 2001년부터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최근 무역구제 분야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이 포럼은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조사관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WTO로부터 엠블럼 사용 등의 지원을 받아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WTO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동 행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2017년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는 총 14개국에서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과 10여명의 조사관들이 참여하였다. 해당 포럼에서는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 : 이행 및 도전’, ‘2017~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참석자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주요 참석기관은 미국 상무부(DOC)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EU 통상총국, 중국 상무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인도 상공부,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등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기관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WTO에서도 매년 포럼에 참석하여 해외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장들과 세계 무역구제 동향 및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의 무역구제 기관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원)생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논의와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표 4.3.11> 역대 포럼주제

년도	주제
‘03년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
‘04년	무역구제, 각국의 경험과 향후 방향의 모색
‘05년	일몰재심
‘06년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07년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 ①각국의 무역구제제도 ②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현황 ③향후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년도	주제
‘09년	세계 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①세계금융 위기와 무역체제 ②반덤핑 동향 ③상계관세 대응
‘10년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①미국, EU, 중국,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②캐나다, 인도, 베트남의 무역구제제도 ③무역구제제도의 미래
‘11년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 ①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②재심관련 이슈들
‘12년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①세이프가드제도의 현황 및 재설계 ②무역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13년	세계 무역구제의 발전과 전망 ①FTA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전망 ②상계관세 제도 운영동향과 향후방향
‘14년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 ①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 제도 ②각 국의 무역구제 제도 운용 경험
‘15년	WTO 20주년, 무역구제체제의 성과와 도전 ①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발전과제 ②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경험 ③세이프가드 조치
‘16년	①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②반덤핑 리뷰
‘17년	①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 : 이행 및 도전 ②2017~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

(2) 양자협력

무역규모 증대와 무역마찰 확대 우려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주요교역국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우리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양국의 무역구제제도 정책동향 및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무역구제기관과 공동으로 무역구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는 조사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무역구제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협력채널을 마련한 중국과는 1998년 11월 한·중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종전의 중국 경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1999년 8월에 체결하면서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경무위 산업피해 조사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입공평무역국 및 산업피해조사국과 각각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이원적 구조로 협력채널이 구축되었다. 이후 2003년 3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경무부와 경무위가 상무부로 신설·통합됨에 따라 협의회를 일원화하여 2003년 12월부터 제4차 협력 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2005년 11월,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상무부장관이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회의 산하에 과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하였다. 2000년부터 매년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총 17회의 협력회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내용에 따라 무역 구제 이행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부터는 FTA 이행위원회와 정례협력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EU와는 2002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방문을 계기로 무역위원회 상임 위원과 EU집행위 무역구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EU 무역구제협력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부터 매년 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EU와의 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차례 개최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2012년부터 이전의 협력 회의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2년 11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당 작업반회의는 총 4차례 개최되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EU와의 협력채널을 통해 선진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습득하는 한편 전 세계적 최신 무역구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베트남과의 협력회의는 2009년 10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산업 무역부 장관간 MOU체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 데서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1차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진행했으며, 2011년 9월 2차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한·베 공동위원회, 베트남경쟁청 공무원 대상 무역구제 교육연수 등의 계기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2009년 체결한 MOU가 기간만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2016년 7월 한국무역위원회와 베트남경쟁청 간의 새로운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한국과 베트남 간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분야 이행위원회를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협력채널을 통해 양 국가 간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양자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주재 한국기업에 대한 제 3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양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제1절 무역 1조불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1. 수출입 동향 및 성과

수출입과 사무관 정민규

2017년 수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9억 달러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를 재달성 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 교역 비중도 사상 최대치인 3.3%를 기록하여, 전 세계 수출 순위는 2016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수출단가(+8.8%) 뿐 아니라, 수출물량도 5.4% 증가세가 지속되어 견고한 수출 증가세를 실현 하였다.

(1) 품목별 동향

주요 13대 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선박·철강 등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고, 이 중 6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하여 품목별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13대 주력품목 수출 비중은 과거 마지막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2014년 80.6%에서 2017년 78.2%로 하락하여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상세품목별로는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도 9.9% 증가하였다. 일반기계 수출도 사상 최대치인 486억 달러로 호조세를 보였으며, 석유화학 수출은 중국·아세안·미국·EU·일본·중남미·아세안·중동 등 세계 10대 주요지역에서 모두 15% 이상 증가하였다.

기업용 메모리와 전자제품(완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SSD(차세대 저장 장치)·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고부가 품목도 각각 3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 하였고, 화장품·생활용품·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도 13% 증가하였다.

요약

제1장
세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동향에 호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표 5.1.1> 주요 13대 품목 수출액 및 증가율

(단위:백만 달러, %)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반도체	62,647	9.6	62,917	0.4	62,228	△1.1	97,937	57.4
자동차	48,924	0.6	45,238	△7.5	40,155	△11.2	41,690	3.8
일반기계	46,355	4.8	45,532	△1.8	44,156	△3.0	48,607	10.1
무선통신	29,573	7.2	32,587	10.2	29,664	△9.0	22,099	△25.5
석유화학	48,214	△0.3	37,791	△21.6	36,164	△4.3	44,689	23.6
선박	39,886	7.3	40,107	0.6	34,268	△14.6	42,182	23.1
철강제품	35,543	9.4	30,201	△15.0	28,535	△5.5	34,211	19.9
컴퓨터	7,714	△0.6	7,746	0.4	8,406	8.5	9,177	9.2
가정용전자	15,375	△1.2	12,831	△16.5	11,343	△11.6	8,830	△22.2
평판DP	32,400	△9.8	29,716	△8.3	25,106	△15.5	27,379	9.0
섬유류	16,096	0.1	14,490	△10.0	13,807	△4.7	13,742	△0.5
자동차부품	27,977	2.3	26,807	△4.2	25,565	△4.6	23,134	△9.5
13대 품목	50,784	△3.8	32,002	△37.0	26,472	△17.3	35,037	32.4

<표 5.1.2>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단위:%)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반도체	10.2	반도체	10.9	반도체	11.9	반도체	12.6	반도체	17.1
2	석유제품	9.4	석유제품	8.9	자동차	8.6	자동차	8.1	선박류	7.4
3	자동차	8.6	자동차	8.5	선박류	7.6	선박류	6.9	자동차	7.3
4	선박류	6.6	선박류	7.0	무선 통신기기	6.2	무선 통신기기	6.0	석유제품	6.1
5	디스플레이 및 센서	6.6	디스플레이 및 센서	5.8	석유제품	6.1	석유제품	5.3	디스플레이 및 센서	4.8
6	무선 통신기기	4.9	무선 통신기기	5.2	디스플레이 및 센서	5.7	자동차부품	5.2	자동차부품	4.0
7	자동차부품	4.9	자동차부품	4.9	자동차부품	5.1	디스플레이및 센서	5.1	무선 통신기기	3.9
8	합성수지	3.8	합성수지	3.8	합성수지	3.5	합성수지	3.5	합성수지	3.6
9	철강판	3.1	철강판	3.3	철강판	3.1	철강판	3.1	철강판	3.2
10	플라스틱 제품	1.4	플라스틱 제품	1.4	플라스틱 제품	1.5	컴퓨터	1.7	컴퓨터	1.6
계		59.7		59.6		59.4		57.5		58.8

(2) 지역별 동향

세계 10대 주요시장 중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고, 중국·일본·EU·아세안·중남미·CIS·베트남·인도 등 8개 지역에 대한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하였다. 아세안·베트남·인도 등 3개 지역은 연간 수출액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국은 역대 3위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G2(중국·미국) 수출 비중은 전년도 38.5%에서 36.8%로 하락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도 진전되는 양상이다.

<표 5.1.3>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억 달러, %)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중국	1,459 (8.6)	26.1	중국	1,453 (△0.4)	25.4	중국	1,371 (△5.6)	26.0	중국	1,244 (△9.3)	25.1	중국	1,421 (14.2)	24.8
2	미국	621 (6.0)	11.1	미국	703 (13.3)	12.3	미국	698 (△0.6)	13.2	미국	665 (△4.8)	13.4	미국	686 (3.2)	12.0
3	일본	347 (△10.7)	6.2	일본	322 (△7.2)	5.6	일본	304 (11.6)	5.8	일본	328 (7.8)	6.6	베트남	478 (46.3)	8.3
4	홍콩	278 (△14.9)	5.0	홍콩	273 (△1.8)	4.8	베트남	278 (24.2)	5.3	베트남	326 (17.5)	6.6	홍콩	391 (19.3)	6.8
5	싱가포르	223 (△2.6)	4.0	싱가포르	238 (6.6)	4.1	일본	256 (△20.5)	4.9	일본	244 (△4.8)	4.9	일본	268 (10.1)	4.7
선진국		2,250 (△2.2)	40.2	선진국	2,340 (4.0)	40.9	선진국	2,201 (△6.0)	41.8	선진국	2,086 (△5.2)	42.1	선진국	2,420 (16.0)	42.2
개도국		3,312 (5.5)	59.2	개도국	3,334 (0.7)	58.2	개도국	3,026 (△9.2)	57.4	개도국	2,837 (△6.2)	57.3	개도국	3,287 (15.9)	57.3

요약

제1장
세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동성애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2.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추진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무역진흥과 사무관 윤삼희

우리나라의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15년) 91,693개사 → (16년) 93,963개사 → (17년) 94,378개사)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 추이가 다소 둔화된 실정이다. 수출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를 통한 수출저변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상용직 비중·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크게 기여하여 수출증대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판로다변화, 매출액 증가 등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내수에 머물러 있거나 수출이 중단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퇴직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을 '멘토'로 지정, 무역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수출 쉼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연계하여 수수료 할인, 가점제공 등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 등 유관기관 연계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14년 내수기업 500개사중 68개사가 첫 수출을 달성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5년 2,400개사(내수 1,474, 수출초보 926)를 지원, 875개사 성과(403개사 수출성공, 472개사 수출증진)가 있었으며, '16년 내수기업 5,000개사를 지원 1,709개사가 수출에 성공, '17년 5,690개사(내수 5,000, 거래선관리 690)를 지원 1,829개사 성과(1,557개사 수출성공, 272개사 수출증진)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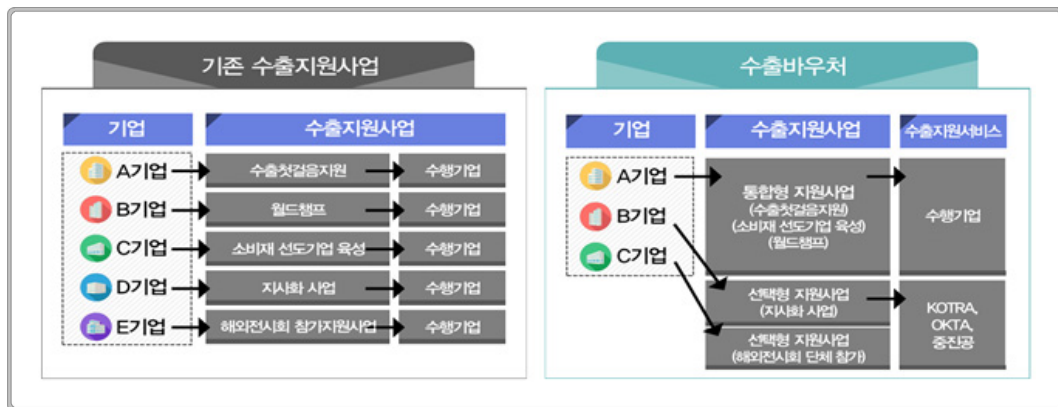
아울러, '17년에는 수출 전문위원(PM)을 기존 20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우수성과자 차년도 급여인상 및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밀착 컨설팅을 내실화 하였고, 소액수출(1만불 미만)이 발생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중단 방지를 위한 거래선 관리 서비스 도입 및 제공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최근 둔화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 추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업체뿐 아니라 수출업체가 무실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18년에는 既도입된 거래선 관리 서비스를 수출중단비율이 높은 '5만불 미만 수출 기업'으로 확대하고, 정식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수출지속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수출바우처 제도

무역진흥과 사무관 진승덕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지원항목과 지원서비스가 상이해 기업들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지원 규모가 큰 중기부와 함께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여러 수출지원사업을 하나의 지원체계로 묶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17년에 마련하였다. 기업들은 수출바우처 제도를 통해 다수 부처와 공공기관의 수출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일정 한도의 수출바우처를 부여받고 수출지원사업 메뉴판에서 수출바우처를 사용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기관을 맞춤형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참여기업 선정후 '17.5월부터 약 1,786억원의 수출바우처를 약 1.2만개 기업에 지급 시작하였다. 참여기업은 지급받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컨설팅, 브랜드개발, 해외인증, 전시회참가 등 수출준비 단계부터 해외진출까지 필요한 시장개척 전략과 시점에 맞춰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18년은 수출바우처 제도를 내실화하고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수출관련 부처로 확대를 추진하였다. 내수·수출중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서비스 메뉴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역량있는 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해 메뉴판에 확충하였다.

산업부는 1차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들의 바우처 사용이 마무리되는 '18.5월부터 기업들의 활용실적과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온라인 수출 활성화

무역진흥과 사무관 최윤석

① 국내외 주요 현황

시장통합(거대장벽 완화), 글로벌 결제시스템 및 물류시스템 발전 등으로 전세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 시장은 2014년 약 2천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18년에는 6천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전세계 무역규모량의 2014년 기준 1.07%에서 2018년 기준 2.79%로 전자상거래 교역이 새로운 무역채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4>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 전망

(단위:10억달러, 백만명)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세계 무역규모(A)	21,859	22,421	22,839	23,501	24,253
전자상거래 전체(B)	1,471	1,548	1,915	2,352	2,860
국경간 전자상거래(C)	233	304	400	530	676
(전체 무역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중: C/A)	1.07%	1.36%	1.75%	2.26%	2.79%
(전자상거래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중: C/B)	15.8%	19.6%	20.8%	22.5%	23.6%

출처: OECD, E-marketer, Ali Research

우수한 IT 인프라, 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화장품 등 소비재 상품의 해외인지도 제고, 한류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직접판매(B2C) 금액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5.1.5>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 및 구매 (B2C)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금액(증가율)	6,791	12,544 (84.7%)	22,825 (82.0%)	29,510 (29.2%)
온라인 해외직접구매 금액(증가율)	16,471	17,014 (3.2%)	19,079 (12.1%)	22,435 (17.6%)

출처:통계청

② 추진현황

‘18년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단계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의 노력과 우호적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 2018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금액은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첫째,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美 아마존, 中 타오바오 등)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밴더 초청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매칭 수출상담회 지원하였다. 코트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자사 상품을 Amazon(美), 타오바오(中)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약 100개 입점, 판매지원하였다. 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중인 유력 밴더(셀러)를 국내로 초청하여, 현지 소비·마케팅 트렌드 및 사업전략 공유, 입점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둘째,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중 국내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개최하였다. 국내 역직구몰과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 터키, 멕시코, 뉴질랜드 등 해외 현지몰이 동시에 참여하여 글로벌 한국상품 온라인 할인이벤트로 행사효과를 높였다. 정부는 SNS 등 입소문마케팅, 행사배너광고, 별도 행사페이지(한국관 등) 운영 등 홍보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로 행사참여몰 국제 특송비(EMS)를 인하하여 온라인 할인행사를 지원하였다.

셋째, 해외 배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현지에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반품처리지원센터를 구축운영 하였다. 인기상품을 현지 보세창고에 미리 입고, 보관 후 주문시 해외현지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주력국인 중국 현지에 보세창고 5개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그간 비싼 반품비용, 복잡한 국내 반입절차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하자, 고객 변심 등으로 해외현지에 발생된 반품의 국내반입을 지원하는 반품처리지원센터를 중국 현지(상해)에 설치하여 지원중이다.

(4) 무역보험 지원 강화

수출입과 서기관 이중엽

①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무역보험은 1992년 7월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수출 확대와 경제성장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역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7년 역시 수출 회복세 강화 및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였다.

요약

제1장
세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가. 대외변수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선제적 지원

중국 사드 피해 최소화 및 중국 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피해기업에게 무역보험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등 무역금융 애로를 총력 지원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한도를 감액 없이 연장하였고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역시 1개월 단축하는 등 신속·선제적으로 무역보험을 긴급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및 보험 한도 확대를 추진하였다.

나. 중소·중견기업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보험 서비스 질 제고

수출 통지, 수입자 신용조사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기존의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대해 우량 수출 기업 고객 요구에 부응하여 보장 한도 및 수입자 수를 대폭 확대한 우량 중소·중견기업 전용 신규 상품을 도입하였다. 또한 소액 서비스수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서비스종합보험 간편심사방식(Fast Track)을 시행하였다.

② 2017년 추진실적

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비중 역대 최고치 달성

중소·중견기업 우대 지원을 통해 2017년 지원실적, 지원비중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47.9억불, 지원비중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33.1%를 기록하였다.

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

2017년 추경예산에 700억원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편성하였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은 국가리스크 및 대금회수 위험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진출이 어려운 바, 추경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③ 향후 정책 방향

신흥국 중심의 세계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대내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무역보험이 먼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무역보험 지원 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무역 극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여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수출품목의 고도화 및 다변화 추진

(1)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무역진흥과 사무관 최윤석

‘18년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수출품목 다변화, 혁신형 무역성장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의약품·생활용품·패션의류·농식품)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한류 확산과 신흥국 중심의 중산층 성장 등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소비재의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8년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280억불의 목표를 세우고 新시장 개척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활용으로 소비재 수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촉진하고 있다.

<표 5.1.6> 15대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현황

(단위:백만불, %)

구 분	‘16년	연평균 (‘11~’16)	전년대비 증가율	17년 (12.20 누계기준)	증가율
합계	23,532	8.4%	12.0%	26,050	14.1%
농수산물	7,699	4.3%	7.0%	7,940	6.3%
생활유아	6,375	4.5%	6.1%	7,855	27.1%
화장품	4,194	38.3%	43.1%	4,804	18.4%
의약품	2,737	16.7%	19.5%	3,030	13.5%
패션의류	2,527	2.0%	-2.2%	2,422	-1.1%
총수출	495,426	-2.3%	-5.9%	556,291	16.5%
비 중	4.7%			4.7%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망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혁신적인 융합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제품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소비재 선도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바우처 제공(年 50개 기업 선정), 소비재와 예술작품의 협업을 촉진하는 아트콜라보 등은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新남방·新북방정책과 연계하여 한류 유망지역에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박람회도 매년 꾸준히 개최 추진 중이다. 특히, ‘17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류박람회는 한국 스타와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에도 우리 프리미엄 소비재의 마케팅과 新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무역정책과 사무관 이주노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중심의 수출 정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 유발인원 : 상품 8.2명, 서비스 21.3명)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증가 추세('06 : 572억불 → '16. 928억불)이나 제조업 위주의 정책지원으로 상품 수출에 비해 저조한 상황('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이다. 이에 산업부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조직·사업을 개편하여 서비스 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교육·문화·복지·국토 등 11개 부처 및 유관기관, 업종별 협·단체 및 유망기업 등)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KOTRA에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17.8.1)를 출범시켜 해외 마케팅 사업의 서비스기업 우대지원과 지원확대를 추진하였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는 수출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성장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고, 세계 경제와 산업·무역의 중심축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발표('17.12.28)하였다.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은 '22년까지 세계 10위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크게 네 가지 전략(세부 81개 과제)을 통해 서비스의 수출동력화를 추진한다. 첫째 창업과 수출 첫걸음부터 서비스 R&D·인력·지재산권 보호까지 수출형 서비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22년까지 글로벌 서비스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서비스기업의 수출 전과정을 아우르는 수출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현지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 확충, 서비스수출 맞춤형 무역보험 신규·개편 등을 추진한다. 셋째 FTA 고도화를 통해 해외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진출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며, 넷째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분야별(콘텐츠·교육·의료·물류·소프트웨어·관광·금융·지식재산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하고 아울러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정책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서비스 업종별 수출업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수출애로 해결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무역기반 확충

(1) 전자무역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과 사무관 권영무

전자무역(Paperless Trading)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를 통해 무역업체는 무역업무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산업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전자무역 단일창구

(Single Window)인 uTradeHub를 구축하여, 외환, 수출입요건확인, 수출환어음 매입(e-Nego) 등에 이르는 무역 전 과정의 전자화를 실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FTA Korea 서비스로 무역업체들이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자율발급 등 FTA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제공으로 현재 14,000여 수출업체가 119,000건 이상의 FTA 원산지판정 및 서류발급 서비스 받고 있다.

수출의 뒷받침이 되는 외화획득용 거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전자화를 통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효율화도 적극 추진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제출 업무의 전면 전자화를 시행하였다. 2017년부터 외화획득용 거래의 수출실적 인정금액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무역대금 결제의 경우, 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은행간 중복결제 사기를 확인할 수 있는 O/A(청산결제) 한도관리 등을 외국환 은행에 제공하여 무역사기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현재('17.12월 기준) 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은 80,000여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 등이 이용 중이며, 연간 39,000만 건(875종)의 전자무역문서를 중계하고 있다. 각종 서류의 전자적 처리로 무역업체와 유관기관 등이 누리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6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전자무역의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탄자니아, 케냐 등 총 30개국, 670억 규모의 해외수출 실적을 이루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무역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소액·다품종·다량거래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기존 무역방식의 제도 및 인프라가 이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자무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 청년 무역인력 양성

무역정책과 사무관 황호준

최근 복합무역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인력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은 무역실무와 외국어뿐만 아니라 마케팅, R&D, 기술, 금융 등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 상황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대학의 무역 교육과 수출입현장 실습을 동시에 실시하는 글로벌무역 전문가양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7월 “지역전문가 육성 및 공급전략”을 수립하면서 동 사업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으로 개편하여 신흥시장 등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령 및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동 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내에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단을 구성하고 3-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무역협회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7년도 제11기는 전국에서 23개 대학이 동 사업에 참여하여 총 698명의 교육 참가자 중 최종 676명이 수료하여 96.8%의 수료율을 달성하였으며, ‘18년도 제12기는 20개 대학이 참여하여 각 대학별 30여 명씩 총 59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5.1.7> 참여대학 현황(‘18년~’20년)

권역	대학 수	참 여 대 학 교
서울/수도권	6	건국대(동남아), 단국대(동남아), 숭실대(유럽), 인하대(중앙아), 한국산업기술대(중남미), 한국외대(용인/동남아)
강원권	2	강원대(동남아), 한라대(인도)
충청권	3	남서울대(동남아), 순천향대(동남아), 충북대(인도)
경상권	6	계명대(동남아), 동국대(경주/중앙아), 신라대(동남아), 영남대(중동), 인제대(중앙아), 한국해양대(유럽)
전라권	3	광주대(인도), 목포대(동남아), 전북대(동남아)
계	20	

대학의 사업단은 선정단계부터 중남미, 중동, 동남아, 인도, 유럽, 중앙아 등 6개 시장으로 특화시켜 각 기수별로 1년 3개월 동안 기본교육 50시간, 심화교육 290시간, 현장무역실습 140시간 등 총 480시간 이상의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3)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무역진흥과 사무관 박두강

최근의 전시산업 트렌드는 과거와는 달리 전시장의 경우 단순히 그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전시장의 복합화, 현대화를 추구한다. CES(소비자가전박람회)가 개최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의 경우 컨벤션센터 디스트릭트(LVCC District)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장 일대를 상업시설과 엔터테인먼트시설, 숙박시설로 복합개발 중에 있다.

전시회는 자국 유명전시회를 해외로 수출(Branch 전시회)하는 추세이며, 전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6년 말 세계 3위 주최사인 UBM는 세계 10위권 주최사인 Allworld Exhibitions을 합병하며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2011년 KINTEX 제2전시장이 건립됨으로써 전시면적 10만㎡를 갖춘 단일 전시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전시장면적 기준으로 세계 20위권 수준에 이르렀다. 2010년 이후 신규전시장도 3개가 건립된 바 있다. 인근 경쟁국가인 중국도 2015년 전시장면적 40만㎡로 세계 2위 전시장인 NECC를 상하이에 건립했고, 2020년에는 전시장면적 50만㎡로 세계 1위가 확실히 되는 전시장을 선전에 건립 중이다.

현재 KINTEX, SETEC, 잠실 전시장 등의 증개축·신축이 논의되는 등 우리나라도 전시장 인프라의 확충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1.8> 국내지역별 전시장 신·증축 계획('17. 12월)

(단위: 년, ㎡)

지역	전시장명(가칭)	건립예정연도	전시면적	비고
서울시	서울역전시장	-	8,000㎡	
수도권	킨텍스	2021년	108,556㎡	
	송도컨벤시아	2019년	8,416㎡	
	성남전시장	2022년	9,100㎡	
	수원전시장	2018년	8,400㎡	
중부권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021년	10,020㎡	
	오송전시장	2021년	10,368㎡	
호남권	전주전시장	-	5,000㎡	
동남권	CECO	2018년	3,517㎡	
	울산전시장	2020년	8,000㎡	
	ICC Jeju	2020년	5,000㎡	
총계			184,377㎡	

* 산업부의 신증축 심의를 통과한 신증축 전시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과 주무관 성다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WIR2017)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 실적은 전년대비 2% 감소한 1조 7500억 달러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보였다.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외국인투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표 5.2.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십억불,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세계	1,499.1	1,190.0	1,383.7	1591.1	1592.5	1443.2	1323.8	1774.0	1746.4
(증감률)	(△21.4)	(△20.6)	(16.2)	(14.9)	(0.8)	(△9.3)	(△8.2)	(34.0)	(△1.6)
선진국	788.9	654.4	677.4	824.2	856.9	684.2	563.3	984.1	1032.3
(증감률)	(△38.5)	(△17.0)	(3.5)	(21.6)	(3.9)	(△20.1)	(△17.6)	(74.7)	(4.8)
개도국	592.7	473.8	642.6	687.5	670.9	674.6	703.7	752.3	646.0
(증감률)	(10.1)	(△20.0)	(35.6)	(6.9)	(△2.4)	(0.5)	(4.3)	(6.9)	(△14.1)

*자료:World Investment Report 2017(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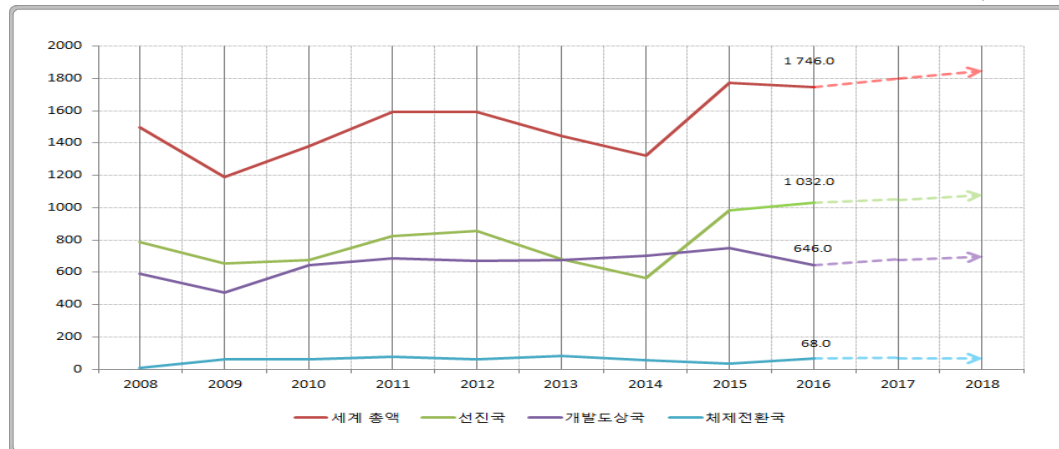
2016년 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하여 1조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5%에서 59%로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유럽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였으나, 북미와 기타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유입액은 소폭 상승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일부국가의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원자재 약세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 14% 하락하여 6,4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중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홍콩은 2015년 최고치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하였고, 아프리카 외국인투자도 줄어들었다.

UNCTAD는 2017년 외국인투자규모가 1.8조 달러로 2007년의 최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2016년 수준을 유지하고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의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의 회복,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2018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5.2.1> 외국인투자 유입 실적 및 추정치

(단위: 억불)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유치과 사무관 송상현

① 개요

2017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22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고,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상승추세를 유지하였다. 도착기준으로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2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승추세는 외국투자자들의 한국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1~3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1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하였으나, 4분기에 분기기준 사상최대 실적인 93.6억 달러를 달성함에 힘입어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4분기 사상최대 실적은 화공과 전기·전자 중심 제조업투자 증가세와 EU·중동·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에 기인하였다.

<표 5.2.2> 외국인 투자 실적 (신고기준)

(단위:백만불,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 액 (증감률)	13,073 (13.8)	13,673 (4.6)	16,286 (19.1)	14,548 (△10.7)	19,000 (30.6)	20,910 (10.1)	21,299 (1.9)	22,943 (7.7)

② 주요 특징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의 첫번째 특징은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가 공고히 되었다는 점이다. 201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3년 연속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229.4억 달러를 달성하여 안정적으로 200억 달러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7년 4분기에 분기별 최대실적을 달성한 원동력은 신정부 출범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산업구조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조업 투자가 큰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제조업 투자는 2014년 76.5억 달러 달성 이후 3년 만에 7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석유제품 가격경쟁력 회복(유가상승)에 따른 석유화학·금속분야 설비투자 증대와 디스플레이(OLED), 2차전지 소재(양극재, 분리막 등) 관련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자율차 부품, 드론, 로봇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은 기술이전과 신산업 시장창출에 있어 외국인투자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세 번째, IT서비스, 게임, 콘텐츠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신산업분야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라우드, 핀테크,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해 외국의 선도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IT인프라 및 인력이 결합된 투자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까다로운 한국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상품은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시장테스트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EU지역은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해 7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고, 미국은 금리인상, 세계개편에 따른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21.5% 증가한 47.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일본은 경기회복 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4년 만에 투자 증가세로 전환되어 1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우 당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리·감독 강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큰 폭(60.5%)으로 감소하여 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5.2.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구 분	2016					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549	1,264	1,260	803	3,876	365	2,081	458	1,805	4,710	21.5
일 본	161	531	194	359	1,246	407	412	867	156	1,842	47.9
E U	1,763	2,447	1,110	2,076	7,396	876	1,339	932	3,915	7,062	-4.5
중화권	1,434	1,424	1,667	2,205	6,730	1,935	928	782	935	4,579	-32.0
중 국	375	332	955	386	2,049	163	315	130	201	809	-60.5
기 타	1,394	1,738	976	2,624	6,732	268	980	952	2,549	4,749	131.6
전 체	4,241	6,313	4,495	6,250	21,299	3,851	5,740	3,991	9,361	22,943	7.7

* 중화권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투자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석유화학, 전기·전자 분야)와 금속 중심의 신소재 투자, 바이오 분야 투자가 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신고기준으로 제조업 투자는 41.2% 증가한 7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업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한 154.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년 연속 1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IT서비스업 분야 투자가 활발함과 더불어 기술력을 지닌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형 투자가 확산중인 것이 특징이다.

<표 5.2.4> 업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백만불, %)

구 분	2016					201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제조업	1,264	1,587	1,466	815	5,132	971	1,860	1,328	3,087	7,247	41.2
서비스업	2,951	4,322	2,953	5,286	15,512	2,818	3,866	2,651	6,124	15,459	-0.3
기 타	27	404	76	148	655	63	14	12	149	238	-63.7
전 체	4,241	6,313	4,495	6,250	21,299	3,851	5,740	3,991	9,361	22,943	7.7

*자료: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형 투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도기술(IoT, 로봇, 핀테크) 분야와 주력산업 분야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5% 증가한 1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M&A형 투자는 한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가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5.4% 증가한 7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5.2.5> 유형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백만불, %)

구 분	2016					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M&A형	1,044	2,255	929	2,046	6,274	793	912	1,089	4,449	7,243	15.4
그린필드형	3,198	4,058	3,565	4,204	15,025	3,058	4,828	2,903	4,911	15,700	4.5
전 체	4,241	6,313	4,495	6,250	21,299	3,851	5,740	3,991	9,361	22,943	7.7

③ 20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49.3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하면서 2017년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였다.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2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27.1억 달러를 상회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분기 외국인투자는 2017년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여전히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EU·미국·중국 등 주요 대한 투자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본은 소폭감소세를 보였다. 한·중관계 정상화가 중국발 투자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된다. 업종별로는 밸류체인 형성을 위한 합작 투자 증가로 제조업이 큰 폭(+58.6%)으로 증가하였고,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도 견조한 증가세(18.6%)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이 전방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한 증설투자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고(+16.2%), M&A형 투자도 대형 딜(Deal) 성사에 따라 큰 증가세(+73.8%)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저하 가능성,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미국·EU 등 선진국 중심의 뚜렷한 세계경기 회복세와 증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감안할 때 전세계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외국인투자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간 경제교류 회복세 및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가능성 등 호재요인이 존재하여 현재의 상승기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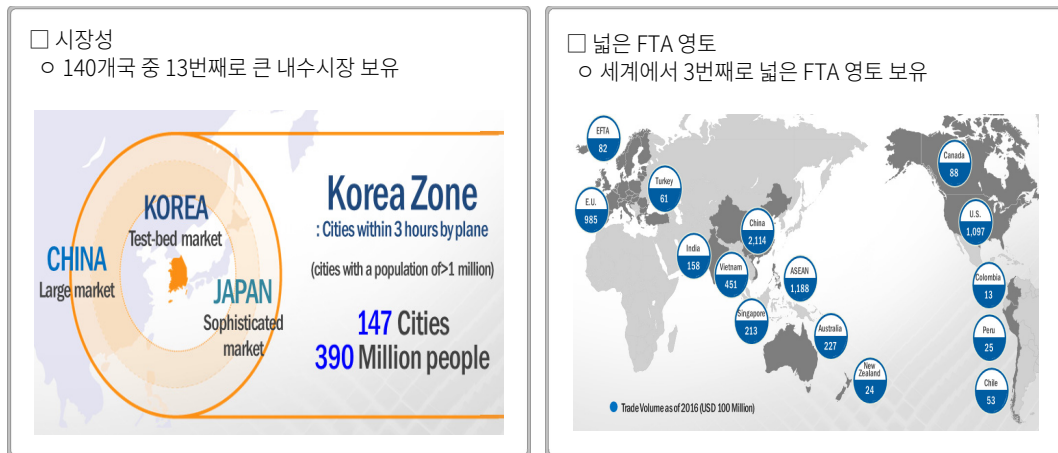
2.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혜원

(1) 개요

당초 신보호무역주의, 북한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경제여건에도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7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190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2018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한국의 투자환경이 전 세계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17년 무디스(AA), S&P(AA), Fitch(AA-) 등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을 매우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가 더욱 높아진 것도 주요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의 호조세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타결된 FTA 효과 및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전략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IR)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정책 추진으로 국내 투자매력도가 향상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2.2> 한국의 시장성 및 FTA 경제영토



(2) 2018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중점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및 범정부적 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2018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외국인투자 정책목표로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하였으며, 시책의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유치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이다.

<그림 5.2.3> 2018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



① 고용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유치기반 구축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턴 지원 등 투자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기술 업종 중심, 균형발전·동반성장을 고려한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여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무역 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를 통합·개편하고, 통합특구 내에 핵심기능별 정책지원 다변화와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특구를 4차 산업혁명의 허브로 육성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②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31개 세부사업) 분야에 대한 타겟기업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략적 IR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동향 등의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외투유치 전략수립에 활용하고, 외국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해외투자자들 간 합작투자 유인을 위한 외투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해외 투자거점무역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한 해외무역관 역량 강화 등 투자유치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그림 5.2.4> 12대 신산업 주요 타겟분야 예시

산업		세부 분야	산업		세부 분야
바이오		· 시밀러, 신약개발, 의료기기	항공드론		· MRO 등 부품, 드론, S/W
반도체		· 장비·부품, 산업용가스, 후공정·검사	석유화학		· 신소재, 다운스트림, 철강
2차전지		·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소비재		· 일반, 고급 소비재
자동차		· 부품제조, 미래형 자동차	콘텐츠IT		· 게임·연예, IT 서비스
로봇		· 산업용 로봇, 생활용 로봇, 스마트팩토리	부동산		· 매입, 개발
에너지		· 신재생, 폐기물처리, 원전해체	금융		· 은행·보험, 핀테크·금융결제

③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우선, 국내 구직자의 채용기회 확대 등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외투기업을 위한 맞춤형 채용지원, 채용박람회 확대와 같은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등 고충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털을 통한 외투 관련법령 영문안내 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포털을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등 정보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외투기업·주한상의 간담회를 통한 현장밀착형 애로해소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고, 교통, 주거, 외국어 사용환경, 의료서비스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기업상와 고위급 및 실무자급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의채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투자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새정부의 노동정책, 법률·규제,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하였다.

<그림 5.2.5>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상의 간담회 활동

	• (일시) '17.9.26. • (참석) 산업부 장관,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외투기업 대표 등 30여명 • (주요내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외국인투자 정책 소개, 외투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 (일시) '17.12.7. • (참석) 산업부 장관,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외투기업 대표 등 60여명 • (주요내용) 국내 투자확대·고용창출에 기여한 외투기업에 대한 감사 및 활발한 투자 당부, 외투기업의 한국투자 성과 사례 공유 등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환경의 선진화와 지속적 투자유치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여러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국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애로해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투자유치과 사무관 류종민

(1) 외국인투자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목표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여, 3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라는 당초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하였다. 2018년을 전망해 보면, UNCTAD는 2018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가 2017년의 회복세에 이어 1.85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moderate rise)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도 현 추세상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시대가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양적,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양적으로는 2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여,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300억 달러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한국의 GDP, GFCF(총 고정 자산형성) 대비 외국인직접 투자 비중은 각각 15% 미만, 3% 미만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양적인 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적으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기여하는 외투유치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유치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기업이 한국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망 산업 중 12개 산업을 집중 유치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별 타겟기업을 설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유치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그림 5.2.6> 12대 신산업별 주요 타겟기업 예시

산업	타겟기업	산업	타겟기업
바이오	Novartis(瑞), Sanofi(佛), J&J(美)	항공드론	Boeing(美), Eurojet Turbo(獨), CAE(캐)
반도체	AirProducts(美), JCET(中), Lam(美)	석유화학	Eastman(네), Shell(英), Aramco(사우디)
2차전지	Umicore(벨), TORAY(日), Shaft(佛)	소비재	Dyson(英), Decathlon(佛), Ikea(스웨덴)
자동차	Denso(日), InfineonTech(獨), Rohm(日)	콘텐츠IT	Wework(美), Alibaba(中), Softbank(日)
로봇	Kawasaki(日), Aethon(美), Fumate(中)	부동산	Caesars Palace(美), Legoland(英)
에너지	ENGIE(佛), VEOLIA(佛), Babcock(英)	금융	AXA(佛), BNP PARIBAS(佛)

(2) 성과 중심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외국인투자(신고기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U, 미국, 일본, 중국(이하 4대 투자유치대상국)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투자설명회(IR) 및 잠재투자자 대상 면담 등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투자자 중복접촉 방지 및 투자유치활동예산의 효과성 극대화,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방지 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 분절적으로 추진하던 투자유치 활동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통합하는 통합 IR 방식을 도입하였다. 미국, 일본, EU, 중국(중화권)을 대상으로 전개한 통합 IR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평균 15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매물 피칭, 1:1 상담회, 투자자 방문 면담, 라운드 테이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자와 접촉하는 동시에 실제 투자신고서를 접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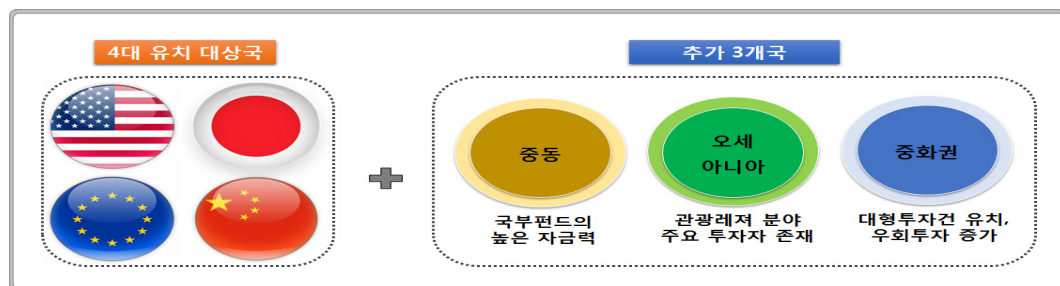
2013~2016년 동안 대한(對韓)투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투자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고, 양국 간 긴장관계로 일본 투자자에게 형성될 수 있는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6년 5월 도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한일 투자협력의 성과와 투자협력 확대필요성,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 등을 강조했으며, 10월에는 신산업 분야 유망 투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밸류체인 구축방향, 한국이 투자처로서 가지는 이점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기반이 되어, 2017년 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하여 해외 잠재 투자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매력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외국인 투자주간(Foreign Investor Week)을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동 행사를 통해 방한 해외투자자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요산업의 동향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국내기업 및 지자체와의 투자상담과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한국투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투자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16년에 외국인 투자주간 주제인 “미래 신산업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맞춰 5대 신산업(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고급소비재, 첨단신소재, ICT 제조융합)을 주요 테마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해당 행사에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 등 주요국 투자가 16개사가 참석하여 신산업 분야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 직후, A사는 화장품 등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약 2.5억 달러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지의 13개 외투기업이 참가하여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3) 투자유치시장 다변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투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대 투자유치대상국(EU,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유치 집중도를 줄이고, 유치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8년부터 중동, 오세아니아, 중화권 등 3개 지역으로 유치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5.2.7> 다변화 방안



2018년 2월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IR을 추진하여 1.5억 달러의 유치성과를 창출했으며, 카자나 내쇼날(말레이시아 국부펀드), EPF(말레이시아 연기금) 등 유력 투자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향후 투자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성과도 창출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중동지역의 UAE·쿠웨이트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KOTRA IK 등 공공기관, 지자체, 외투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동 IR은 유치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동 투자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중동지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AIM 2018과 처음으로 연계해 개최하는 것으로, 설명회, 라운드테이블, 1:1 면담, 스타트업 홍보관 설치, 피칭행사 참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였으며, 유력 투자자로부터 실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4) 고위급 IR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분위기 조성 및 유치성과 창출에 효과가 높은 고위급(장차관) IR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재로 런던(英), 파리(佛)에서 EU의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영국에서는 전통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 고부가가치 제조업, 신성장산업(바이오 등)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총 14개 기업이 참석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고급 소비재, 친환경 산업,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총 12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에서 2차례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EU 투자자들로부터 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금년 외국인 투자 목표인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17년 3분기 기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던 EU 지역을 전략적 타겟으로 설정하고, 취임 후 첫 장관주재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0억 달러 초과달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 고위급 유치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4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재로 미국 뉴욕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고위급 IR을 통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미국發 對韓투자 모멘텀 지속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IT(EMP, WeWork), 바이오(Pfizer 등), 항공(Boeing 등), 석유화학(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비롯,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3.1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나머지 기업들에게서도 0.9억 달러의 투자의향을 확인함으로써, 1분기에 조성된 미국發 대한투자 증가세를 2018년 하반기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해외투자과 서기관 윤제민

해외투자과 주무관 김일호

중국은 WTO 가입(2001년)이후,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및 고정된 통화가치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 낮은 생산성, 운송비용 등 생산비용 증가와 환경 및 노동규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에 감소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ASEAN)을 포함한 신흥국들에서도 임금, 지가 등 생산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핵심기술 유출 우려, 예측하기 어려운 기업규제 등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 등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 변화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를 보다 활발히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을 제정하고, 조세 감면, 입지지원, 재정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여 해외에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지원 중에 있다.

유턴법상 유턴기업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과 최대 4억원 한도까지 도입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견·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등 일정요건 충족시, 총 60억원 한도내에서 투자비의 8~40%를 입지설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고용창출인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년간 지원 중이다. 그리고 현지 우리기업들이 합법적인 청산 후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의 주요 장애요인인 현지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 컨설팅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한편, 2016년 12월 정부는 해외진출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일자리 창출, 국내투자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세제를 개편하여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관세감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최대 감면한도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다. 그리고 법인세·소득세와 관세 감면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고용보조금의 경우도 지급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유턴기업에게 다양한 입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허용되던 국유재산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턴기업에도 허용키로 하였고, 현재 유턴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 4월에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유턴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러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KOTRA에 유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향기업 발굴, 지원제도 안내 및 선정신청서 접수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무역관 내 유턴기업 지원데스크와 헬프 데스크를 통해 현지 법인의 국내복귀를 지원 중이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 중국에 5개소 유턴기업지원 데스크를, LA 등 7개 지역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KOTRA 유턴기업 지원센터 및 해외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의향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유턴 정책 홍보 및 국내복귀 컨설팅을 통해 유턴 활성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물론 유턴정책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책효과를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 일자리 창출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과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건실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투자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복귀 후에 고부가가치 제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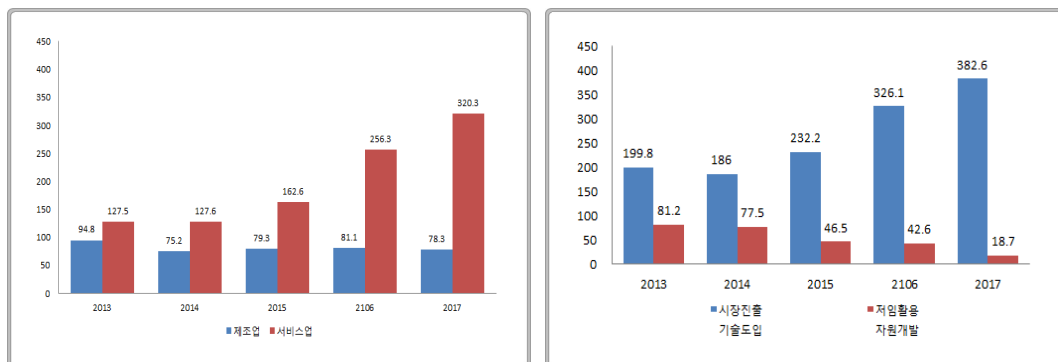
(2)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해외투자기업 지원 현황

해외투자자과 사무관 이영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에 송금액 기준으로 436.9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조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투자목적별로는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와 현지시장 및 제3국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저임활용과 자원개발 목적의 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2.8> 업종별, 목적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불)



이와 같이 최근의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과거 저임활용 중심의 개도국형 투자에서 시장 및 기술 확보 중심의 선진국형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차원에서 해외 투자는 기업에게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투자진출 대상국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201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14개국에 21개소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한국투자지원센터에서는 우리기업이 성공적 현지 정착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경영·투자 상담, 애로 해결지원, 투자 진출기업 경영실태 조사,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 산업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3) 해외 M&A 지원

해외투자과 사무관 이재익

해외 M&A란 국내 기업이 국경을 넘어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M&A는 글로벌 유망기업의 선진 기술, 유통·판매망, 브랜드 가치 등 경영 자원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영 전략이다.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GE 등 글로벌 선두기업들은 이미 M&A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업종,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해외 M&A를 급격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하여 해외 M&A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12년 12월, 우리 기업의 해외 M&A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수출 증대 등을 위해 ‘해외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2월에는 Kotra 내에 ‘해외 M&A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해외 M&A를 추진할만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드물고,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타겟인 소규모 M&A의 경우 고위험·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투자가 부족하여 정부기관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M&A 단계별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략수립 - 매물발굴 - 실사·협상 - 사후관리 등 M&A의 전주기에 걸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무역관 중 M&A 전문 무역관을 선정하여 딜소싱 및 M&A 실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해외 M&A 활성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해외 M&A 지원기반을 공고히 했고, 2015년 6월에는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된 외환 및 금융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해외 M&A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M&A

지원센터를 통해 2017년 말까지 총 41건의 중소·중견기업 해외 M&A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M&A는 새로운 시장과 선진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여 글로벌 속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5. 미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준비

남북경협팀 사무관 박관규

(1) 남북교역 동향

남북 교역은 '80년대 후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1988년 10월 7일 대북 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대북 교역을 공식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산 상품 반입액은 1989년 19백만불을 시작으로 2007년 665백만불(개성공단제품 제외)까지 확대되었으나, 2010년 5·24조치로 개성공단 제품과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남북한 교역이 전면 중단되어 그 실적이 2011년 이후 거의 전무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10일 이후에는 개성공단까지 가동이 전면 중단되어 남북교역은 전무하게 되었으며, 남북교역 실적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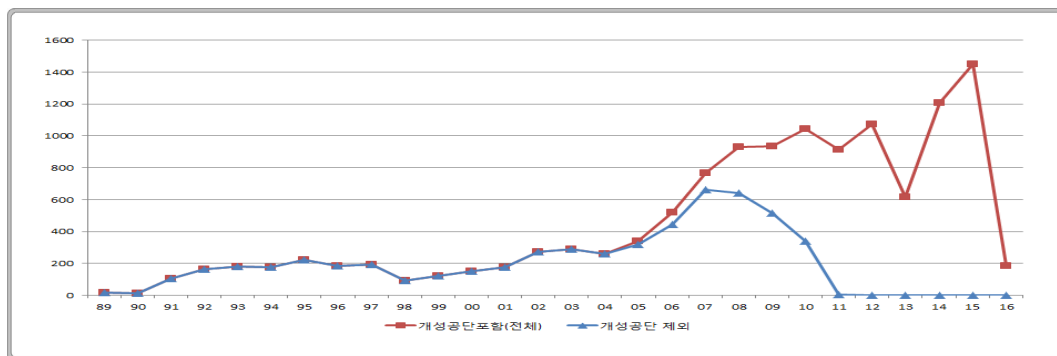
<표 5.2.6> 남북교역 및 북한산 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89	'05	'07	'10	'11	'12	'13	'14	'15	'16
교역액	18.7	765.3	1,797.9	1,912.3	1,713.9	1,971.3	1,136.4	2,342.6	2,714.5	332.6
반입액	18.6	340.3	766.3	1,043.9	913.7	1,074.0	615.2	1,206.2	1,452.4	185.5
개성공단 제외	18.6	320.5	665.2	338.7	4.7	0.8	0.6	0.4	0.4	0.0

* 자료 : 통일부

<그림 5.2.9> 북한산 반입 추이



개성공단 폐쇄 이전인 2015년의 남북교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적 거래(개성공단 반출입, 위탁 가공 교역, 일반교역 등)는 2015년 27억 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고, 비상업적 거래(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등)는 1,018만 달러로 전년대비 146.5%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24 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27억 4백만 달러로 100%이며, 5·24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위탁가공은 교역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거래유형별 현황

(단위 : 백만불, %)

연 도	총 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소 계	개성공단	위탁가공	일반교역	기타	
'07	1,798	1,233	441	330	461	199	367
'08	1,820	1,617	808	409	400	94	108
'09	1,679	1,607	941	410	256	36	36
'10	1,912	1,879	1,443	318	118	11	23
'11	1,714	1,703	1,698	4	0.2	1	11
'12	1,971	1,962	1,961	-	0.843	0.004	9.064
'13	1,136	1,133	1,132	-	0.589	0.136	2.947
'14	2,343	2,339	2,338	-	0.178	0.520	4.13
'15	2,714	2,704	2,704	-	0.183	0.553*	10.175
'16.2	332	331	331	-	0.034	0.005	1.093

* 금강산관광 : 이산가족 상봉 관련 물품 포함

한편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보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북한의 2015년 전체 대외무역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60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수입의 0.16%를 차지하며, 69위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의 0.13%를 점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2005년 52.6% 이래 지속 상승하여 2014년 처음으로 90%를 넘고 2015년에 최고치인 91.3%를 기록하였다.

<표 5.2.8> 북한의 대중국 교역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2	'13	'14	'15	'16
교역 총계	6,013 (6.8)	6,547 (10.4)	6,864 (4.8)	5,710 (△16.8)	5,826 (7.3)
수 출	2,485 (0.9)	2,914 (17.3)	2,841 (△2.5)	2,484 (△12.6)	2,634 (6.1)
수 입	3,528 (11.5)	3,633 (3.0)	4,023 (10.7)	3,226 (△19.8)	2,856 (8.6)
무역수지	△1,043 (48.8)	△719 (△31.1)	△1,182 (64.4)	△742 (△37.2)	△558

(2)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

현 정부 들어 2017년 7월6일 대통령께서는 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괴르버 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평화구상」 발표(7.6), 대북 5대기조와 원칙을 천명하셨다. 또한 정부의 대북경제 기본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100대 국정과제 중 남북경협 과제로 포함되었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서해권, 비무장지대의 남북 경제협력 H벨트를 물류·교통·산업·자원·관광·환경 등 범정부적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통일부에서 관련T/F를 구성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이다.

‘베를린 구상’ 대북 5대 기조와 원칙

- ①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추구
 - 남북이 함께 6·15,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 통일 불추구
- ②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북핵 폐기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 우려 해소 △북미/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동북아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진
- ③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통해 평화의 제도와 추진
 - 남·북·관련국간 북핵·평화체제에 포괄적으로 접근,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 ④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 북핵문제 진전 및 여건 조성시 추진, 평화·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 형성
- ⑤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지속
 -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접경지역 수해·병충해 등 분단피해 남북 공동대응 △민간·지역간 교류 지원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협력 확대

<그림 5.2.10>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비전	한반도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의 개막
목표	❶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❷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❸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원칙	❶ 정경 및 민관 분리 : 안보와 경협 병행,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❷ 포괄적 호혜주의 : 유무상통 원리, 상호보완성, 포괄적 협력 ❸ 국제규범 준수 : 시장경제 원칙, 국제성, 투명성 확보 ❹ 국제적 합의 기반 : 일관성, 국민 공감(합의), 단계적 접근
4대 핵심정책	❶ 환동해 경제벨트 ❷ 환황해 경제벨트 ❸ 접경지역 평화벨트 ❹ 하나의 시장 협력

제3절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및 국내 보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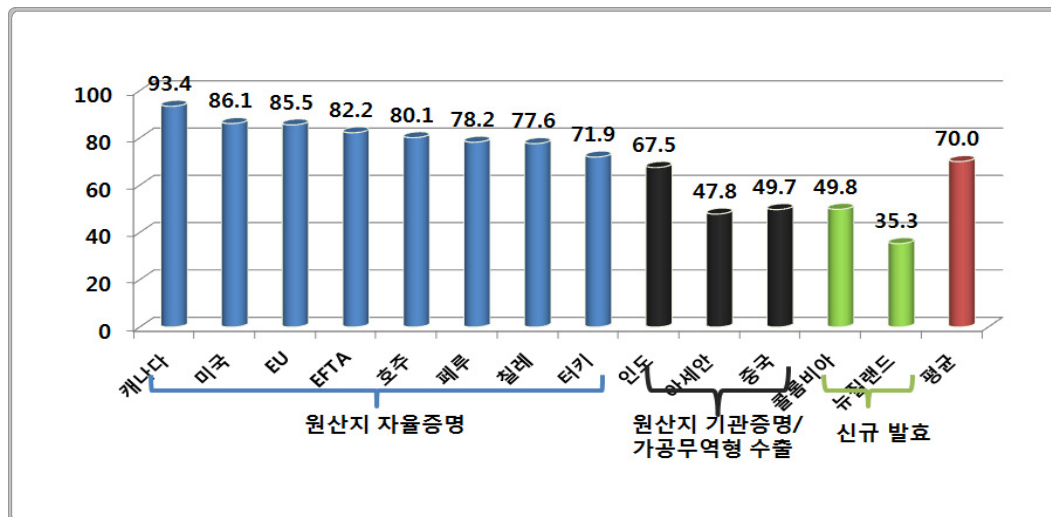
1. FTA 수출 활용 현황

활용촉진과 사무관 신영수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세계 52개국과 총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77% 수준이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72.4%에 이르렀다. 이러한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FTA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상대국 내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FTA 네트워크 확충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FTA 활용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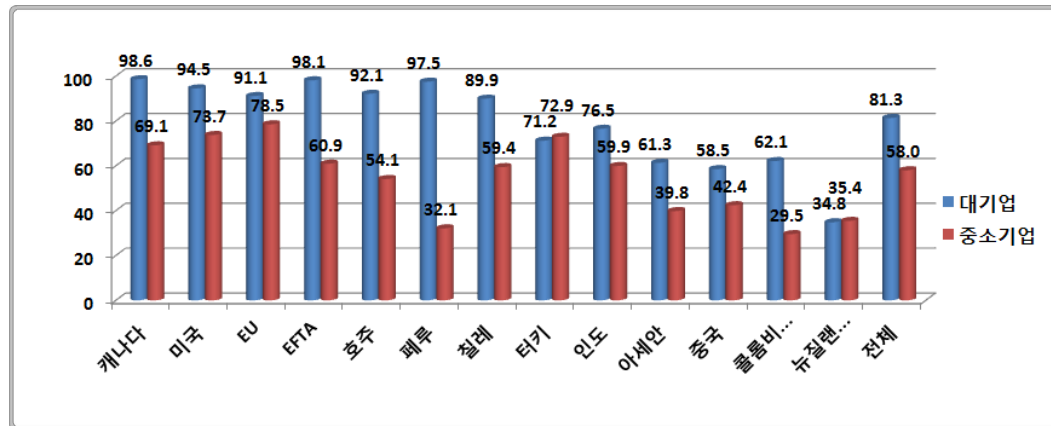
FTA 수출 활용률은 우리 기업이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출액"에 대한 "실제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액"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2017년도 FTA 수출 활용률(15개 FTA 기준)은 전년 대비 6.2%p 증가한 70.0%로, 협정별로 살펴보면 한·캐 FTA 수출 활용률이 93.4%로 가장 높고, 한·미국(86.1%), 한·EU(85.5%), 한·EFTA(82.2%), 한·호주(80.1%) 순이다. 반면, 한·인도(67.5%), 한·중(49.7%), 한·아세안(47.8%)의 경우 발효시기에 관계없이 다소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 증명방식이 기관 발급 방식으로 까다롭고, 가공무역 규모가 높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5.3.1> '17년도 협정별 수출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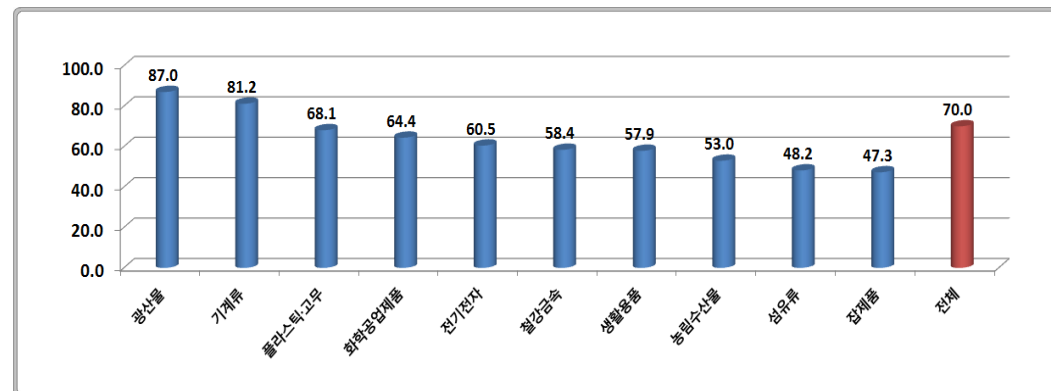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비해 자재관리 시스템 등 FTA 활용 인프라 및 인력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2016년 56%, 2017년 58%로 상승하였는바, 앞으로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5.3.2> '17년도 협정별/기업규모별 수출활용률(%)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은 광산물(87.0%), 기계(81.2%), 플라스틱·고무(68.1%), 화학(64.4%) 등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중소기업 위주의 생활용품(60.5%), 농림수산물(55.2%), 섬유류(48.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3.3> '17년도 산업별 수출활용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의 FTA 활용 통계자료를 협정별·기업규모별·산업별로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 지원

활용촉진과 사무관 오규철, 김 석

총괄기획과 사무관 김재환

(1) 중소기업 FTA 활용 맞춤형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네트워크 확대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FTA 콜센터 1380을 통한 상시 상담, FTA 현장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한·중 FTA 특화 차이나데스크 운영,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Korea(제조업 원산지관리) 및 FTA-Agri(농업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이 있다.

FTA 콜센터 1380은 FTA 활용과 관련한 전문 상담을 위해 FTA종합지원센터 내에 2013년 6월 개통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0을 누르면 품목 분류, 협정문·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정보 등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2017년에는 FTA 콜센터 1380을 통해 총 22,781건(일평균 93.4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문의 사항별로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43.5%), 품목분류/관세율 문의(17.9%), 인증 수출자 문의(6.5%) 순이다. 업종별로는 화학/화장품(14.1%), 기계(13.7%), 전기/전자(8.0%) 순이며, 협정별로는 중국(34.8%), 아세안(16.4%), EU(9.6%) 순으로 집계되었다. FTA 콜센터는 그 간 지속적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기능을 확대하여 FTA 활용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정보, 금융 수출거래지원, 애로 지원 상담 등도 통합 서비스 할 수 있게 고도화하였고, 정책 수요자가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출지원 정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 콜센터 1380 이 외에 인터넷을 통한(www.fta1380.or.kr) 사이버 상담체계도 구축하였는데, 최근 체결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등 신규 FTA에 대한 정보 등을 즉시 게시하고, FTA 활용 관련 동향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FTA 활용 서비스 체계도 구축하였는데, 전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FTA 현장컨설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종합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림 5.3.4> FTA 콜센터 1380



국내 주요 산업단지와 업종별 단체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전문 관세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 증빙서류 유지 관리, 인증 수출자 취득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기업 만족도와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내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하여 한·중 FTA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화학융합연구원(KT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재산보호협회, 수출 전문위원, 전문관세사 등이 합동 근무하며 한·중 FTA 활용 특혜관세상담, 중국 상표·인증상담, 중국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FTA 활용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FTA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도 추진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중국 북경, 상해, 청도, 청두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광저우, 텐진, 다렌의 FTA활용 지원센터가 KOTRA 해외 무역관내 개소되었고, 2016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 2개소, 2017년 6월 콜롬비아 보고타,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2개소의 FTA활용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이들 센터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기 체결된 FTA를 홍보하고, 현지 자문단(71명)을 통해 현지진출기업 및 국내수출 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지방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서 전국 15개 시, 도에 설치된 17개 지역 FTA 센터와 13개 지역 차이나데스크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FTA 활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적인 인프라와 함께 FTA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 정보부족 해소 및 원산지 증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FTA-Korea(KT-NET) 등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FTA Korea 사용 기업 수는 13,901개사, 원산지 판정건수는 110,981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FTA 활용 지원을 추진하였다. 향후 영세기업용 기본형 원산지관리시스템 신규 개발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의 보급 확산과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FTA 활용 교육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FTA 전담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FTA 대학강좌 및 FTA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FTA 대학강좌 지원 사업은 한·중 FTA, TPP 등 거대시장과의 FTA가 발효되면 FTA 활용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대학생의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FTA 활용 기초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였다. 사업초기에는 FTA 강좌에 대한 대학 측의 관심제고와 저변확대에 주력하였다면, 2013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1.강좌자립역량강화(책임교수역량강화, 전문가 Pool구축, 대학자립의지 평가 등), 2.강좌 전문성 보강(표준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수준별·단계별 강좌, 현장연계 실습형 강좌 활성화 등), 3.사업프로세스개선(전담기관지정, 평가 및 환류체계, 강사 운영 기준 명확화 등), 4.사업운영내실화(강좌운영 인프라 보강, 현장소통 및 홍보강화,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FTA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표 5.3.1> 대학 FTA 활용 강좌 지원사업 현황('17.12월말 기준)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예산	500백만원	500백만원	500백만원	434백만원
운영대학수	22개 대학	22개 대학	24개 대학	20개 대학
개설강좌수	44개 강좌	44개 강좌	45개 강좌	44개 강좌
수강생수	2,561명	2,260명	1,910명	1,764명

또한, FTA 컨설턴트 양성사업은 무역 경험 10년 이상의 정부유관기관 수출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FTA 활용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 곧바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을 통해 557명의 FTA 활용 컨설턴트가 배출되어 현재 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표 5.3.2> FTA 컨설턴트 수료생 활동현황

(단위: 명)

구 분	FTA컨설턴트 (전문강사 포함)	기업취업 (자영업 포함)	기타 (비활동 포함)	합 계
2014	67명	23명	59명	149명
2015	25명	21명	26명	72명
2016(*)	158명	-	-	158명
2017	178명	-	-	178명
총	428명	44명	85명	557명

* 주) '15년까지 퇴직전문인력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16년부터는 현장에서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출전문위원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교육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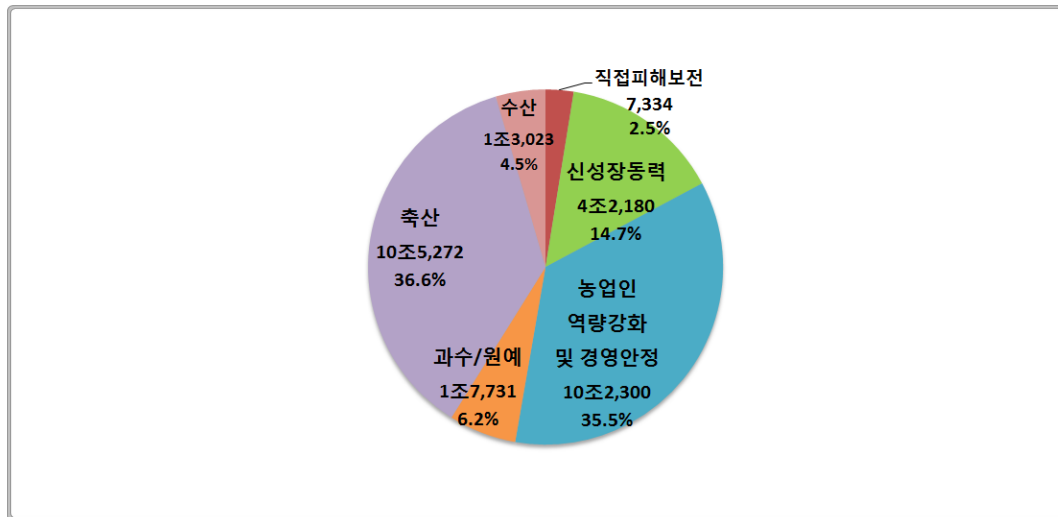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활용 확산을 위해 FTA 활용 컨설팅 뿐만 아니라 FTA 활용 설명회, FTA 활용 매뉴얼 제작 배포, 주요 전시회 홍보 부스 설치, 신문,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이 외 컨설팅 기업과 FTA 활용 유관기관의 정책지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활용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터 2017년까지 10년간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업분야 체질개선 등을 위해 24.8조원 규모의 재정이 집행되었고,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에 축산업 발전대책 8.8조원에 2조원이 추가된 규모의 재정이 지원될 계획이다. 2014년 9월에 수립된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의 경우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축산·재배 분야의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피해액 수준인 2.1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2015년 6월에 수립된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취약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1.7조원의 보완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총 40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2.7조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중 28.8조원이 집행되어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집행현황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된 분야별 예산은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등 직접피해보전 7,334억원(2.5%),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의 축산분야 10조 5,272억원(36.6%), 수산분야 1조 3,023억원(4.5%), 과수/원예분야 1조 7,731억원(6.2%) 등이며, 근본적 체질개선사업인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10조 2,300억원(35.5%), 신성장동력 창출 4조 2,180억원(14.7%) 등도 집행되었다.

<그림 5.3.6>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2008 ~ 2017년 합계, 억원)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은 4조 7,522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4조 1,782억원을 지원하여 87.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림 5.3.7>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A)	집행(B)	집행률(B/A)
합 계	47,522	41,782	87.9
직접피해보전	2,081 (농업 2,032+수산 49)	55 (농업 33+수산 22)	2.6
품목별 경쟁력 제고	21,268	18,986	89.3
- 축산분야	16,535	14,640	88.5
- 과수·원예분야	1,477	1,416	95.9
- 수산분야	3,256	2,930	90.1
근본적 체질개선	24,173	22,741	94.1
-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18,161	17,955	98.9
- 신성장 동력창출	6,012	4,786	79.6

세부 내용을 보면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적 피해 보전을 위해 55억원을 지원하였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인 도라지 농가에 직불금이 15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33억원이 지급되었고, 폐업지원금은 집행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다. 수산분야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 22억원이 집행되었고, 폐업지원금은 집행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분야 27개 사업에 1조 4,640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과수원예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개 사업에 1,416억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 수산분야 28개 사업에 2,930억원 등이 지원되었다. FTA 국내보완대책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성과분석 보고서¹²⁾에 따르면 이러한 2017년도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 결과,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확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48개 사업에는 2조 2,741억원이 지원되어 신규농업인력 육성, 농업 경영체 역량강화, 경영안정화, 영농 규모화, 생산기반조성, 친환경 농업육성, 식품산업육성, 종자산업육성, R&D 투자확대, 농식품수출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농업경영체의 역량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¹⁴⁾하였으며,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¹⁵⁾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¹⁶⁾ 등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경영

12)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2018.5, 농식품부) 및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2018.5, 해양수산부)

13) 구체적인 사례로 축산기술보급 정책의 시행으로 한우 1등급 출현율(%)이 54.0('08)→63.1('10)→65.0('14)→69.3('16)→72.0('17)로 증가하였고, 사업수혜농가의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는 2017년에 18.7두로 전국 평균 모돈 두당 출하두수(16.7두)보다 2.0두 높았으며, 젖소 두당 산유량(톤)도 9.66('08) → 9.93('10) → 10.01('12) → 10.02('14) → 10.36('16) → 10.45('17) 매년 증가하고 있다

14) 2017년 '컨설팅 전·후 매출액 증가율'은 29.0%로 목표율 100.7% 달성

15)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향상률'은 22.1%로 전년대비 1.4%p 상승

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농식품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도 점차 확대¹⁷⁾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났으며, 종자산업 육성 정책은 농업인의 종자 로열티 부담 경감, 우수품종 개발¹⁸⁾·생산·연구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동 기금은 2015월 11월,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 수혜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여 농어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2년 6월 발의되었으나 기술적·법리적 한계,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의결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2016년 4월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3개 법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FTA농어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동 관련 법률 개정안은 2016년 6월에 일부수정 발의되었고 2016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농어업·농어촌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금의 설치 근거, 운용 및 출연 주체, 조성액 목표 및 부족시 정부의 필요조치, 사업용도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 추가 등
- 조세특례제한법 : 기금에 대한 출연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10%)

16) ‘농기계 이용률’은 12.5일/대로 전년 대비 0.5일/대 상승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전년 대비 42개소 증가

17) GAP 재배면적(ha)은 58,768(‘14)→65,410(‘15)→88,859(‘16)→103,270(‘17)매년 증가하였고, GAP 인증농가(호)수도 46,323(‘14) → 53,583(‘15) → 74,973(‘16) → 86,091(‘17)매년 증가함

18) 2017년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62.1%로 전년 대비 11.1%p 상승하였으며, ‘기반구축 사업지구의 씨감자의 보급량’은 2017년에 2,512톤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목표치(2,350톤)를 106.9% 달성

2017년 3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업 관계자, 국회의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전담하여 관리·운용할 상생기금 운영위원회 및 운영본부를 출범시켰다.

상생기금 운영위원회 및 운영본부 출범 후 2018년 4월 현재,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총 325억 3,960만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조성된 상생기금은 △정주 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74.8억원),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공동협력사업(21억원),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23.4억원),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장학사업(5억원) 등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공동 협력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에 총 12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다.

4.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총괄기획과 사무관 윤태웅

(1) 제도개요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형태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의 무역 조정을 위하여 융자 및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형태와, 둘째,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소속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자동 지정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취업성공 패키지 등 실직 전·후의 단계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동 제도는 2006년 4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2007년 12월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한·EU FTA 및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요건인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피해를 2011년 9월에 25% 이상에서 20%이상으로, 2012년 1월에는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피해 접수·지원·조사·심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고, 무역조정계획서 등 제출해야할 서류도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바 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기업은 FTA 이행으로 인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0%이상 감소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기업은 시설자금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의 한도 내에서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1억 2천만원 한도로 상담(컨설팅)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자동으로 무역조정지원 근로자가 된다. 실직 전에는 전직 ·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며, 실직 후에는 취업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무역조정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강도가 높은 제Ⅰ유형이 적용된다.

(3) 지원실적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145개 무역조정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총 515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그중 융자로 504억 6천만원, 상담(컨설팅)으로 10억 4천만원을 지원 하였다.

<표 5.3.3>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신 청	3	3	2	0	13	31	27	21	24	40	164
지 정	2	3	2	0	8	24	26	17	24	39	145

<표 5.3.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융 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10,130	50,464
상 담	-	32	16	16	159	251	214	96	98	162	1,044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94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실직근로자 522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심리검사, 실업급여 등 2,330건에 대하여 총 19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5.3.5>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명, 건, 천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근로자 지원	지원 기업 수	3	2	3	11	28	43	48	66	94
	지원 근로자 수	19	5	9	35	138	166	146	210	522
	지원건수	37	19	35	78	483	451	514	713	2,330
	지원액	3,094	14,794	24,845	44,130	377,962	416,955	432,366	653,696	1,967,842
사업주 지원	지원 기업 수	-	1	1	1	1	-	-	1	1
	지원 근로자 수	-	1	2	3	11	-	-	5	20
	지원건수	-	2	2	13	11	-	-	5	33
	지원액	-	685	2,066	11,357	6,099	-	-	5,238	25,445

5. FTA 대국민 홍보 및 이해도 제고

홍보협력과 사무관 김기남, 이만수. 홍원주
홍보협력과 주무관 차찬석

(1) 대국민 FTA 정책홍보

FTA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간행물 발간 및 계기별 정책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월간 ‘함께하는 FTA’는 2012년 6월부터 발간해온 정부 간행물로서 FTA 정책 동향, 농어업 및 중소기업 FTA 활용 우수사례, 산업현장의 목소리, FTA 활용 실무 등 국민 체감형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월간지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표 5.3.6> ‘함께하는 FTA’ 개요

(단위:건)

구 분	내 용
제작형태/부수	월간지(44면), 2012.6월 창간/3.3만부
제작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내용	FTA 정책동향, 이슈분석, FTA 활용정보 등
배포처	정부, 공공기관·유관기관, 수출업체, 도서관, 은행·우체국 각 지점 등 3.3만여 곳

아울러, FTA 공식 홈페이지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를 통해 FTA 협정문 전문을 비롯한 정책 발표 보도자료 및 각종 참고자료, 홍보콘텐츠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협정국(미국, 중국, EU, 한중일, RCEP)¹⁹⁾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FTA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견 제출 창구 및 1380 인터넷 상담센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380)를 통해 FTA 뿐만 아니라 수출지원사업 정보까지 안내 받아 담당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도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간 우호협력 증진을 다짐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기념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미얀마 상무부장관, 라오스 외교부장관, 아세안사무국 사무차장, 주한아세안대사, 아세안회원국 정부관계자, 기업인 및 아세안지역 근로자 300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10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협력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 하였다.

19) 미국: www.fta.go.kr/us, 중국: www.fta.go.kr/cn, EU: www.fta.go.kr/eu, 한.중.일: www.fta.go.kr/cnjp, RCEP: www.fta.go.kr/rcep

<그림 5.3.8>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행사



이 날 행사에는 양 지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우호 증진에 힘쓴 유공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와 자원봉사활동 등을 담은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 청소년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후 경제협력 세미나와 투자설명회를 통해 아세안의 성장잠재력과 중요성도 환기시켰다.

2017년 연말에는 높아진 통상 현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청년 토론 문화 배양 및 취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제1회 대학생 통상 정책 토론포럼 및 무역·통상 잡 페어”를 개최하였다.

<그림 5.3.9>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포럼



토론포럼을 미래 우리경제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 통상 현안·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청년 토론 문화를 배양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무역·통상·해외 취업 잡 페어를 연계하여 국내 글로벌 기업, 관련 공기업,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에 함께한 모든 학생들은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3.10> 무역·통상 잡페어



(2) 찾아가는 FTA 교육 및 해외설명회

정부는 선진통상국가를 구현하고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교원·기업 실무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09년부터 다양한 FTA 관련 교육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FTA 교육 수요의 다양화 및 증가 추세로 인해 교육 대상을 선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FTA 일반·법제교육'을 실시하였고, '13년 4,130명, '14년 4,137명, '15년 3,833명, '16년 4,295명, '17년 6,9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동시에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13년 6,815명, '14년 7,650명, '15년 8,396명, '16년 8,410명, '17년 8,5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5.3.7> FTA교육 추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업 실무자	6,815	7,650	8,396	8,410	8,531
공무원·일반인	4,130	4,137	2,693	4,435	6,966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체결 상대국 현지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찾아가는 FTA해외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발효('16.7.15.) 1주년, 한-아세안 10주년 계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 등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파나마와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거대 선진 경제권은 물론 신흥시장 국가와의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FTA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 기업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원산지 관리, 수출입통관

절차, 사후관리 등 FTA 실무능력 배양을 지원하여 현지 수입업자의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FTA 협정의 발효 및 발효예정 국가, FTA 활용도가 낮은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기업인들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증진시켰다.

<표 5.3.8>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 활동 현황

연 도 별	해외설명회 개최지역
2010(7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뉴델리, 뭄바이)
2011년(9회)	스페인, 헝가리, 미국(LA), 루마니아, 폴란드,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페루
2012년(14회)	미국(뉴욕, 디트로이트, LA, 시카고),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2013년(6회)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콜롬비아, 페루
2014년(1회)	호주(시드니, 멜버른)
2015년(5회)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2016년(2회)	뉴질랜드(오클랜드), 호주(시드니)
2017년(4회)	콜롬비아(보고타), 파나마(파나마시티),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또한, 2014년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FTA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FTA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FTA 활용지원 대책에 반영하였다. 2017년에는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FTA 활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실제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FTA 활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 정부-민간 간 소통협업 강화

총괄기획과 사무관 박정원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2007년 5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발족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2013년 3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4년

3월 위원회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추가 구성하는 등 동 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통상조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개편하였다.

동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청 차관급인 정부위원과 경제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2018년 4월말까지 총 3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 등이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경제국과의 FTA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FTA 체결지원과 관련한 심의 수요가 크게 약화되고 FTA의 성과평가, 제도개선 효과, 활용촉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새로운 수요를 뒷받침하고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7년 11월 정부와 민간 간 긴밀한 소통, 분야별 실무협의,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실무조직으로서 성과평가 분과, 제도개선 분과, 활용홍보 분과 등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2월까지 분과별로 두 차례의 분과위를 개최하였다.

(2) FTA 활용 기업간담회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그 간 미국, EU, 중국 등 경제대국을 포함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FTA 시장규모가 GDP 기준으로 77%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FTA가 확대된 만큼 국가별로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고충도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었다. 통상국내정책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해 2013년부터 FTA콜센터1380,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애로상담, 현장 컨설팅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섬유·생활용품 등 영세 업종의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기존 지원과 병행하여 2016년 6월부터 업종별 FTA 활용 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하여 기업의 FTA 활용 애로 파악 및 해소, 지원정책 안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에는 15개 업종, 31개 협·단체, 190개 기업 등을 접촉하여 111건의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소관부처 이첩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8년에는 지역·대상을

보다 확대·다양화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FTA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

(3)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협·단체와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산업별 FTA 관련 이슈 및 정책을 공유하고, FTA 이행·활용 애로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 장으로서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매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FTA 활용과 이행을 총괄하는 통상국내정책국과 FTA정책국이 분기마다 교차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부 록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te Paper

'17.5월

- 5. 8~12 ● RCEP 제18차 공식협상(필리핀)
- 5. 19 ● 제 365차 무역위원회
- 5. 20~21 ● 제23차 APEC 통상장관회의(베트남)
- 5. 22 ● RCEP 회기간 장관회의(베트남)
- 5. 22~26 ● 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

'17.6월

- 6. 1 ● 한-콜롬비아 FTA 제1차 공동위원회
- 6. 1 ●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식
- 6. 7 ● 민관합동 미국 수입규제 대응 회의
- 6. 8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 6. 9 ● 한-콜롬비아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 6. 12 ● 한-중미 FTA 해외 설명회
- 6. 12~14 ● 한-EU FTA 이행위원회
- 6. 13 ● 제33차 통추진위원회 실무회의
- 6. 14 ● 벨기에 공주 방한
- 6. 14 ● 철강 수입규제 TF 긴급점검 회의
- 6. 20 ● 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회의
- 6. 27 ● 제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6. 27~28 ● 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6. 29~30 ● 한-미 정상회담
- 6. 30 ● 정밀화학업종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17.7월

- 7. 5 ● '17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 7. 6 ●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7. 7 ● 제4차 한EU FTA 무역구제 협력작업반
- 7. 11 ● 제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 7. 13 ● USTR,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요청 서한 발송
- 7. 13 ● 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
- 7. 17 ● 제 366차 무역위원회
- 7. 19 ● 무역위상임위원,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차관면담
- 7. 21 ● 산업부 장관, USTR 서한 답신 발송
- 7. 24~28 ● RCEP 제19차 공식협상

'17.8월

- 8. 14 ● 미국, 중국 지재권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 8. 21~23 ● 제16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
- 8. 22 ● 제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 8. 25 ● 제 367차 무역위원회
- 8. 28 ● 제18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 8. 30 ● 외국인투자기업 업계간담회 개최
- 8. 31 ● 산업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쿠티카로프 부총리 면담
- 8. 31 ● 주한 EAEU 대사단 간담회 개최

'17.9월

- 9. 1 ● 中 동북아박람회 참석
- 9. 1 ● 주한외국상의 관계자 간담회 개최
- 9. 1 ●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 9. 5 ● 한·인도네시아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
- 9. 6 ● 한·베트남 FTA 설명회 개최
- 9. 6~7 ● 제3차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시아 정상회담
- 9. 8~10 ● 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필리핀)
- 9. 13 ●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 개최
- 9. 14 ● 제 368차 무역위원회
- 9. 14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9. 15 ●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9. 15 ● 대중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 9. 16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 9.18~20 ●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투자유치활동(IR) 추진
- 9. 20 ●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D.C.)
- 9. 20~21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3차 개선 협상 개최
- 9. 21 ● 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제안 서한 발송
- 9. 21 ● 제21회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 9. 22 ● 프랑스 경제재정부 정무장관 방한
- 9. 23 ●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 개최
- 9. 26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9. 28 ●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

'17.10월

- 10. 2 ● 제19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10. 4 ●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 10. 9~10 ● 마라케쉬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 10.12 ● 2017년 3분기(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 10.12~13 ● 2017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10.17 ●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첫 개최
- 10. 19 ● 제 369차 무역위원회

- 10. 20 ●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협의회 개최
- 10. 23~27 ● 한-중미 FTA 제1차 협정문 최종점검 회의(서울)
- 10. 24~28 ● RCEP 제20차 공식 협상
- 10. 27 ● 제1차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
- 10. 27 ● RCEP 16개국 협상대표단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10. 31 ● 체코 상원의장 방한

'17.11월

- 11. 3 ● 제19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11. 3 ● 2017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 11. 6 ●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서울)
- 11. 7 ● 제17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 11. 8 ● 외국인투자주간 2017 개막 및 주요 외투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
- 11. 8 ● APEC 각료회의 계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
- 11. 10 ● 한미 FTA 개정관련 제 1차 공청회 개최
- 11. 14 ● 일본 외투기업과 투자유치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1. 16 ● 제 370차 무역위원회
- 11. 18 ● 2017 대학생 통상 정책 토론회 및 잡 페어 개최
- 11. 21 ● 제1차 중국계 투자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 11. 22-25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 11. 22 ●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11. 22 ● 한미 FTA 개정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 11. 23 ● 한미 FTA 개정관련 제조업계 간담회 개최
- 11. 23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11. 27 ● 산업부 장관 영국 방문
- 11. 27 ● EU 주요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11. 28 ● 제2차 한불 경제장관 대화
- 11. 29~30 ● 제16회 한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제24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개최
- 11. 30 ● 산업부 장관 체코 방문
- 11. 30 ● 제 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11. 30 ● 한미 FTA SPS 위원회(서울)

'17.12월

- 12. 1 ● 한미 FTA 전문직서비스 작업반(서울)
- 12. 1 ● 한미 FTA 개정관련 제 2차 공청회 개최
- 12. 4 ●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 12. 5 ● 한-터키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 12. 6 ● 제2차 중국계 투자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 12. 7 ● 외투기업 송년만찬 간담회
- 12. 7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 12. 14 ● 산업부-中 국가에너지국 장관 면담
- 12. 14 ● 산업부-中 공업신식화부 장관 면담
- 12. 15 ● 산업부-中 상무부 장관 면담

- 12. 6 ● 제196차 대외경제장관회의(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 의결)
- 12. 9 ● 한-중미 FTA 제2차 협정문 최종점검 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
- 12. 10 ● 제11차 WTO 각료회의(부에노스 아이레스)
- 12. 10~13 ● 한-메르코수르 고위급 회담 개최(부에노스 아이레스)
- 12. 12~13 ● 한-영 무역작업반 제2차 회의
- 12. 14 ● 한미 FTA 무역구제위원회
- 12. 14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 MOU 체결
- 12. 18 ● 한미 FTR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 12. 19 ● 제17차 한중·무역구제 협력회의
- 12. 20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4차 개선 협상 개최
- 12. 20~21 ●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 12. 21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공고
- 12. 21 ● 제4회 한-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12. 21 ●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 12. 22 ● 제 371차 무역위원회
- 12. 27

'18.1월

- 1. 3 ●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 1. 5 ● 한미 FTA 제 1차 개정협상 개최
- 1. 5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 1. 12 ●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공청회
- 1. 18 ● 제 372차 무역위원회
- 1. 19 ● 제7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1. 23 ● 美 세탁기 · 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1. 26 ● 다보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 1. 26 ● 외국인투자기업 현장방문(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 1. 29 ● 제1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1. 29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무역협회 공동)
- 1. 31 - 2.1 ● 한미 FTA 제 2차 개정협상 개최

'18.2월

- 2. 2 ●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FTA 제2차 공동위원회
- 2. 5~9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1차 공식협상
- 2. 7 ● '2018년 1/4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 2. 8 ● 독일 대통령 방한
- 2. 8 ● 폴란드 대통령 방한
- 2. 12 ●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
- 2. 1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 2. 14 ● 한-라트비아 비즈니스 포럼
- 2. 20 ●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 2.20~27 ● 2018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 2. 21 ● 한(산업부)-코스타리카(대외무역부) 무역투자협력 MOU 체결

- 2. 21 ● 한-중미 FTA 정식 서명
- 2. 21 ●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서울)
- 2. 23 ● 덴마크 산업부 장관 방한
- 2. 27 ● 산업부장관, 인도방문
- 2.28~3.2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 추진

'18.3월

- 3. 3 ● RCEP 회기간 장관회의 참석
- 3.5~8 ● 산업부 장관 방미(상무장관 회담 등 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 면담)
- 3. 6 ● 한중 FTA 후속협상 대비 서비스 분야별 1차 간담회(의료)
- 3. 6 ● 중앙아시아 주요국 에너지 · 자원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 3. 7 ●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1차 후속협상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 3. 12 ●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3.12 ● 2018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마련
- 3. 13 ● 제3차 한베트남 FTA 이행위원회
- 3. 13~15 ● 한-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 개최
- 3. 14 ●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교류회의 개최
- 3. 15 ●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D.C.)
- 3. 15-16 ● 한미 FTA 제 3차 개정협상 개최
- 3. 19~20 ● 인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 3. 21~22 ● 한중 FTA 이행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
- 3. 22 ● 미국, 對중국 301조 조사결과 발표
- 3. 22 ● 제 373차 무역위원회
- 3. 22 ● 제 374차 무역위원회
- 3. 22~23 ●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1차 후속협상
- 3. 22~3. 28 ● 베트남 · UAE 순방
- 3. 23 ● 미국, 중국 지재권제도 WTO 제소
- 3. 23 ●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D.C.)
- 3. 26 ● 통상교섭본부장 협상결과 기자회견
- 3. 27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 3. 28 ● 한미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 발표
- 3. 28 ●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회담
- 3. 29 ● 제2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
- 3. 30 ●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 3. 30 ● 제10차 FTA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18.4월

- 4. 3 ● 미국, 1,333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리스트(500억불 규모) 발표
- 4. 4 ● 중국, 106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리스트(500억불 규모) 발표
- 4. 4 ● 20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 4. 4 ●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지원 1차 설명회 개최
- 4. 5 ● 중국, 232조 조치 및 301조 조치에 대한 WTO 제소
- 4. 5 ● 미국, 1,000억불 규모 추가관세 부과 검토 지시

- 4. 6 ● 미국 셰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 4. 9 ●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 4. 9~12 ● UAE(두바이, 아부다비)·쿠웨이트 투자유치활동 개최
- 4. 10 ● 시진핑 보아오 포럼 연설 (자동차 관세인하, 지재산 보호 등 약속)
- 4. 11 ● '2018년 2/4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 4. 11 ● 2018년 제1차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4. 12 ●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승소
- 4. 12~13 ● 2018년도 FTA활용지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4. 18~19 ● 한중 FTA 후속협상 대비 중국 현지 기업간담회
- 4. 18-20 ● 한미 FTA 분야별 문안협의(워싱턴 D.C.)
- 4. 18 ● 미국 현지 지상사 간담회
- 4. 18 ● 미국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뉴욕)
- 4. 19 ● 주미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 4. 19 ● IDB 총재 면담 및 한(산업부)-IDB 에너지협력 MOU 체결
- 4. 19 ●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포럼 개최
- 4. 20 ● USITC 위원장 면담
- 4. 20 ● 무역정책협의회 개최
- 4. 23 ● 한·미 산업장관회담
- 4. 23 ● USTR 대표 면담
- 4. 24 ● 한미 FTA 개정협상 법률검토 회의(워싱턴 D.C.)
- 4. 25 ● 한중 FTA 후속협상 대비 서비스 분야별 2차 간담회(법률·회계)
- 4. 26 ● 제375차 무역위원회
- 4. 27 ● 제3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 통상편 -

- 발행일 2018년 5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www.motie.go.kr |
- 제 작 (주)나모기획 044-998-699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지, 상업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